

KINU 연구총서 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KINU 연구총서 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 성 훈

미국의 對韓 해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인 쇄 2012년 10월

발 행 2012년 10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ISBN 978-89-8479-657-7 9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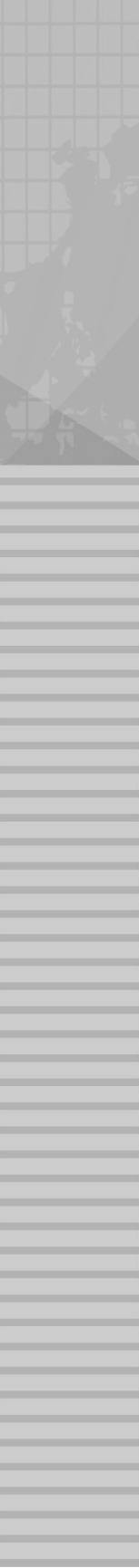
가 격 ₩14,000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xi
I. 서론	1
II. “억지”(Deterrence)에 대한 개념적 분석	11
1. 억지의 종류	14
2. 관련 개념	28
III. 북한의 핵능력	33
1. 플루토늄 생산능력	37
2. 플루토늄 핵탄두 보유수	38
3. HEU 생산능력	43
4. HEU 핵탄두 규모와 신형 핵탄두 가능성	63
5. 3차 핵실험 가능성과 전략	79
6. ‘핵보유국 북한’ 호칭을 둘러싼 논란	84
IV. 실제적인 북한의 핵위협	97
1. 정치·심리적 위협	99
2. 군사적 위협	117
V. 미국의 對韓 핵우산: 기원과 발전과정	123
1. 핵우산의 법적 근거와 평가	125
2. 對韓 핵우산의 발전과정	128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VI. 미국의 對北 안전보장 공약	141
1. 부시(George H.W. Bush) 행정부	143
2. 클린턴 행정부	145
3.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150
4. 오바마 행정부	156
VII. 오바마 행정부의 핵·역지 전략	161
1.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NPR)	163
2.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171
3. 맞춤형 확장역지 전략	180
VIII. 對韓 핵우산의 신뢰성 제고방안	185
1. 고려사항	187
2. 핵우산정책의 신뢰성 제고방안	218
참고문헌	243
부록	261
최근 발간자료 안내	309

표·그림 목차

<표 III-1>	주요 요소별 북한의 예상 핵능력 (2012년 6월 현재)	36
<표 III-2>	초급 기술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 (2012년 6월 현재)	40
<표 III-3>	중급 기술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 (2012년 6월 현재)	41
<표 III-4>	Estimated Possible Stocks of WGU, through 2011	71
<표 III-5>	Total Fissile Material Stocks, end of 2011	72
<표 III-6>	Projected Maximum Cumulative Stocks of WGU Produced 2012~2016	74
<표 III-7>	Mid-Range Estimates of Cumulative Nuclear Weapons Equivalents	75
<그림 III-1>	핵연료제조공장 2009년과 2001년 비교 위성사진	66
<그림 III-2>	원심분리기가 들어선 핵연료제조공장의 제4빌딩 3-D 모델	66
<그림 III-3>	핵연료제조공장 내 원심분리기 시설 Cascade 조감도(추정)	67
<그림 III-4>	증폭 핵탄두 설계 모형	78
<그림 VIII-1>	핵폐기 대상국가의 받는 위협과 주는 위협의 상관관계 비교	192
<그림 VIII-2>	남·북한·미국 안보 삼각구도의 변화 가능성	195
<그림 VIII-3>	조건부·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224

부록 목차

KINU 연구총서 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부록 1. 조·미 공동성명(1993.6.11)	263
2. 조·미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문, 1994.10.21)	265
3.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1999.10.12)	270
4. 조·미 공동 코뮤니케(2000.10.12)	293
5.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 2005.9.19)	297
6.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합의사항 (2·13 합의, 2007.2.13)	300
7.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합의사항 (10·3 합의, 2007.10.3)	304
8.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 전술핵 재배치 관련 부분	307

약어 정리

ABM조약	전략탄도미사일요격체계 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BDA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MDR	탄도미사일방어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CFC	연합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CIA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CTBT	핵실험 전면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원칙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EDPC	확장억지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END	확장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GSOMIA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HEU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IAEA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DA	미국 국방연구원(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I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SIS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IDA	한국 국방연구원(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KIDD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LEU	저농축우라늄(Low Enriched Uranium)
MD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L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CND	해외에 있는 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 (Neither Confirm Nor Deny)
NPR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T	핵무기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RDC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SA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C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PG	핵전략계획그룹(Nuclear Strategic Planning Group)
NTM	국가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ODNI	미국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QDR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RMA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TDA	지역맞춤형 억지체계(Regionally Tailored Deterrence Architecture)
SAC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
SAWG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Strategic Alliance 2015 Working Group)
SCM	연례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NDV	전략핵운반체계(Strategic Nuclear Delivery Vehicle)
SORT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
SPI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TRATCOM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
TLAM-N	전술핵탑재 해상발사 토마호크미사일 (the Tomahawk, nuclear-equipped, sea-launched cruise missile)

약어 정리

TNCC	3국 핵자문회의(Trilateral Nuclear Consultative Committee)
TTX	확장역지수단운용연습(Table Top Exercise)
UEP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UF6	6불화우라늄(Uranium Hexafluoride)
USJFCOM	합동군사령부(United States Joint Forces Command)
WGU	무기급 우라늄(Weapon Grade Uranium)
WMD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요 약

“핵안보”(Nuclear Security)란 민감한 핵물질이 원자력의 발전이나 연구를 위한 시설에서 불법 유출되어 핵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활동을 총칭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핵물질과 핵기술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의도적인 전용을 막는 핵안보의 취지와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더 적절한 표현은 “핵물질보안”(Nuclear Material Security)이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핵억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정확하게는 “확장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END)라고 부른다. 핵우산은 적대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자국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까지 억지하겠다는 미국의 대외 안보공약의 토대이며 군사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수사적인 핵위협은 물론 실제 군사도발 위협이 점증하고 우리 사회에서 자체 핵무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핵우산정책의 신뢰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전제이다. 이런 전제에 입각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타당한 정책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핵우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학술적 개념과 역사적 맥락을 검토·분석하여 학술적·정책적 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이해를 제고해서 국민적 단합과 국론통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억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억지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억지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개념도 소개해서 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토론을 위한 합일된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제Ⅲ장에서는 핵우산이 겨냥하는 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핵능력을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분석했다. 이 장에서는 특히 북한이 복수의 핵탄두를 이용한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3차 핵실험 이후 전개할 새로운 핵전략도 예상했다. 아울러 ‘핵보유국 북한’이란 호칭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을 정리했다.

제Ⅳ장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이 한국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핵위협을 크게 정치·심리적인 위협과 군사적인 위협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했다. 제Ⅴ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먼저 핵우산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핵우산

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했고, 1978년부터 현 시기에 이르기까지 對韓 핵우산 정책의 발전과정을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제Ⅵ장에서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 이후 오바마 행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 행정부의 대북한 안전보장 공약을 분석했다.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은 한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다. 제Ⅶ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핵전략과 억지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했다.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한 비핵국에 대한 무조건 안전보장을 약속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R)는 對韓 핵우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러시아와 합의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역시 핵무기의 중요성을 줄이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제시된 “맞춤형 확장억지”(Tailored Extended Deterrence)는 동맹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확장억지의 내용과 수단을 재단한다는 전략으로서,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는 한국이 핵우산의 신뢰성 제고를 요청하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제Ⅷ장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對韓 핵우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방안수립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했는데, 미국의 재래식 확장억지가 꾸준히 변화해왔다는 것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야기하는 딜레마는 결국 억지이론상의 “중심축억지”(Pivotal Deterrence)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핵무장 관련 논의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전술핵 재배치 관련 논의

를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 국방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확장역지 제고에 관한 연구결과와 2011년 출범한 한·미 확장역지정책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핵우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미국의 對韓 핵우산은 핵역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과 주한미군 전술핵의 조건부·한시적 재배치를 북핵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건부·한시적’이란 전술핵 재배치를 카드화하여 북핵폐기협상을 추진하되 협상이 일정한 시한 내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북핵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배치한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 한·미, 한·미·일 핵자문회의를 활성화해서 핵역지 전략과 태세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억지전략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억지전략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확장역지정책위원회가 현 상태에 머물지 말고, 그 위상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해서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對韓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조정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어: 핵우산, 핵역지, 확장역지, 북한 핵문제, 한·미 동맹, 북·미 관계

Abstract

South Korea and the U.S. Nuclear Umbrella

Cheon, Seongwhun

North Korea's constant threats of nuclear and bold military attacks against South Korea has triggered domestic debates in the South regarding how to effectively counter the North's intimidations. A range of options are under consideration from launching an indigenous nuclear weapons program to redeploying American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It is time to accept these domestic debates seriously and to provide sound alternative policies to allay concerns of the pro-nuclear viewers.

It does not serve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to develop nuclear weapons on its own. There are many reasons why Seoul must maintain the current non-nuclear policy--a solid commitment of using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Instead, Seoul and Washington must work together to enhance extended deterrence in general and extended nuclear deterrence (nuclear umbrella)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s literatures on deterrence and summarizes key concepts useful to understand issues related with nuclear umbrella. Then, it overviews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in two categories--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and a possibility of a third nuclear test. And, it is argued that these capabilities are transformed into political, psychological, and military threats to South Korea. It also examines the history of the U.S. nuclear umbrella to South Korea and the meaning of American security guarantees to North Korea. The current Obama administration's new nuclear posture is highlighted. Finally, five policy measures are presented to enhance American nuclear umbrella to South Korea: ① to meet criteria of successful nuclear deterrence; ② to use re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as a bargaining chip to facilitate negotiating away North Korean nuclear arsenals; ③ to activate Seoul-Washington-Tokyo nuclear consultative meetings; ④ to be faithful to the basics of deterrence theory and practice; and ⑤ to insure substantiality of the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EDPC).

Key Words: Nuclear Umbrella, Nuclear Deterrence, Extended Deterrenc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ROK-U.S. Alliance, DPRK-U.S. Relations

I. 서론

미국의 對韓 優待 政策 에 關한 연구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핵억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정확하게는 “확장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END)라고 부른다. 핵우산은 적대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자국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까지 억지하겠다는 미국의 대외 안보공약의 토대이며 군사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핵우산은 억지전략의 보호대상이 미국에서부터 동맹국으로 확대되고, 보복수단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까지 포함하며, 보복능력의 투사지역도 미 본토에서부터 동맹국 영토로까지 확장되는 의미를 갖는다.

핵우산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억지의 보호대상에 미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도 포함된다. 서독을 포함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동맹국들과 아시아에서는 한국·일본·호주가 핵우산의 구체적인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왔다. 둘째, 억지의 목표는 적대국의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을 포괄한다.¹ 셋째, 억지의 수단에는 미국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포함된다. 결국 핵우산은 확장핵억지의 별칭인 셈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핵우산 대신 확장억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두고 우리

¹ 단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한 비핵국가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핵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Ⅷ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군 일각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된 해석이었다.²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11년 초부터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핵무장 옵션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어왔다. 현재 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비핵정책’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는 미국의 확장핵억지, 즉 핵우산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사회의 자체 핵무장 주장은 국가 정책에 배치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북한 핵에 대한 국민적 위협 인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핵무기의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핵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게 만들었고, 핵우산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그 자체로 핵무장 여론을 부추기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한편 미 하원군사위원회는 2012년 5월 9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군사도발에 대응해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채택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불필요하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구를 한 것이다. 북핵협상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안전보장조치를 주문하는 현상 역시 미 의회 차원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

²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52~53.

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북한의 수사적인 핵위협은 물론 실제 군사도발 위협이 점증하고 우리 사회에서 자체 핵무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핵우산정책의 신뢰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전제이다. 이런 전제에 입각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타당한 정책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시한 방안 가운데는 일견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방안인 만큼 진지하게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퍼그워시회의”(Pugwash Conferences)를 이끌었던 로트블랫(Joseph Rotblat) 교수는 그의 친구였던 러셀(Butrand Russell)의 다음 명언을 자주 인용하면서 용기를 갖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할 것을 독려했다.³

괴상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통용되는 모든 의견이 처음에는 괴상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³- 원문은 다음과 같다: “Do not fear to be eccentric in opinion, for every opinion now accepted was once eccentric.” “Nuclear warfare: conscientious objector,” *The Economist*, March 31, 2012.

I
II
III
IV
V
VI
VII
VIII

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비핵정책과 한·미 동맹이라는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對韓 핵우산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우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학술적 개념과 역사적 맥락을 검토·분석하여 학술적·정책적 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이해를 제고해서 국민적 단합과 국론통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억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억지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억지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개념도 소개해서 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토론을 위한 합일된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제Ⅲ장에서는 핵우산이 겨냥하는 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핵능력을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분석했다. 이 장에서는 특히 북한이 복수의 핵탄두를 이용한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3차 핵실험 이후 전개할 새로운 핵전략도 예상했다. 아울러 ‘핵보유국 북한’이란 호칭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을 정리했다.

제Ⅳ장에서는 앞장에서 소개한 북한의 핵능력이 한국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핵위협을 크게 정치·심리적인 위협과 군사적인 위협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했다. 제Ⅴ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먼저 핵우산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핵우산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했고, 1978년부터 현 시기에 이르기까지 對韓 핵우산 정책의 발전과정을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정리

했다.

제VI장에서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 이후 오바마 행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 행정부의 대북한 안전보장 공약을 분석했다. 한국과 동맹인 미국이 한국의 적대국인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안보약속과는 상치될 수 있다는 점이 늘 지적되어 왔다.⁴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은 한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다. 제VII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핵전략과 억지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했다.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한 비핵국에 대한 무조건 안전보장을 약속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R)는 對韓 핵우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러시아와 합의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역시 핵무기의 중요성을 줄이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제시된 “맞춤형 확장억지”(Tailored Extended Deterrence)는 동맹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확장억지의 내용과 수단을 재단한다는 전략으로서,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는 한국이 핵우산의 신뢰성 제고를 요청하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제VIII장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對韓 핵우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방안수립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

4.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Cheon Seongwhun, “Changing Dynamics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Pacific Focus*, Vol. XXVI, No. 1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Inha University, 2011), pp. 39; 48~50.

I
II
III
IV
V
VI
VII
VIII

토했는데, 미국의 재래식 확장역지가 꾸준히 변화해왔다는 것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야기하는 딜레마는 결국 억지이론상의 “중심축억지”(Pivotal Deterrence)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핵무장 관련 논의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전술핵 재배치 관련 논의를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 국방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확장역지 제고에 관한 연구결과와 2011년 출범한 한·미 확장역지정책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핵우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미국의 對韓 핵우산은 핵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과 주한미군 전술핵의 조건부·한시적 재배치를 북핵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건부·한시적’이란 전술핵 재배치를 카드화하여 북핵폐기협상을 추진하되 협상이 일정한 시한 내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북핵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배치한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 한·미, 한·미·일 핵자문회의를 활성화해서 핵억지 전략과 태세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억지전략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억지전략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군 일각에서 북핵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선제공격은 상대의 1차 공격을 감수한다는 (핵)억지전략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더 나아가 억지전략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핵우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확장역지정책위원회가 현 상

태에 머물지 말고, 그 위상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해서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對韓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조정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I. “억지”(Deterrence)에 대한 개념적 분석

“Deterrence”는 우리말로 억지(抑止) 혹은 억제(抑制)로 번역할 수 있다. 북한당국과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억제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억제는 “일정한 정도나 한도를 넘지 않도록 눌러서 그치게 한다”는 의미로서,⁵ 개인의 욕망이나 감정 따위를 억누른다는 뜻에 적합한 표현이다. 즉 대상의 규모가 작고 감성적인 문제에 적절한 번역이지만 한 나라의 군사안보전략에 대한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통상 국제안보와 군사전략 분야에서는 “deterrence”를 억지로 번역하고 있으며,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억지로 가르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사용하는 “핵 억제력”이란 표현을 원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억지’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억지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를 조종하려는 계획적인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⁶ 이 장에서는 억지에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소개해서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편의상 영문 스펠링 순서대로 정리했다. 억지에 대해서는 폴(T.V. Paul) 등의 저서를 기본으로 삼았고,⁷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출처를 별도로 명시했다. 억지에 관련된 개념은 억지 이론과 전략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주요 개념들로서 여러 문헌을 토대로 정리했다.

⁵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92), p. 2297.

⁶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Malden, MA: Polity Press, 2004), p. 6.

⁷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I
II
III
IV
V
VI
VII
VIII

1. 억지의 종류

- <Basic Deterrence, 기본억지>: 자국 방어용 억지를 뜻하며 동맹에 대한 방어를 약속하는 확장억지에 상대되는 개념이다.⁸
- <Central Deterrence, 중심억지>: 칸(Herman Kahn)이 구분한 세 가지 형태의 억지 가운데 초강대국 간의 핵전쟁이 억지되는 상황을 말한다.⁹
- <Contracted Deterrence, 수축억지>: 강대국이 억지의 대상과 범위를 동맹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지 않고 핵심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억지의 역할을 제한하는 상황이다.¹⁰
 - 확장억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Damage Limitation, 피해제한>: 상대방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전력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에 주는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력이 사용되기 전에 파괴하는 개념이다.¹¹

⁸- Timothy Crawford, “The Endurance of Extended Deterrence: Continuity, Change, and Complexity in Theory and Practic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283

⁹-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p. 35. 칸은 억지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① Type I(초강대국간의 핵전쟁), ② Type II(초강대국의 동맹국이 연루된 재래식 혹은 전술핵 전쟁), ③ Type III(기타 대부분의 전쟁상황).

¹⁰- *Ibid.*, p. 36.

¹¹- Hans M. Kristensen, “Obama and the Nuclear War Plan,” *Federation of The American Scientists Issue Brief*, February, 2010, p. 11, <<http://www.fas.org/>

- <Deterrence, 억지>: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확전을 시켜서 전쟁을 시작한 측에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전쟁을 막는 개념이다.¹²
 - 억지는 상대를 “강압”(coerce)하거나 “강제”(compel)하는 것이 아니라 “단념”(dissuade)시키는 힘이다.¹³
 - 억지는 특정 문제에서 “무활동”(inaction)에 가치를 부여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자가 상대방을 억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 즉 기대되는 이익보다는 비용이 클 것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때 상대방에게는 무활동이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억지는 능력의 증대와 구체적인 메시지가 결합해서 형성된다. 즉 상대가 특정한 행동을 취하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겠다는 것이다.¹⁴
 - 억지를 시도하는 나라의 보복위협은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성공할 수 있다: ① 수용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 즉 레드 라인을 분명히 설정함(setting red-line), ② 상대방에게 레드라인을 위반할 때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함(communicating will), ③ 도발을 감행한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단(능력)을 보유함(possessing capability), ④상대방이

blog/ssp/>.

¹²- Patrick Morgan, “Collective-Actor Deterrenc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160.

¹³- Glenn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 9.

¹⁴- Ivan Arreguin-Toft, “Unconventional Deterrence: How the Weak Deter the Strong,”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208.

I
II
III
IV
V
VI
VII
VIII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할 경우 보복위협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함(demonstrating resolve).¹⁵

- 억지의 일반적인 목적은 위협적인 행동을 환원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억지의 대상에게는 억지경고를 무시했을 경우의 위협과 순응했을 경우의 기회가 동시에 제공된다. 상대방이 순응하면 억지는 성공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억지는 실패하고 방어와 개입 행동이 취해진다.¹⁶
- 조지와 스모크(A. George and R. Smoke)는 억지가 성공하는 경우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적대국의 욕구를 좌절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여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거나 또는 대결상태의 국가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전자의 차원에서 소련체제의 변화에 필요한 시간을 번다는 희망 속에 “봉쇄”(containment) 전략이 수행되었고, 후자의 경우 갈등조정에 실패하면 억지는 상시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다.¹⁷

- <Deterrence by Denial, 거부억지>: 적대국에게 도발을 통한 정

¹⁵- Frank Harvey and Patrick James, “Deterrence and compellence in Iraq, 1991 ~ 2003,”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224.

¹⁶- Michel Fortmann and Stefanie von Hlatky,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Impacts of Emerging Technologies on Deterrenc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p. 308~309.

¹⁷- Alexander George and Richard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 5.

치·군사적 승리가 거부된다고(즉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확신시킴으로써 안정이 유지되는 상황이다.¹⁸

- 적대관계의 국가들은 상대방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거부할 목적으로 군사력, 특히 재래식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보유한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전장에서의 목표달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도발국의 전쟁개시가 억지된다. “거부억지”(denial type deterrence)는 재래식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거부억지 수용론자들은 충분한 능력이 없는 잠재적 도발자가 공격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측과 방어측간의 군사적 균형에 주목한다.¹⁹
- 적대국의 영토획득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억지를 달성한다.²⁰

- <Deterrence by Punishment, 징벌억지>: 적대국이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공격을 포기하는 상황이다.²¹
 -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보복능력”(credible retaliatory cap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핵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한다. 도발을 통한 이익보다 치러야

18. T.V. Paul,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24, 각주 6.

19.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8.

20. Glenn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 14.

21. T.V. Paul,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p. 24, 각주 6.

할 대가를 크게 만드는 “보복·징벌 위협”(threat of retaliation or punishment) 때문에 잠재적 도발국은 억지된다.²² 징벌억지는 잠재적 도발국의 전쟁에 대한 계산에서 능력요소에 큰 비중을 둔다. 즉 잠재적 도발국이 방어측이 보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도발에 의한 이익보다 징벌이 크므로 도발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함으로써 억지가 작동한다.²³

- 적대국에 대해 핵공격 처벌을 가할 능력과 위협을 보유함으로써 억지를 달성한다.²⁴

- <Direct Deterrence, 직접억지>: 불량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강대국의 전면 공격을 억지하는 개념이다.²⁵
- <Direct or Homeland Deterrence, 직접억지·본토억지>: 적대국에 의한 자국영토 직접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다.²⁶
- <Effective Deterrence, 효과적인 억지>: 효과적인 억지를 위한 5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분명하게 규정함, ② 위반시에 징벌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③상대방의 목표

22.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p. 8.

23. *Ibid.*, p. 9.

24. Glenn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 14.

25. Robert Jervis, “Deterrence, Rogue States, and the U.S. Policy,”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149.

26. *Ibid.*, p. 135.

실현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함, ④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를 넘어서는 징벌을 가함, 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결의를 입증함.²⁷

- <Existential Deterrence, 실존억지>: 적대국 간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상당기간 억지는 예비상태로 무대 밖에서 작동하면서 안보 관리의 중심에 서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²⁸
 - “실존위협”(Existential Threat)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실존억지의 차원에서 볼 때, 핵억지는 강대국들이 서로에 대한 군사공격을 막는 궁극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²⁹
- <Extended Deterrence, 확장억지>: 강대국이 보복위협을 통해 우방국을 보호하는 상황이다.³⁰ 다른 나라의 영토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안보우산을 씌우는 것과 같다.³¹
 - 확장억지를 제공하는 강대국의 고민거리는 보호하고자 하는 동맹국이 지닌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위협을 감수한다는 점이다.³²

²⁷- Patric Morgan, “Collective-Actor Deterrence,” p. 169.

²⁸-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p. 10; Patrick M. Morgan, *Deterrence N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242.

²⁹- Patrick Morgan and T.V. Paul, “Deterrence among Great Powers in an Era of Globalization,”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266.

³⁰- T.V. Paul,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p. 24, 각주 6.

³¹- Robert Jervis, “Deterrence, Rogue States, and the U.S. Policy,” p. 135.

³²- Timothy Crawford, “The Endurance of Extended Deterrence: Continuity, Change, and Complexity in Theory and Practice,” p. 280.

- <Extended Nuclear Deterrence, 확장핵억지>: 확장억지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으로서 통상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라고 한다.
- <General Deterrence, 일반억지>: 적대국가로부터 당장의 도전은 예상되지 않지만 미래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보유하는 상황이다.³³
 - 적대국이 “긴급억지”(Immediate Deterrence)가 필요해지는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상황이다.³⁴
 - 냉전시대에 핵전쟁의 위협이 실존한다는 것을 내재적으로 이해 하던 상황이 여기에 해당된다.³⁵
 - 억지의 대상으로 하여금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는 상황이다.³⁶
 -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암시함으로써 잠재적국의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대관계에서 군사적·외교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의 암시와 군사력 배치에 초점을 맞춘다.³⁷

³³- T.V. Paul,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p. 24, 각주 6.

³⁴- Jeffrey Knopf, “Three Items in One: Deterrence as Concept, Research Program, and Political Issu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55, 각주 11.

³⁵- Emanuel Adler, “Complex Deterrence in the Asymmetric-Warfare Era,”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89.

³⁶- Robert Jervis, “Deterrence, Rogue States, and the U.S. Policy,” p. 135.

³⁷-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p. 7.

- 일반억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쟁관계에서 수많은 군사적 분쟁(군사력 과시, 사용위협 및 실제 사용 등으로 반복되는 접촉)을 경험하며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특히 타당하다.³⁸
- 일반억지 하에서 행위자는 상대방이 분명한 기회가 주어지면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으며, 일반억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낙담”(discourage)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³⁹
- <General Extended Deterrence, 일반확장억지>: 보호국과 피보호국 사이에 상시 보호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도전국이 보호국의 대응을 두려워해서 피보호국에 대한 강압적 시도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⁴⁰
- <Immediate Deterrence, 긴급억지>: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전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보복위협이 전쟁의 시작을 막는 상황이다.⁴¹
 - 긴급억지는 일반억지가 실패하거나 작동하지 않고 적대국이 도전행위를 감행할 때 발생한다.⁴² 방어측이 적대국이 공격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믿고 공격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억지를 작

38. Patrick Morgan and T.V. Paul, “Deterrence among Great Powers in an Era of Globalization,” p. 265.

39. *Ibid.*, p. 275; Patrick Morgan, *Deterrence: A Conceptual Analysis*, 2nd ed. (Beverly Hills: Sage, 1983), p. 38.

40. Timothy Crawford, “The Endurance of Extended Deterrence: Continuity, Change, and Complexity in Theory and Practice,” pp. 279~280.

41. T.V. Paul,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p. 24, 각주 6.

42. Robert Jervis, “Deterrence, Rogue States, and the U.S. Policy,” p. 135.



동시키는 상황이다.⁴³

- 적대국이 심각하게 공격을 고려하지만 방어측이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보복위협을 성공적으로 가할 때 형성되며, 일단 위기가 발생한 후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처하는 상황을 말한다.⁴⁴

- <Immediate Extended Deterrence, 긴급확장억지>: 일반확장억지가 실패한 후에 즉, 적대국이 공개적으로 피보호국을 압박할 때 보호국이 개입하겠다고 드러내놓고 위협하는 상황이다.⁴⁵

- 긴급억지의 위기상황에서, “재안심”(reassurance)은 긴급억지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억지의 일부가 된다. 보호국이 무력개입 위협을 통해 피보호국에 대한 직접도전을 무산시키는 경우 이는 피보호국을 ‘재안심’시키는 것이다. 보호국이 위기에 피보호국을 자제시키는 경우에는 적대국을 “수용”(accommodate)하는 결과도 된다.⁴⁶

- <Internalized Deterrence, 내재억지>: 행위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더 이상 믿지 않는 확실한 규범을 내재화하는 상황을 말한다.⁴⁷

43. Patrick Morgan and T.V. Paul, “Deterrence among Great Powers in an Era of Globalization,” p. 275; Patrick Morgan, *Deterrence: A Conceptual Analysis*, pp. 42~43.

44.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p. 7.

45. Timothy Crawford, “The Endurance of Extended Deterrence: Continuity, Change, and Complexity in Theory and Practice,” p. 280.

46. *Ibid.*, p. 289.

47. Jeffrey Knoff, “Three items in one: deterrence as concept, research program, and political issu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프리드만의 내재억지는 “비재래식 억지”(Unconventional Deterrence)와 같은 뜻이다.⁴⁸
- 억지가 전략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성공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적대국이 상대방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도발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상대방은 적대국의 이런 계산을 모를 수도 있다. 전략적 억지의 과제는 억지의 대상 내부에 내재억지를 형성하는 일이다.⁴⁹
- <Micro-Deterrence, 미시억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평가가 존재하고 상대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정밀한 성격이 파악됨으로써 형성되는 억지관계를 말한다.⁵⁰
- <Minimal Deterrence, 최소억지>:⁵¹ 전략환경이 냉전시대와 크게 다른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이 핵무기에 과도한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핵무기의 임무를 ‘상대방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단 한 가지로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화계에서 제안된 개념이다.

Press, 2009), p. 55, 각주 11.

⁴⁸- Ivan Arreguin-Toft, “Unconventional Deterrence: How the Weak Deter the Strong,” p. 205.

⁴⁹-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pp. 29~32.

⁵⁰- T.V. Paul,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p. 16.

⁵¹- Hans Kristensen, Robert Norris, and Ivan Oelrich, “From Counterforce to Minimal Deterrence: A New Nuclear Policy on the Path Toward Eliminating Nuclear Weapons,” Occasional Paper No. 7,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and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April 2009), pp. 21~22.

- 최소억지는 그 정의상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및 제한적인 2차 사용’에 토대를 두고 공격적인 핵계획과 끝없는 핵무기기 현대화를 끝냄으로써 핵군축으로 나아가는 잠정적인 단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소억지력의 규모는 적대국에게 핵전쟁을 시작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 정도로 충분한 부담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핵전력이면 된다.
 - 최소억지에 기반을 둔 핵전력은 상대방의 핵전력과 지하시설을 공격할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핵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다. 핵전력의 유일한 목표는 상대방이 먼저 핵을 사용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이다.
 - 최소억지에서는 단지 몇 개의 핵무기로 억지를 달성할 수 있는데, 도시 여러 개를 파괴하고 인구 수백만 정도를 살상할 능력이면 적대국을 억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최소 열 개에서 수백 개의 핵탄두면 충분하다고 본다.⁵²
- <Narrow Deterrence, 협의억지>: 전쟁의 와중에 특정한 군사작전을 억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광의억지”(Broad Deterrence)는 모든 전쟁을 억지하는 상황을 말한다.⁵³
 - <Pivotal Deterrence, 중심축억지>: 경쟁관계에 있는 두 나라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강대국이 제3자의 입장에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을 방지하는 상황을 말한다.⁵⁴

⁵²- Patrick M. Morgan, *Deterrence Now*, p. 23.

⁵³-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p. 32.

- 강대국이 두 경쟁국들 사이의 중간에 자리 잡고 두 나라를 동시에 억지하는 상황이다. 중심축억지에서서는 두 경쟁국들이 피보호국이자 도전국인 처지에서 강대국의 확장억지를 제공받게 된다.⁵⁵
 - “재안심”(reassurance), “수용”(accommodation), 피보호국이 행동을 자제하도록 통제하는 “자제위협”(restraining threat) 및 “직접적인 억지위협”(straightforward deterrent threats)이 다양하게 작동하게 된다.⁵⁶
- <RMA-based Deterrence, 군사혁신기반억지>: 핵무기 대신 “군

<Recessed General Deterrence, 후퇴일반억지>: “단념”(Dissuasion) 이라고도 하는데, 즉각적인 군사충돌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국제정치의 내재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보험수단으로 군사력을 뒷마당에 유지하는 상황으로서 탈냉전시대의 강대국 관계가 여기에 해당된다.⁵⁷ 기본적으로 억지가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늘날 강대국 관계에서는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배경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일반억지만 작동하는데, 이런 형태의 억지는 두드러지게 전면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선 형태를 띠므로써 후퇴일반억지라고 할 수 있다.⁵⁸

54. Timothy Crawford, *Pivotal Deterr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55. Timothy Crawford, “The Endurance of Extended Deterrence: Continuity, Change, and Complexity in Theory and Practice,” p. 294.

56. *Ibid.*, pp. 289, 294.

57. T.V. Paul,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p. 9.

58. Patrick Morgan and T.V. Paul, “Deterrence among Great Powers in an Era of Globalization,” p. 259.



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기술을 억지위협
의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억지의 수단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
황이다.

- 핵무기의 경우 보복위협은 여러 개 이상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압
도적이고 무차별적인 파괴력에 의존한다. 이 경우 상대의 유사한
보복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파괴력의 규모로 인해서 핵무기
사용 위협의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반대로 군사혁신에
기반한 파괴는 대단히 분명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군사혁신기
반억지의 신뢰성은 매우 높아진다.⁵⁹
 - 첨단 재래식 전력에 의한 대북억지를 한국형 군사혁신기반억지
라고 할 수 있다.
- <Self-Deterrence, 자체억지>: 비핵국가나 테러집단의 “비대칭
공격”(asymmetric attacks)을 받은 핵국이 제대로 보복하지 못하
는 상황을 말한다. 전략적·전술적 요인과 명예, 도덕 및 법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핵국이 신뢰성있는 보복위협을 하거나 이를 실행하
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자체억지는 핵무기
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이나 핵사용을 금기시하는 문화에 의해 강해
질 수 있다.⁶⁰
 - 핵분야에서 능력의 결핍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보
복위협을 실행할 수 없는 즉, 자체억지가 작동하게 되는 배경에
는 운용적, 규범적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운용적 차원의

⁵⁹. Michel Fortmann and Stefanie von Hlatky,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Impacts of Emerging Technologies on Deterrence,” p. 313.

⁶⁰. T.V. Paul,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p. 18.

“결과 논리”(a logic of consequence)로서 핵국이 명성, 명예, 권력의 지위, 전반적인 국제위상 등을 고려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적절성 논리”(a logic of appropriateness)인데, 스스로 부과한 합리적 혹은 규범적 고려에 의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핵보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군사적 비용에 대한 걱정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과된 합리적, 규범적 제약 때문인 것이다.⁶¹

- <Strategic Deterrence, 전략억지>: 전략억지는 보통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지하는 전략전쟁계획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역할을 뜻한다.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 STRATCOM)는 전략억지를 “핵공격작전을 포함하는 작전의 제1선”으로서 과거에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 SAC) 현재는 STRATCOM이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한다.⁶²
 - 미국의 2002년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핵전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미사일방어와 재래식 정밀타격능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에 통합시켰다. 이후 전략가들이 군사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전력을 WMD 사용위협을 가하는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및 예방전쟁의 수단으로 고려하면서 전략억지가 핵억지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⁶³
- <Tailored Deterrence, 맞춤형 억지>: 억지의 표적을 선정하고 이

⁶¹- *Ibid.*, p. 19.

⁶²- Hans M. Kristensen, “Obama and the Nuclear War Plan,” p. 7.

⁶³- Michel Fortmann and Stefanie von Hlatky,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Impacts of Emerging Technologies on Deterrence,” p. 313.

I
II
III
IV
V
VI
VII
VIII

표적의 동기, 위협감수 정도, 세계관, 능력 등을 고려해서 표적에 맞는 맞춤형 억지를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⁶⁴

- 미 행정부가 다듬어 온 맞춤형 억지전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의 제Ⅶ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관련 개념

이 절에서는 억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개념들을 정리했다. 일부는 억지보다 상위의 개념이고 일부는 억지와 같은 수준이지만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나머지는 억지보다 하위의 개념들이다.

- <Coercive Strategy, 강압전략>: 갈등과정에서 상대방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상대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개적인 무력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강압전략은 특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해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적인”(deterrent) 것과 특정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해당행위를 하도록 하는 “강제적인”(compellent) 것으로 구분된다.⁶⁵
- <Compellance, 강제>: 억지는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인 영향력”(negative influence)을 행사하는 것인 반면에 강제는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적극적인 영

⁶⁴- Patrick Morgan and T.V. Paul, “Deterrence among Great Powers in an Era of Globalization,” p. 267.

⁶⁵-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pp. 26~27.

향력”(positive influence)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억지의 성공은 특정 행위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달성되는 반면에 강제는 상대가 특정 행위를 얼마나 신속히 잘 완수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⁶⁶

- <Containment, 봉쇄>: 미·소가 경쟁하던 냉전시대에 미국이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구사한 전략으로서 억지는 봉쇄의 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억지는 봉쇄의 “하녀”(handmaiden) 정도로 볼 수 있다.⁶⁷
 - 냉전의 시작과 함께 봉쇄는 목표가 되었고, 억지는 수단이 되었다.⁶⁸
- <Escalation Dominance, 확산우위>: 전쟁이 확산되는 경우에 우위를 점유하는 상황을 말한다.
- <Global Strike: 지구타격>: 2003년 1월 미국 STRATCOM에 처음으로 부여된 임무로서, OPLAN 8044로 명명된 전략전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유례없는 신속타격”(unique quick-strike)을 실행하는 것이다. 지역적, 국가적 목표를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정밀한 핵·재래식 무기에 의한 “운동적”(kinetic) 영향과 우주와 정보작전에 의한 “비운동

⁶⁶. Thomas S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p. 69~91.

⁶⁷. Alexander George and Richard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pp. 3~4.

⁶⁸.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p. 11.

I
II
III
IV
V
VI
VII
VIII

적”(non-kinetic) 영향을 주는 능력을 말한다.⁶⁹

- <Rationality of irrationality, 비합리성의 합리성>: 행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합리적이 아니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믿도록 유도함으로써, 상대방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다. 이상하고 위험한 계략이며 월남전에서 닉슨대통령이 구사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⁷⁰
- <Reassurance, 재안심>: 방어측이 갈등이 고조되는 주요 원인인 공포, 오해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발가능성이 있는 적대적인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의와 방어적인 의지를 알리는 것이다.⁷¹
 - 강압적인 위협이 투명성이 적고 오해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 재안심은 직접 의사소통을 통해서 행위자들이 갈등의 원인, 동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시각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협상하도록 함으로써 역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재안심은 조건부 위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일 수 있다.⁷²
-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안정·불안정의 역설>: 핵 수준에서의 전략적 안정성(핵전쟁의 폐해가 크므로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측이 재래식 전쟁에서 우세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재래식 분쟁을 일으킴

⁶⁹- Hans M. Kristensen, "Obama and the Nuclear War Plan," p. 7.

⁷⁰- Robert Jervis, "Deterrence, Rogue States, and the U.S. Policy," p. 136.

⁷¹- Richard Lebow, "Deterrence and Reassurance: Lessons from the Cold War," *Global Dialogue* (Autumn 2001), p. 128.

⁷²-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pp. 56~57.

으로써 재래식 수준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개념이다.⁷³

- 핵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경쟁관계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전면 핵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보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군사도발을 하는 상황이다.⁷⁴
- 핵전쟁의 파괴력 때문에 재래식 전쟁이 발발해도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즉 핵수준에서의 전략적 안정은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측에 의한 재래식 도발을 부추김으로써 재래식 수준에서의 불안정을 허용하게 된다.⁷⁵
- 군사력이 약한 측이 제한된 분쟁을 먼저 시작한 남아시아에서는 이 역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지만,⁷⁶ 핵 수준에서의 안정이 비핵 수준에서의 불안정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안정·불안정의 역설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⁷⁷

⁷³ Glenn Snyder, "The Balance of Power and the Balance of Terror," Paul Seabury, ed., *The Balance of Power* (San Francisco: Chandler, 1965), pp. 194~201.

⁷⁴ Robert Jervis, "Deterrence, Rogue States, and the U.S. Policy," p. 138.

⁷⁵ Dinshaw Mistry, "Complexity of Deterrence among New Nuclear States: the India-Pakistan cas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201, 각주 11.

⁷⁶ S. Paul Kapur, *Dangerous Deterrent: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Conflict in South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⁷⁷ Dinshaw Mistry, "Complexity of Deterrence among New Nuclear States: the India-Pakistan case," p. 201, 각주 11.

Ⅲ. 북한의 핵능력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핵능력을 구성하는 4대 요소는 ① 핵물질, ② 핵탄두의 설계·제조 및 고폭실험, ③ 핵실험, ④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이다. 이 가운데 핵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소는 기술적으로 대동소이하고, 초보적인 기술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을 결정하는 관건은 핵물질의 확보에 있다. 2012년 6월 현재 북한의 예상 핵능력은 <표 III-1>에서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⁷⁸ 플루토늄 능력은 동결된 상태이나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능력은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2010년 이후 HEU 능력에 대한 변화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았다.⁷⁹ 북한의 핵확산은 한국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시설 폭격으로 북한에 의한 핵확산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이런 행위가 국제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핵확산도 북한의 핵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남겨두었다.

⁷⁸. <표 III-1>과 이 표를 설명한 다음의 내용은 2009년 말 시점의 북핵능력을 평가한 다음 글의 관련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전성훈, 『북한의 WMD 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pp. 32~73. 1990년대 중반과 2009년 말 북한의 핵능력을 비교한 자료는 다음 저서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pp. 40~43.

⁷⁹. 통상 농축도 90% 이상의 HEU를 무기급 핵물질로 분류하며, 농축도 3~5%의 “저농축우라늄”(Low Enriched Uranium: LEU)은 원자로의 핵연료로 쓰인다.

표 III -1 주요 요소별 북한의 예상 핵능력(2012년 6월 현재)

핵물질 (kg)			무기화			북한의 핵확산
플루토늄		HEU	설계·제조·고폭실험	핵실험	소형화·경량화	
IRT-2000 원자로	2~4	2010년11월, 2,000개의 첨단 원심분리기 시설 공개, 경수로용 LEU 생산 주장, 제3의 장소에 HEU 프로그램 가동중으로 추정	제1기 (1983~1994.10) 와 제2기 (1997~2002.9)에 각각 70여 회 등 모두 140여 회의 고폭실험 실시 내폭형 핵탄두 설계·제조	2006년 10월 9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하갱도에서 제1차 핵실험 중국에 통보한 1차 핵실험 규모는 4kt, 실제 규모는 1kt 추정 2009년 5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제2차 핵실험 2차 핵실험의 추정규모는 2~4kt	위력을 낮춘 소형화 가능함 경량화에는 기술적인 장애가 있었지만 극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	2000년대 초부터 시리아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이전, 2003년 경부터 원자로 건설 착수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건설된 원자로를 폭격하여 제거
1986.1~1989.4	5~8.5					
1989 여름 ~ 1994.4	17.5~27					
2003.2~2005.3	8~12					
2005.6~2007.7	8~12					
생산·재처리된 플루토늄의 총량: 40.5~63.5						
2006.10.9 핵실험 사용량 (추정)	2.5~4					
2009.5.25 핵실험 사용량 (추정)	2.5~4					
<p style="text-align: center;">↓</p> 핵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플루토늄 총량: 32.5~58.5		2011년부터 연간 최소 20kg의 HEU 생산 가능, 2005년 혹은 2008년부터 HEU 생산했다는 평가 존재	HEU를 이용한 내폭형 핵탄두 설계·제조 가능	3차 핵실험은 HEU 탄두를 포함한 복수의 실험일 가능성 존재	HEU에 내폭형 설계를 적용할 경우,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실현	

1. 플루토늄 생산능력

북한이 자체적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소련의 지원하에 1965년에 완공된 IRT-2000 연구용 원자로와 1986년에 자체적으로 건설한 5MWe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추출해서 재처리하는 것이다. 북한이 외부로부터 플루토늄을 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⁸⁰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주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가 제시한 가정과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분석했는데,⁸¹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⁸²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은 32.5~58.5kg 정도이다. IRT-2000 원자로에서 추출한 양, 1980년대 후반에 생산한 양, 1989년 여름부터 제네바 기본합의 체결 전인 1994년 4월까지 생산한 양,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2003년 2월부터 약 2년간 생산한 양, 그리고 2005년 6월부터 2·13 합의에 의거해서 5MWe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 2007년 7월까지 생산한 양을 모두 합한 총량은 40.5~63.5kg이다.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은 모두 재처리되었는데, 이 가운데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 사용된 것으로

⁸⁰. 한 예로서, 북한이 2003년 4월 북경 3자회담에서 8,000여 개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거의 완료했다고 통보한 이후 CIA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정보평가를 전면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1990년대에 구소련과 러시아로부터 플루토늄을 비밀리에 들여왔다는 정보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었다. Bill Gertz, “CIA shifts on North Korean nukes,” *Washington Times*, July 4, 2003.

⁸¹.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4).

⁸². 전성훈, 『북한의 WMD 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pp. 33~41.

I
II
III
IV
V
VI
VII
VIII

추정되는 5~8kg을 제외한 나머지, 즉 32.5~58.5kg이 북한이 이미 핵 무기 제조에 사용했거나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다.⁸³

2. 플루토늄 핵탄두 보유수

핵탄두 제조능력은 기술수준에 따라 편의상 초급, 중급 및 고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급기술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제1세대형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고, 고급기술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것과 같이 오랜 경험과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설계와 제조기법을 개량해서 핵탄두의 첨단화, 경량화에 성공한 능력을 말한다. 중급기술은 초급과 고급의 중간단계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초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중급기술까지도 보유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핵물질, 즉 플루토늄과 HEU만 확보하면 핵탄두를 제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다.⁸⁴ 또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방문 결과와⁸⁵ 북한당국의 주장⁸⁶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기술수준이 60년

⁸³ 참고로 국제핵물질위원회는 북한이 5MWe 원자로에서 총 46~58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현재 34kg 정도를 재처리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09: A Path to Nuclear Disarmament*, Program on Science and Global Security, Princeton University (October 2009), pp. 17, 51.

⁸⁴ 한 예로서, 케리(John Kerry)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따르면, 상원의원 바이든(Joseph Biden)이 미국의 핵무기 관련 연구소 소장들에게 테러집단의 핵탄두 제조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핵물질만 확보되면 기존의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고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Remarks of Senator John Kerry on New Strategies to Meet New Threats, June 1, 2004. <http://www.johnkerry.com/pressroom/speeches/spc_2004_0601.html>.

⁸⁵ 헤커 박사는 재처리시설은 공장규모이고 양호한 상태였으며, 실무자들도 기술적 질문에 매우 유능하게 답변했다고 증언했다. Siegfried Hecker, *Senate Committee*

전의 초급기술은 능가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는 중급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평가한다.⁸⁷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32.5~58.5kg)으로 제조할 수 있는 핵탄두의 개수는 북한의 기술수준과 핵탄두의 파괴력에 따라 달라진다. NRDC가 발표한 핵물질과 핵탄두 제조 기술수준 및 파괴력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삼고,⁸⁸ 북한의 기술수준을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2012년 6월 현재에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종류와 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⁸⁹

가. 북한의 기술수준이 초급인 경우

북한이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파괴력을 5kt, 10kt 및 20kt로 가정했을 때, 초급 기술수준의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플루토늄 핵탄두의 종류와 수는 다음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초급 기술수준의 경

on Foreign Relations Hearing on “Visit to the Yongbyon Nuclear Scientific Research Center in North Korea,” January 21, 2004, p. 7.

86. 예를 들어, 해리슨(Selig Harrison)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핵 억지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폭탄이 준비 4개월 만에 만들어졌음을 기억해라. 지금은 반세기가 지났으며 우리는 보다 현대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Selig Harrison, “Inside North Korea: leaders open to ending nuclear crisis,” *Financial Times*, May 4, 2004.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반문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음을 시사했다: “사실 조미 사이에 지금 같은 적대관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경제형편도 어려운 때에 것처럼 많은 품을 들여가며 방위력 강화에 힘을 넣고 특수무기까지 만들겠는가?” 『조선중앙방송』, 2002년 11월 3일.

87. NRDC,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003,”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April, 2003), p. 76.

88. *Ibid.*

89. 북한이 2009년말 이후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6월 현재 예상되는 플루토늄 핵탄두 보유 규모는 2009년 말과 동일하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우 5kt, 10kt 및 20kt 핵탄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의 양은 각각 4kg, 5kg 및 6kg이다.

표 III-2 초급 기술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 (2012년 6월 현재)

파괴력/ 필요한 Pu양	5kt/4kg	10kt/5kg	20kt/6kg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수 (개)	8 ~ 15	7 ~ 12	5 ~ 10
	5 ~ 12	1	1
	6 ~ 12	2	
		4 ~ 9	2
	5 ~ 12		2

세 가지 핵탄두(5kt, 10kt, 20kt) 가운데 한 종류만을 갖는다고 가정할 때, 북한은 각각 8~15개, 7~12개, 5~10개를 보유할 수 있다. 세 가지 핵탄두를 골고루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가능한 보유형태의 하나는 5kt 핵탄두를 5~12개, 10kt와 20kt 핵탄두를 각각 1개씩 보유하는 것이다. 세 가지 핵탄두 가운데 두 가지만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보유상황이 가능할 것이다: ① (5kt 핵탄두 6~12개, 10kt 핵탄두 2개), ② (10kt 핵탄두 4~9개, 20kt 핵탄두 2개), ③ (5kt 핵탄두 5~12개, 20kt 핵탄두 2개). 참고로 국제핵물질위원회는 북한이 5개 미만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⁹⁰

⁹⁰-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09: A Path to Nuclear Disarmament*, p. 9.

나. 북한의 기술수준이 중급인 경우

북한이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파괴력을 5kt, 10kt 및 20kt로 가정했을 때, 중급 기술수준의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플루토늄 핵탄두의 종류와 수는 아래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중급 기술수준의 경우 5kt, 10kt 및 20kt 핵탄두를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의 양은 각각 2.5kg, 3kg 및 3.5kg이다.

● 표 III-3 중급 기술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 (2012년 6월 현재)

파괴력/ 필요한 Pu양	5kt/2.5kg	10kt/3kg	20kt/3.5kg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수 (개)	13 ~ 23	11 ~ 20	9 ~ 17
	8 ~ 18	2	2
	8 ~ 19	4	
		6 ~ 15	4
	7 ~ 18		4

세 가지 핵탄두(5kt, 10kt, 20kt) 가운데 한 종류만을 갖는다고 가정할 때, 북한은 각각 13~23개, 11~20개, 9~17개를 보유할 수 있다. 세 가지 핵탄두를 골고루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가능한 보유형태의 하나는 5kt 핵탄두를 8~18개, 10kt과 20kt 핵탄두를 각각 2개씩 보유하는 것이다. 세 가지 핵탄두 가운데 두 가지만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보유상황이 가능하다: ① (5kt 핵탄두 8~19개, 10kt 핵탄두 4개), ② (10kt 핵탄두 6~15개, 20kt 핵탄두 4개), ③ (5kt 핵탄두 7~18개, 20kt 핵탄두 4개).

I
II
III
IV
V
VI
VII
VIII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는 2012년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2년 현재 보유한 플루토늄 총량을 34~36kg, 플루토늄 핵탄두 1개당 사용되는 Pu 양을 2~5kg으로 가정하고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플루토늄 핵탄두의 수가 6~18개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단순화시켜서, 1개의 Pu 핵탄두에 사용되는 Pu 양을 3kg으로 가정하는 경우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플루토늄 핵탄두의 수가 12개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⁹¹ 이는 ISIS 역시 북한의 핵탄두 설계 및 제조 기술이 중급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ISIS 보고서가 핵탄두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3kg의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중급기술로 10kt의 파괴력을 낼 수 있다는 본 보고서의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 5MWe 인근에 건설 중인 시험용 경수로에서 배출될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하여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시험용 경수로의 규모는 열출력 100MWth인데 이는 영변 5MWe 원자로에 비해 4~5배 큰 규모이며, 연간 2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1개의 Pu 핵탄두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Pu 양을 2~5kg(3kg)로 가정할 때, 연간 4~10개(7개)의 Pu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다만 이런 규모의 생산은 2014년까지는 불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매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⁹² 물론 재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⁹¹- David Albright and Christina Walrond, *North Korea'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Washington, D.C.: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August 16, 2012), pp. 9~10.

⁹²- *Ibid.*, p. 13.

3. HEU 생산능력

가. 북한의 주장과 실체 공개

북한이 2010년 11월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하기 전에는 북한의 HEU 생산 능력이 플루토늄에 비해 훨씬 작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었다. 하지만 2010년 가을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HEU 능력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라늄농축에 대해 북한이 표명한 입장과 2010년 이후 새로이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³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의 역사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놀란 클린턴 행정부는 휴전협정 체결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요소였던 ‘북·미 직접대화 불가’ 입장을 바꿔 북한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핵무기의 또 다른 원료인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의 핵활동 차단을 목표로 하는 북·미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새로운 핵무기 개발 루트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⁹⁴

2002년 10월 켈리(James Kelly) 동아태차관보가 부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우라늄농축 문제를 제기하자 강석주가 “그보다 더 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면서 사실상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바 있다. 강석주의 ‘사실상 시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⁹³. 2009년까지 공개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성훈, 『북한의 WMD 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pp. 42~55.

⁹⁴. 전성훈,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의도와 대응방안,” 『북한』, 통권 469호 (서울: 북한연구소, 2011), pp. 95~102.

I
II
III
IV
V
VI
VII
VIII

고, 북한 정권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계속 부인해 왔다. 우라늄농축에 관련된 시설도 장비도 인력도 없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미·일 등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신고의 대상에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은 한사코 그 존재를 부인하며 신고를 거부했다.

북한의 일관된 거부 입장이 바뀐 것은 2009년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였다. 이 성명은 제3차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에 대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책동에 추종하여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이익인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직접 침해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⁹⁵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첫째로, 공화국의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둘째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이다.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란 우라늄농축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3차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을 구실로 치고 나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슬그머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김일성의 유훈을 토대로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입장이 2005년 2월 10일의 ‘핵보유 선언’으로 바

⁹⁵ 『조선중앙방송』, 2009년 4월 29일.

핀 뒤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대응방식이다. 핵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그 존재를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외부의 위협을 핑계로 기술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합리화하는 북한판 이중전략의 재판인 셈이다.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안보리가 2009년 6월 13일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자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⁹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이 재처리되었다. 둘째, 우라늄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 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암시한 지 5개월 만에 그 존재를 직접 밝힌 것이다. 2009년 9월 3일에는 유엔주재 북한대표가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배격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우라늄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⁹⁷ 11월 14일자 조선신보는 경수로(LWR) 건설을 구실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합리화하는 글도 게재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⁸

96.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13일.

97. 『조선중앙통신』, 2009년 9월 4일.

98. “전력증산: 경수로도 자력갱생 한다,” 『조선신보』, 2009년 11월 14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은 100일 전투기간에 채취공업부문이 광물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니움 광산들에서 창조된 위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통신은 “앞으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게 될 경수로발전소의 핵연료를 원만히 보장하려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양양된 열의와 즐기찬 노력투쟁에 의해 우리니움 광석 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전했다. …… 국내의 경제관계자들은 경수로발전소건설을 주체적인 핵 동력공업의 완비라는 관점에서 론하고 있다. 우리나라니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유리한 조건에 맞게 자기의 연료, 자기의 기술에 기초한 핵동력공업을 세운다는 말이다. 한편 국내의 기계공업부문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니움 농축 기술이 확립되기만 하면 기계 설비를 제작하고 조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2010년 들어서는 우리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경수로 건설과 우리농축을 구체적으로 연계시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무력의 존재 가능성도 시사하기 시작했다. 2010년 2월 8일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연합 성명은 새로운 형태의 무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암시했다: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백두산 혁명강군의 총대는 물론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의 모든 역량과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 말하지 않고 다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력량과 안전보위수단이 있다.”⁹⁹ 두 달 뒤인 4월 9일 조선신보는 우리농축이 전력증산을 위해 건설될 경수로를 위한 것이고 경수호가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¹⁰⁰

99. 『조선중앙통신』, 2010년 2월 8일.

100. 『조선신보』, 2010년 4월 9일.

경수로 건설을 위한 우라늄농축기술의 개발이다. 전력증산은 경제부흥을 위한 중심 고리의 하나이며 조선은 작년 유엔안보리가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직후에 이미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천명했었다. 조선의 핵무기는 냉변 핵시설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원료로 만든 것이다. 조선의 국산경수로 건설은 종래의 비핵화협상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한편, 로동신문은 2010년 5월 12일 북한이 핵융합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¹⁰¹

태양질을 맞는 뜻 깊은 시기에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핵융합의 성공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의 첨단과학기술의 면모를 과시하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 핵융합기술은 인류가 이상하는 새 에너지를 개발을 위한 최첨단과학기술분야의 하나로서 인공태양 기술이라고도 한다. 원천이 무진장하고 환경피해가 거의 없는 안전한 새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핵융합기술은 오늘 세계과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조선의 과학자들은 핵융합기술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은 속에서도 우리의 과학자들은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없이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100% 자체의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핵융합반응에 성공하였다.

로동신문은 더 나아가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반응장치가 설계·제작되고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 기술 역량이 마련되었다”면서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신에너지 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렸고, 최첨단 과학기술발전에서는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었다고 주장했다.

¹⁰¹ 『조선중앙통신』, 2010년 5월 12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1969년 EC-121 첩보기 사건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했었다는 사실이 미국의 비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보도되자, 북한 외무성은 2010년 6월 28일 대변인 명의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¹⁰²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에 의하면 조선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에도 미국은 조선과 중국동북지역의 여러 곳을 핵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였었다. 이것은 미국이 역대적으로 조선에 대해 힘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실지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된다. …… 역사적 사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우리의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정세는 미국의 계속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핵 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

7월 5일 로동신문도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핵 억지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¹⁰³

역사적 사실들과 오늘의 현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 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당연한 자위권행사이다. ……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핵 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명백히 말하건대 우리공화국은 나라의 최고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한 만큼 핵 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보다 튼튼히 해나갈 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2. 『조선중앙통신』, 2010년 6월 28일.

103. 『조선중앙통신』, 2010년 7월 5일.

우라늄농축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던 북한은 급기야 2010년 11월 9~13일 방북했던 해커(Siegfried Hecker) 박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실체를 전 세계에 공개했다. 2009년 4월 29일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을 구실로 서서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암시하기 시작한 이래 1년 반 정도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전격적으로 그 실체를 공개한 것이다. 해커 박사가 11월 12일 영변을 방문해서 2,000여 개의 원심분리기가 가동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장소는 5MWe 흑연감속로의 핵연료를 생산하던 핵연료 제조공장이다. 북한은 이 시설의 내부를 걷어내고 원심분리기와 “초현대식 통제실”(ultra-modern control room)을 설치했다. 북한이 발전용량 25~30MWe 규모의 중소형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완공에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해석까지 덧붙였다.¹⁰⁴ 해커 박사보다 일주일 앞선 11월 2~6일 영변을 방문한 프리처드 소장도 북한이 100MWt 규모의 시험용 경수로를 지을 예정이라는 건설책임자의 말을 전하면서, 영변단지 내 냉각탑이 있던 지역에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세우는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¹⁰⁵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을 목격한 해커박사의 소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⁰⁶

- 핵연료 제조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에 두 개의 cascade에 설치된 최첨단 원심분리기 2,000대와 초현대식 통제실을 보고 깜짝 놀람.
- 현대식 원심분리기들이 완전히 가동 중인 것을 목격함.

¹⁰⁴ 『동아일보』, 2010년 11월 15일.

¹⁰⁵ 『연합뉴스』, 2010년 11월 17일. 프리처드 소장이 밝힌 100MWt 규모는 열출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 규모의 열출력이면 전기출력 25~30MWe에 해당한다.

¹⁰⁶ Siegfried Hecker, “What I Found in North Korea: Pyongyang’s Plutonium is No Longer the Only Problem,” *Foreign Affairs*, Snapshot (December 9, 2010), <<http://www.foreignaffairs.com/print/66970>>.

I
II
III
IV
V
VI
VII
VIII

- 원심분리기 시설의 정교함과 규모에 놀람.
- 북한은 충분한 재료와 부품을 획득해서 원심분리기를 제작·조립할 능력을 갖췄고, 비밀시설에서 가동한 후에 짧은 시간 안에 영변의 공개된 시설에 설치할 수 있었을 것임.
- 북한 내 제3의 장소에 영변의 시설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 HEU 생산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북한이 핵물질이나 원심분리기술을 포함한 생산수단을 해외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핵능력 확대보다 더 큰 문제임.
- 북한은 전력생산을 위한 시험용 경수로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합리화하고 있음.
- 북한 관리들은 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새로운 경수로의 연료로 사용될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이며,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난해 4월 설비 구축이 시작됐고 수일 전 완성했다고 설명함. 북한 측은 이 시설들이 자체적인 설비와 능력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밝힘.

2009년 4월 미국 전문가들이 영변을 방문했을 때 없던 원심분리기 시설이 1년 반 만에 들어섰다는 것은 북한이 기존의 핵연료 제조공장을 매우 신속하고 비밀리에 원심분리기 시설로 전환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설의 규모와 건설 속도를 감안할 때, 외국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⁰⁷ 제3의 장소에 존재하는 원심분리기 설비의 일부를 영변으로 옮겨 왔거나 해당 설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¹⁰⁸ 북한과 현대적인 원심분리기 기술을 교류했을

¹⁰⁷-David Sanger, "North Koreans Unveil Vast New Plant for Nuclear Use," *New York Times*, November 20, 2010.

가능성이 큰 나라는 이란이다. 영변 원심분리기 시설의 통제실 설비는 외국에서 습득했을 것이며, 현재 이란이 같은 종류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⁹

미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을 대외에 공개한 후인 11월 30일 로동신문은 북한에서 원심분리기 수천 대가 돌아가고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¹¹⁰

조선이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에 나가는 것은 국제적인 핵에너지개발 이용추세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것은 또한 조선에서 날로 높아 가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 현재 조선에서는 경수로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그 연료보장을 위해 수천대규모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인 우라늄 농축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전력수요해결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사업은 앞으로 더욱 적극화될 것이다.

그리고 2010년 12월 18일 조선신보는 김정일의 중국방문에 앞서 로동신문이 게재한 정론의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이 HEU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보도를 했다.¹¹¹

올해 8월 조선의 영도자의 두번째 중국방문을 앞두고 로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일 장군이라는 제목의 정론에는 “이제 이 땅은

¹⁰⁸- David Albright and Paul Brannan, “Satellite Image Shows Building Containing Centrifuges in North Korea,” *ISIS Report*,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November 21, 2010), p. 1.

¹⁰⁹- *Ibid.*, p. 2.

¹¹⁰- “평화적 핵에너지개발 이용은 세계적 추세,”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25일.

¹¹¹- “2010년 격동된 정세, 대세의 흐름을 조선의 선제전략,” 『조선신보』, 2010년 12월 18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지경의 넓이로써만 잴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며 대국들의 힘과 후광에 쉽게 가리워 지는 범상한 민족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는 구절이 있다. 영도자의 뜻을 반영한 호소일 것이다. 정론에는 “아직 우리가 다 말하지 않은 무진 막강한 자주 국방력”이란 구절도 있다.

2011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79돌 기념 노동신문 사설도 북한이 새로운 무력을 보유했음을 다음과 같이 시사했다.¹¹²

위대한 백두영장이 이끄는 우리 인민군대의 주체적 군사전법은 그 어느 군사책략가도 가늠할 수 없는 신묘한 것이며,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우리군대의 타격력은 침략자들의 아성을 송두리째 들어낼 상상을 초월한 위력이다.

2011년 11월 30일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경수로용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¹¹³

핵에너지의 평화적 리용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원료원천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긴장한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방도로 된다. 외부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수로발전소가 실현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따라 자체의 경수로건설을 결심하였다. …… 시험용경수로건설과 그 연료보장을 위한 저농축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평화적 핵리용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초기부터 비핵화실현의 필수적인 선결조건으로 공인되어왔

112. “백두의 선군전통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는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조선중앙방송』, 2011년 4월 25일.

113. 『조선중앙통신』, 2011년 11월 30일.

다. 때문에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의 첫 조항에서 우리에게 대한 경수로제공을 공약하였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첫 조항에도 우리의 평화적 핵리용 권리에 대한 존중과 경수로제공문제가 명기되어있다. 핵에너르기의 평화적 리용 권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할적인 문제로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나.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관련 주요사항

2010년 11월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후에 많은 관련 정보와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산발적으로 소개된 자료들은 마치 하나하나의 구슬과 같지만 시계열적으로 배열해서 보면 구슬을 엮어 만든 목걸이처럼 HEU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집요한 열정과 실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로 거듭난다. 아래에서는 주요 관련 자료를 요약·정리했다.

2009년 6월 18일 미국 핵과학자협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¹¹⁴

-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24개의 P1, P2 원심분리기, 청사진, 원심분리기용 특수기름 등을 입수했고, 칸 박사가 세운 일급비밀 원심분리기 시설을 방문함.
- 러시아로부터 150톤의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를 수입함(2008년까지는 이 튜브가 원심분리기 제작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과학자가 확인).
- 2003년 4월, 22톤의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를 북한 배에 선적하는 것이 차단되는 등 여러 차례의 선적 실패 사례가 발생함.

¹¹⁴- Hui Zhang, "Assessing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18, 2009.

I
II
III
IV
V
VI
VII
VIII

- 1999년 일본회사로부터 두 개의 electrical-frequency converter 구입을 시도했고, 4년 후에는 세 개의 converter 구입을 시도함.
- Uranium feed-and-withdrawal system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비도 구입하려 함.
- 북한이 2,600대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한다면 매년 농축도 90%의 고농축우라늄을 20kg 정도 생산할 수 있음.
-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으로 내폭형 핵탄두를 만들었기 때문에 HEU를 이용한 내폭형 핵탄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함.
- 이 경우 HEU 양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4kt 규모의 내폭형 HEU 핵탄두를 만든다면 10kg 정도의 HEU로 충분함.

2009년 12월 28일 워싱턴포스트지는 당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공식 문건과 북한에 우라늄농축 기술을 전수한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영국기자 헨더슨(Simon Henderson)에게 보낸 서신을 토대로 북한의 HEU 프로그램을 보다 자세하게 공개한 바 있다. 이 신문은 관련 문건이 모두 칸이 만든 것임을 독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¹¹⁵

- 북한은 1990년대 우라늄농축에 필요한 가스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립함.
- 2002년까지 3,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파키스탄이 최소한 6년 동안 북한에 핵심장비, 설제도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음.

¹¹⁵- R. Jeffrey Smith and Joby Warrick, "Pakistani scientist depicts more advanced nuclear program in North Korea," *Washington Post*, December 28, 2009, p. A02.

- 칸 박사는 1999년 북한 방문 중에 산속의 터널을 방문해서 1시간 내에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 3개의 완성된 핵탄두 부품을 목격함.
- 북한 사람들은 핵탄두 설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6개의 상자에 각각 담겨진 핵탄두 코어와 핵탄두 1개당 64개의 기폭장치를 보여줌.
- 파키스탄은 북한의 원심분리기 시설 운영을 도와주고 북한은 파키스탄이 핵탄두를 가우리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묵시적 합의가 양국 사이에 있었음.
- 파키스탄은 북한에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북한은 핵폭발시 사용되는 극히 빠른 전류스위치로서 국제시장에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krytrons을 만드는 방법을 파키스탄에 전수함.
- 칸 박사의 북한 지원은 파키스탄 핵전력 책임자인 키드위(Khalid Kidwai) 중장을 포함해서 최고 정치·군사 지도자들이 승인한 것임.
- 북한의 “6불화우라늄”(Uranium Hexafluoride: UF6) 생산능력이 애초의 연간 2톤에서 10톤으로 증가했으며, 한 번은 북한이 1kg의 6불화우라늄 가스 샘플을 파키스탄에 보내서 테스트를 하기도 했음. 파키스탄은 자국의 6불화우라늄 샘플을 북한과 공유해서 북한이 제조기준으로 삼도록 함.
- 칸 박사는 부토(Benazir Bhutto) 수상의 요청으로 1994년 북한을 방문, 1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노동미사일 10기와 관련 기술을 구매함. 그 대가로 10명의 북한 연구진이 칸 연구소가 있는 카후타를 방문했으며, 파키스탄 육군이 북한 연구진의 방문을 승인했음. 이들은 P-1, P-2 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장을 방문하고

I
II
III
IV
V
VI
VII
VIII

과학자·엔지니어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허용됨. 칸 박사는 P-1 원심분리기 20대를 북한에 제공했고, 북한은 P-2 원심분리기 4대도 요구했음.

2010년 7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 시험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¹¹⁶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하 핵실험이 아니라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될 것임.
-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충분한 핵능력을 갖고 있어 이제는 탄두를 소형화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음.
- 북한이 핵융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중국은 북한이 수소폭탄 제조 능력을 획득한 게 아니라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는 과정으로 봄.
- 그러나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음.

2010년 10월 19일 미국 워싱턴 소재 ISIS 소장인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는 한미문제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¹¹⁷

- 북한이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개발하는 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함.

¹¹⁶ 『중앙일보』, 2010년 7월 31일.

¹¹⁷ 『연합뉴스』, 2010년 10월 20일.

-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파키스탄의 칸 박사로부터 배웠거나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았을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억지력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운반가능한 핵탄두를 추구해왔다는 점임.
- 칸 박사의 핵밀거래 네트워크가 2007년 스위스에서 적발됐을 때 컴퓨터 파일에 신형 핵무기 제조 디자인이 들어 있었음. 2개의 정교한 핵무기 디자인이 들어 있었지만 이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완성됐는지는 모름.
- 북한이 플루토늄 2kt 규모의 핵탄두 제조 기술을 획득했을 수 있음. 이 경우 북한이 과거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 신고한 36kg의 플루토늄을 전제로 할 때, 18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음.
-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핵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기술을 갖고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10년 10월 10일 세이모어(Gary Samore) 백악관 WMD 담당관은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 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¹¹⁸

-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이란과 비교해 훨씬 더 앞서 있음.
- 헤커 박사가 본 것과 북한이 그에게 말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가정한다면 북한과 이란 핵프로그램 사이에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음.
-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은 훨씬 더 진보돼 있고 효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은 적용하는 기술

¹¹⁸ 『연합뉴스』, 2010년 12월 17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이 다르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이는 북한과 이란 사이에 핵 커넥션이 없음을 시사함.

2010년 12월 30일에는 북한과 이란 사이의 핵협력 가능성을 암시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이중첩자의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⁹

- <3차 핵실험 공동 실시 가능성>: 일단의 이란 과학자들이 북한에 가서 공동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이란은 상당한 재정적 반대급부를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핵탄두 미사일 탑재 기술 이란에 전수>: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소련 설계방식의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을 북한으로부터 습득했음.
- <북한, 핵실험 자료와 P2 원심분리기 자료 이란에 제공>: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 자료를 이란과 공유했고, 이란의 P2 원심분리기 제조능력을 키우는 데도 기여함. 최근 공개된 북한의 원심분리기 시설은 북한이 이란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농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함.

북한의 HEU 능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2011년 들어서도 계속 제기되었다. 2011년 1월 27일 멀린(Mike Mullen) 미 합참의장은 파이낸셜타임스지(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¹²⁰

¹¹⁹- Reza Kahlili, “Is Iran about to test a nuclear bomb in North Korea?” December 30, 2010, <<http://www.foxnews.com/opinion/>>.

¹²⁰- 『연합뉴스』, 2011년 1월 28일.

- 북한이 억지되지 않을 경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5~10년후에 아주 일상화된 김정일의 도발 위협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며, 그 위협에는 핵역량을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도 포함될 것임.
- 북한은 수 년 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해왔고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기술을 진화시켜 왔음.
- 북한은 우라늄농축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 우리를 놀라게 했으며, 나에게 그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음.

나흘 뒤인 1월 31일 뉴욕타임스지(*New York Times*)는 프랑스가 북한이 이란에 HEU를 수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란의 쿼(Qum)에 숨겨진 비밀 원자료를 발견한 프랑스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란에 수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었다.¹²¹ 더 나아가 2월 10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이란이 우라늄농축 대가로 북한에 20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¹²²

- 북한은 2010년 11월 공개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생산한 농축우라늄을 이란에 제공하는 대신 원심분리기 개발 등을 위한 자금으로 2008년부터 2010년 4월까지 3차례(2008년 3월, 2009년 6월, 2010년 4월)에 걸쳐 20억 달러를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음.
- 이란이 제공한 자금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연구, 개발, 재료구입, 영변 핵시설에 대한 방위태세 강화, 영변 이외의 농축시설 건설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¹²¹- John Vinocur, “Who stands with Iran’s opposition?” *New York Times*, January 31, 2011.

¹²²- 『연합뉴스』, 2011년 2월 10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에 의거해서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가 2011년 5월에 작성한 보고서도 북한의 우리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반대로 전문이 공개되진 못했지만 대북제재위원회의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²³

- 북한이 해커 박사에게 보여준 2,000개는 북한에 의한 확산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도전임. 해커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우리농축을 추진해온 것으로 믿고 있음. 북한의 다른 지역에 저농축 혹은 고농축 우리농 생산을 위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우리농 농축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우리농축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믿으며 북한을 압박해서 우리농축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함.
- 북한은 우리농축의 구실로 삼고 있는 시험용 경수로 건설도 포기해야 함.

2011년 7월 7일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에서 핵개발을 책임진 핵심 인사의 한 명인 전병호가 1988년 7월 15일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보낸 서신도 공개했다. 칸 박사가 공개한 서신은 ‘비밀’ 표기가 되어 있고 전병호의 서명도 들어있는데, 서신을 검토했던 미국의 고위관리는 서신의 내용이 미국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전병호의 서명도 진짜라고 평가했다. 서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⁴

¹²³- “UN experts say North Korea is exporting ballistic missiles to Mideast and South Asia countries,” *Associated Press*, May 17, 2011.

¹²⁴- Jeffrey Smith, “Pakistan’s nuclear-bomb maker says North Korea paid bribes for know-how,” *Washington Post*, July 7, 2011.

- 3백만 달러는 이미 파키스탄 군 장교에게 지불되었고, 50만 달러와 보석은 다른 장교에게 전달되었음. 합의한 문건과 부품 등을 넘겨주기 바람.
- 미사일 부품을 하역하고 북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북한대사관 관리가 탑승할 것임.
- 파키스탄의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고 칸 박사의 건강과 장수 및 건승을 기원함.

2011년 9월 2일에는 IAEA가 대북한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우리농농축에 관련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²⁵

- 34. IAEA가 해커 박사를 면담한 결과,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의 규모와 배치는 칸 박사가 핵밀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한 설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함.
- 35. 북한은 우리농농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일부 기술과 정보를 항목 50에 언급한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했으며, 진공부품, 전자장비, 수치제어장치 동작기계 등 농축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를 광범위한 공급자들로부터 구입하려고 시도함.
- 50. 리비아는 원심분리기 기술과 핵탄두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거래 네트워크로부터 UF6가 담긴 2개의 실린더를 2000년 9월에 구매했고, UF6가 담긴 더 큰 규모의 실린더를 2001년 2월에 구매했다고 2003년 12월 IAEA에 통보함. 밀거래

¹²⁵-IAEA,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V/2011/53-GC(55)/24 (Vienna: IAEA, September 2, 2011).

I
II
III
IV
V
VI
VII
VIII

네트워크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UF6의 총량은 20톤이었음. 2개의 작은 실린더에는 각각 천연우라늄과 감손우라늄이 담겨있었고, 큰 실린더는 천연우라늄을 담고 있었음. IAEA는 세 개의 실린더가 모두 북한을 통해 리비아로 들어온 경로를 파악함. 두 개의 작은 실린더에 담긴 UF6의 출처는 북한이 아니지만 큰 실린더에 담긴 UF6의 출처는 북한일 가능성이 큼. 이는 북한이 2001년 이전에 우라늄 전환 능력을 비밀리에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함.

2011년 10월 19일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 능력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밝혔다.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박 의원이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창군 핵시설 건립 당시 경비를 담당했던 중대장 이기승(52·가명) 중좌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평안북도 동창군 울곡리 지하에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해 가동 중이고, 이곳에서 만든 소형 핵탄두가 사거리 500km 미사일에 장착됐으며, 러시아 제 군용 차량에 탑재돼 이미 강원도 지역에 배치를 끝냈음. 이 중좌는 북한이 이미 2001년에 동창군 핵시설에서 기본 공사를 시작해서 2006년에 완료했다고 밝힘. 북한이 지난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았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동창군의 핵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임.¹²⁶
- 영변은 국제사회의 사찰에 대비한 ‘깡통시설’이고 동창군 울곡리

¹²⁶ 『중앙일보』, 2011년 10월 20일.

시설이 진짜 우라늄 농축시설임. 김정일과 김정은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방문한 동창군 인근의 대관군에 있는 유리공장은 실제로는 ‘301공장’으로 불리는 핵폭탄 운반체를 생산하는 곳이며, 이 공장 인근의 대관군 청계리에 있는 천마산 지하에는 우라늄 제련시설이 있음.¹²⁷

4. HEU 핵탄두 규모와 신형 핵탄두 가능성

가. HEU 핵탄두 규모

북한이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HEU의 양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첫째, 미국의 ISIS는 이 시설에서 연간 26~33kg의 HEU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파키스탄의 P2형 원심분리기 용량 등을 근거로 할 때, 2천 개의 원심분리기라면 연간 33kg의 무기급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으며, 농축비율을 더 낮게 잡으면 연간 26kg의 고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¹²⁸ 반면에 해커 박사는 연간 40kg의 HEU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북한의 원심분리기 1개당 SWU(Separative Work Unit)를 4로 잡고,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연간 8,000SWU 능력을 갖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¹²⁹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 연구는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¹²⁷- 『조선일보』, 2011년 10월 20일.

¹²⁸- 『조선일보』, 2011년 11월 22일.

¹²⁹- Siegfried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p. 7.

I
II
III
IV
V
VI
VII
VIII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2,600대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한다면 매년 농축도 90%의 고농축우라늄을 20kg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¹³⁰ 아울러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으로 내폭형 핵탄두를 만들었기 때문에 HEU를 이용한 내폭형 핵탄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HEU 양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북한이 1, 2차 핵실험에서 목표로 했던 4kt 규모의 내폭형 HEU 핵탄두를 만든다면 10kg 정도의 HEU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2012년 4월 26일 IAEA 사무차장을 역임한 하이노넨은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 2,000대 규모는 연간 3.5% 농축도의 “저농축우라늄”(Low Enriched Uranium: LEU) 1.8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인근에 건설 중인 100MWth LWR의 연간 핵연료 소요량에 부합하는 양이라고 지적했다.¹³¹ 그러면서 북한의 향후 HEU 생산 가능성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핵능력을 평가했다.

- <시나리오 1> 영변 우라늄농축 설비를 LEU 생산시설에서 HEU 생산시설로 전환하고 이미 생산된 LEU를 HEU로 재생산한다. 북한이 추가 원심분리기를 생산할 원자재와 장비가 없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 HEU 생산을 위한 cascade 구성은 LEU 생산과 다르고 원심분리기 상당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며, HEU 생산에 필요한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 <시나리오 2> 원심분리기 1,000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기존

¹³⁰- Hui Zhang, “Assessing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¹³¹- Olli Heinone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Transition,” <<http://38north.org/2012/04/oheinonen042612/>>.

2,000대에 나오는 연간 1.8톤의 LEU를 40kg의 HEU로 전환한다. 농축은 3.5% → 20% → 60% → 90%의 순서로 진행하며, 전체 과정은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5% → 20% 농축에 164개의 원심분리기로 구성된 cascade 4개가 필요하고, 20% → 60% 농축에는 114개의 원심분리기로 구성된 cascade 2개, 60% → 90% 농축에는 64개의 원심분리기로 구성된 cascade 2개가 필요하다.

- <시나리오 3> Khan Production Scheme을 적용해서 HEU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3.5%의 LEU 생산용 원심분리기 2,000대와 HEU 생산용 원심분리기 1,900대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다. 즉 총 4,000대의 원심분리기를 사용해서 매년 3.6톤의 3.5% LEU (UF6)를 생산하고, 이를 HEU로 변환해서 매년 80kg의 HEU를 생산한다. 이는 연간 HEU 핵탄두 4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해커 박사의 현장방문과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작성한 영변의 원심 분리기 시설에 관련된 사진과 그림도 공개된 바 있다.¹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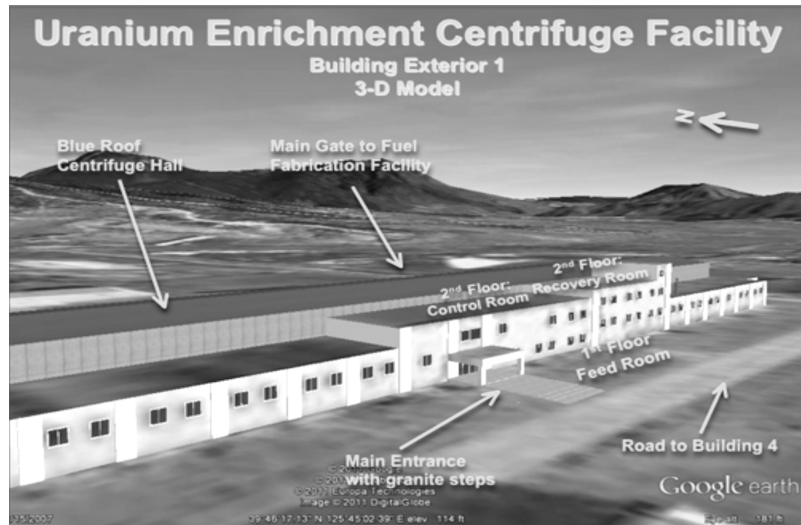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VIII

¹³²-Niko Milonopoulos, *et al.*, "North Korea from 30,000 feet,"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anuary 6,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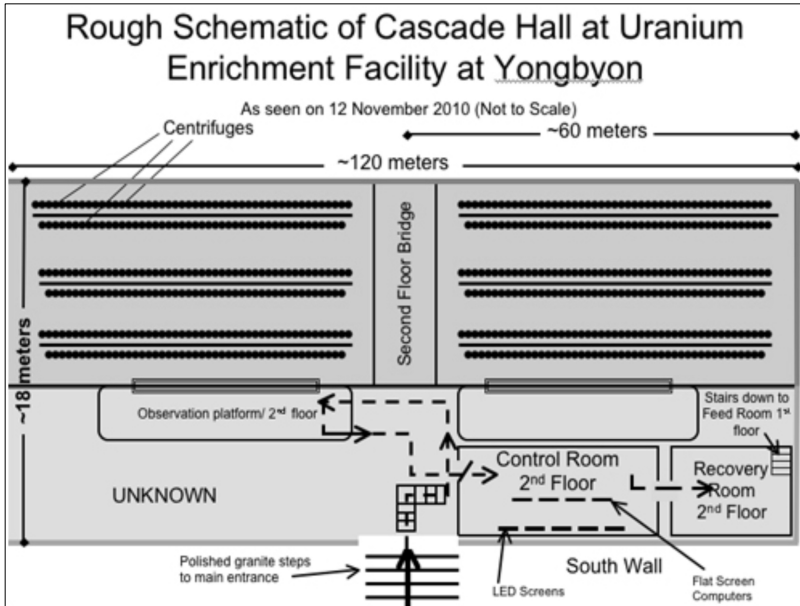
그림 III -1 핵연료제조공장 2009년과 2011년 비교 위성사진



그림 III -2 원심분리기가 들어선 핵연료제조공장의 제4빌딩 3-D 모델



● 그림 III -3 핵연료제조공장 내 원심분리기 시설 Cascade 조감도(추정)



북한이 제3의 장소에 공개하지 않은 원심분리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상기 세 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것은 세 번째이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세트로 판매하고자 했던 HEU 시설 일체형의 경우 모두 5,900대의 원심분리기로 구성되며, Khan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된 핵탄두 설계도는 HEU 20kg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HEU 20kg을 사용하는 핵탄두를 제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1월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한 시점과 위에서 소개한 연간 생산 가능한 HEU 양(최소 20kg, 최대 80kg)을 기준으로 할 때, 2012년 말까지 2년의 시간이 경과하므로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HEU는 40~160kg에 달한다. 여기에 Khan 네트워크의 핵탄두 설계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이 2010년 11월 이후 2012년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말까지 HEU 핵탄두를 2개에서 8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수치는 2012년 5월 2일 정부의 대북소식통이 공개한 북한의 핵개발 비용과 실패와도 별 차이가 없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공개한 영변의 원심분리기 2,000개에서 연간 40kg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해 매년 1, 2개의 우라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외부공개 이전부터 우라늄농축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라늄탄도 지난 3, 4년간 6~8개 만들었을 것으로 예측했다.¹³³

나. 2012년 8월 ISIS 분석치

북한 기술진은 2010년 11월 방북한 해커 박사에게 영변의 우라늄농축 시설이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추고 있으며, 저농축우라늄(LEU) 생산을 막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이 시설에서 3.5% LEU를 생산해온 것으로 보이나 가동 단계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¹³⁴ 북한은 1990년대에 파키스탄의 칸 연구소로부터 LEU 생산용 centrifuge cascade design을 받았다고 한다. 영변시설에는 6개의 cascade가 있고, 각 cascade에 344개의 원심분리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총 2,604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³⁵

영변의 원심분리 시설이 유일한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으며 이 시설이 건설될 수 있었던 경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① 같은 규모로 이미 있는 시설의 경험을 살려 지은 것, ②

¹³³-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2012년 5월 3일.

¹³⁴- David Albright and Christina Walrond, *North Korea'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pp. 14~15.

¹³⁵- *Ibid.*, p. 17.

이미 지어진 것을 옮겨 온 것, ③ 작은 규모로 지은 것을 토대로 크게 지은 것.¹³⁶ 미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무기급 우라늄”(Weapon Grade Uranium: WGU)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한다(무기급 우라늄은 HEU의 다른 표현이다). 2000년대 북한이 10,000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물품을 해외에서 획득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변 원심분리시설보다 대규모의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¹³⁷

2011년을 기준으로 이 시점까지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다섯 개의 시나리오로 분류해서 살펴 볼 수 있다.¹³⁸

- <시나리오 1>: 한 개의 원심분리 시설을 보유하고 2010년 후반에 가동을 시작해서 LEU만 생산함.
- <시나리오 2>: 2009년 이전에 파일럿(pilot) 원심분리 시설을 보유하고 소량의 LEU와 HEU를 생산함. 영변 시설이 유일한 공장 규모 시설이며 여기서는 LEU만 생산함.
- <시나리오 3>: 현재 두 개의 공장규모 원심분리 시설을 보유하고 각각 2,000여 개의 원심분리기 장착함. 제1시설은 2005년부터 가동해서 LEU와 HEU 생산하고 있고, 제2시설은 2008년부터 가동해서 LEU만 생산함. 영변 시설은 제2시설을 옮겨온 것임.
- <시나리오 4>: 각각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장착한 두 개의 공장규모의 원심분리시설을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함. 제1시설은 LEU와 HEU를 생산했는데, 2009년에 가동을 중단하고 영변으로 옮겨왔으며, 옮긴 후에는 LEU만 생산함.

¹³⁶- *Ibid.*, p. 19.

¹³⁷- *Ibid.*

¹³⁸- *Ibid.*, pp. 20~21.

I
II
III
IV
V
VI
VII
VIII

- <시나리오 5>: 2005년 혹은 2008년경에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공장규모의 원심분리시설 한 개를 가동하기 시작함. 이 시설에서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2009년에 영변으로 옮기고 LEU를 생산함. 나머지 1,000개는 LEU를 HEU로 전환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공장 역할을 수행함.

북한의 원심분리기가 모델로 하고 있는 P2 원심분리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원심분리시설이 “무기급 우라늄”(Weapon Grade Uranium: WGU)을 생산하는 효율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¹³⁹

- <Estimate 1>: 4.17kg WGU / 1 year / 1,000 P2 centrifuges
- <Estimate 2>: 11.3kg WGU / 1 year / 1,000 P2 centrifuges
- <Estimate 3>: 17.0kg WGU / 1 year / 1,000 P2 centrifuges

위의 시나리오와 WGU의 생산효율을 근거로 ISIS는 북한이 2011년까지 생산했을 수 있는 총량을 다음 <표 III-4>에서와 같이 추정했다.¹⁴⁰

¹³⁹- *Ibid.*, p. 24. 무기급 우라늄은 고농축우라늄(HEU)의 다른 표현이다.

¹⁴⁰- *Ibid.*, p. 35.

표 III-4 Estimated Possible Stocks of WGU, through 2011

Scenario	WGU (kg)		
	Estimate 1	Estimate 2	Estimate 3
1. North Korean declaration (Yongbyon plant only)	0	0	0
2. Yongbyon plant plus pilot plant	kg quantities		
3. Two centrifuge plants: Yongbyon and undeclared one Each with 2,000 P2 centrifuges			
a) Yongbyon LEU only and other made WGU since 2008	33	90	136
b) same as (a) but start of WGU production is 2005	54	147	221
4. Two centrifuge plants, each with 2,000 centrifuges, operating sequentially, first one from 2005 until 2009, when centrifuges moved to Yongbyon. WGU production through 2009; LEU only afterwards	38	102	153
5. Two centrifuge plants, first one with 3,000 centrifuges, 2,000 of which were moved to Yongbyon in 2009 (has operated as a unit to make WGU)			
a. Start date 2008	50	135	204
b. Start date 2005	81	220	332

ISIS는 HEU 핵탄두의 경우 설계방식에 따라서 대략 15~25kg의 HEU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중간수치인 20kg을 기준으로 상기 5개 시나리오에 따라 생산된 HEU를 이용해 북한이 2011년까지 보유했을 수 있는 HEU 핵탄두의 수를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Weapons-Worth) 추정했다.¹⁴¹

표 III -5 Total Fissile Material Stocks, end of 2011

	Amount (kg)	Weapons-Worth
Plutonium	34~36	12 (6~18)
Weapon-Grade Uranium		
Scenario 1	0	0
Scenario 2	kg quantities	0
Scenario 3		
a) 2008	90 (33~136)	4 (1~7)
b) 2005	147 (54~221)	7 (2~11)
Scenario 4	102 (38~153)	5 (1~8)
Scenario 5		
a) 2008	135 (50~204)	6 (2~10)
b) 2005	220 (81~332)	11 (4~17)
	Subtotal	0~11
	Total	12~23 (central estimate)

Note: Figures are central estimate with range in parenthesis.

ISIS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북한이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WGU의 양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정했다.¹⁴²

- 시나리오 A: 영변 원심분리시설이 유일한 시설이며 2012년부터 2,000개의 P2로 WGU을 생산함.
- 시나리오 B: 영변과 비밀 장소에 각각 2,000개의 P2로 구성된 원심분리 시설 존재하며 2012년부터 WGU을 생산함.
- 여기에 추가해서 북한의 원심분리기 프로그램의 성장 추세를 반영

¹⁴¹- *Ibid.*, p. 38.

¹⁴²- *Ibid.*, pp. 25~26.

하여, 2014년부터 매년 1,000개의 P2를 추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즉 2014년에 시나리오 A는 P2가 3,000개, B는 P2가 5,000개 됨.

각각의 시나리오 별로 2012년 말과 2016년 말 북한이 보유하게 될
WGU의 양과 핵탄두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¹⁴³

- 시나리오 A: 2012년 말, 8~34(23)kg WGU, 0~1(1)개 핵탄두
2016년 말, 67~272(181)kg WGU, 3~13(9)개 핵탄두
- 시나리오 B: 2012년 말, 17~68(45)kg WGU, 0~3(2)개 핵탄두
2016년 말, 108~442(294)kg WGU, 5~22(14)개 핵탄두
- 시나리오 A, B의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기간 생산되는 WGU와
핵탄두의 중간치를 나타냄.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되어 축적되는 WGU의 양
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면 다음의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다.¹⁴⁴

I
II
III
IV
V
VI
VII
VIII

¹⁴³- *Ibid.*

¹⁴⁴- *Ibid.*, p. 36.

표 III -6 Projected Maximum Cumulative Stocks of WGU
Produced 2012~2016

Scenario	WGU Cumulative (kg)				
	2012	2013	2014	2015	2016
A. Yongbyon plant only, 2,000 centrifuges in 2012 and 2013, then increasing in 2014 at rate of 1,000 per year					
Estimate 1	8.3	17	29	46	67
Estimate 2	23	45	79	124	181
Estimate 3	34	68	119	187	272
B. Two centrifuge plants: Yongbyon and undeclared one, each with 2,000 P2 centrifuges in 2012 and 2013, then increasing in 2014 at rate of 1,000 per year					
Estimate 1	17	33	54	79	108
Estimate 2	45	90	147	214	294
Estimate 3	68	136	221	323	442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되어 축적되는 WGU의 양을 바탕으로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HEU 핵탄두의 양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면 <표 III-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7>은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핵탄두 12개와 2011년 말까지 북한이 보유했을 수 있는 HEU 핵탄두 추정치 0~11개 그리고 2012년부터 생산되는 WGU으로 추가 제조하는 핵탄두를 포괄하는 총 핵탄두 보유수를 표시하고 있다.¹⁴⁵ WGU 핵탄두의 경우, 북한이 원심분리시설에서 생산한 모든 농축우라늄을 무기로 전용하고 시험용 경수로의 핵연료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표 III -7 Mid-Range Estimates of Cumulative Nuclear Weapons Equivalents

	Cumulativ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No LEU provided to the LWR; WGU production only						
Scenario A						
W.G. Plutonium	12	12	12	12	12	12
WGU produced to 2012	0~11	0~11	0~11	0~11	0~11	0~11
WGU produced afterwards	-	1	2	4	6	9
Total	12~23	13~24	14~25	16~27	18~29	21~32
Scenario B						
W.G. Plutonium	12	12	12	12	12	12
WGU produced to 2012	0~11	0~11	0~11	0~11	0~11	0~11
WGU produced afterwards	-	2	4	7	10	14
Total	12~23	14~25	16~27	19~30	22~33	26~37

다. 신형 핵탄두 가능성

북한이 순수한 HEU 핵탄두가 아니라 초보적인 핵융합 기술을 적용한 “증폭 핵탄두”(boosted nuclear warhead, boosted fission weapon)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핵융합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한 2010년 5월 12일자 로동신문 보도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⁴⁶

¹⁴⁵- *Ibid.*, p. 39.

¹⁴⁶- 『조선중앙통신』, 2010년 5월 12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태양절을 맞는 뜻 깊은 시기에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핵융합의 성공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의 첨단과학기술의 면모를 과시하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 …… 조선의 과학자들은 핵융합기술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은 속에서도 우리의 과학자들은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없이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100% 자체의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핵융합반응에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 기술 역량이 마련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핵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핵융합 기술을 적용해서 증폭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한 해당 연구의 분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¹⁴⁷

1. “순수핵융합무기”(Pure Fusion Weapon): 북한 기술로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도 없음.
2. “2단계 열핵무기”(2-stage Thermonuclear Weapon, Hydrogen Bomb): 북한 기술로 불가능함. 원자탄에서 수소탄으로 가장 빨리 넘어간 나라인 중국의 경우 6번째 실험을 수소폭탄으로 실시해서 성공했음. 인도의 1998년 수소폭탄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보임.
3. 중수소와 3중수소를 이용해서 폭발력을 높인 “증폭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북한의 기술로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음.

¹⁴⁷- Jeffrey Lewis, “Can North Korea Build the H-Bomb?” <<http://38north.org/2010/06/>>.

- <3a. 두테륨(deuterium: D)과 트리튬(tritium: T) 혼합 가스 사용>: 두테륨과 트리튬을 혼합한 연료를 사용해서 핵탄두의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널리 알려진 방식임.
- <3b. 리튬-6 중수소화물(lithium-6 deuteride)의 외피를 사용>: 북한 기술로 가능하며 이스라엘도 이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미국(Alarm Clock), 영국(Green Bamboo), 소련(Layer Cake)의 핵탄두도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설계 방법을 사용함.

증폭 핵탄두를 완성하는 데는 몇 차례의 실험이 필요한데, 중국의 경우 세 번 만에 성공했고, 파키스탄은 첫 날 핵실험에서 증폭 핵탄두를 실험했다. 증폭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리튬이나 리튬-6 중수소화물이 필요하며 이들의 반감기는 12.4년으로서 원자로에서 생산해야 한다. 북한이 증폭 핵탄두 개발에 성공하면 수십kt에서 수백kt에 달하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평가이다.

증폭핵탄두는 핵탄두 코아의 두테륨과 트리튬이 폭발시의 고압·고열로 융합해서 헬륨을 만들고 중성자를 방출하는데, 이 중성자들이 각각 새로운 핵분열 연쇄반응을 유도하면서 핵분열을 가속화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통상 핵분열 탄두의 경우 핵폭발시 핵분열물질이 팽창하면서 연쇄반응을 멈추게 되고, 이 경우 핵분열 물질이 다 연소되지 않고 낭비되는데, Boosting은 이런 낭비를 없애므로써 핵분열 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Boosting은 핵분열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두 배 이상 늘일 수 있다.¹⁴⁸

구체적으로 증폭핵탄두는 트리튬과 두테륨을 ‘50 : 50’으로 섞은

¹⁴⁸- <http://en.wikipedai.org/wiki/Nuclear_weapon_design>.

I
II
III
IV
V
VI
VII
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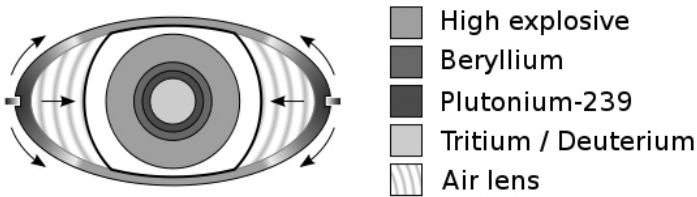
가스를 코아(혹은 pit) 내부로 주입해서 만든다. 핵탄두 폭발로 핵분열이 시작된 직후 두 가스가 헬륨으로 융합되고 다량의 중성자를 방출하고, 이 중성자들이 새로운 핵분열을 일으킨다. 최초의 증폭핵탄두는 1951년 5월 25일 실험한 45.5kt 규모의 Eniwetok이다. Boosting은 핵분열을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다음 세 방법으로 핵탄두의 지름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소형화·경량화를 가능하게 만든다.¹⁴⁹

- ① 무거운 U238 tamper 대신에 가벼운 beryllium shell을 사용함,
- ② 같은 파괴력이라도 코아의 중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음,
- ③ tamper와 pit를 합한 무게가 줄어들므로 핵분열 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재래식 폭약의 양이 줄어듦.

이상의 요인들이 모두 탄두 중량과 지름 감소에 기여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III-4>는 미국의 증폭 핵탄두인 Swan Device 모형이다 (지름 29.5cm, 길이 58cm).¹⁵⁰

그림 III -4 증폭 핵탄두 설계 모형

U.S. Swan Device - 1956



¹⁴⁹- Ibid.

¹⁵⁰- Ibid.

소형화, 경량화 및 더 적은 핵물질 사용에 더해서 boosting의 장점으로 추가할 것은 핵탄두를 Radiation Interference(RI)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플루토늄 pit이 주변의 핵폭발로 발생한 방사능에 영향을 받으면 “부분적인 사전 폭발”(partial pre-detonation)이 발생할 수 있는데, boosting 핵탄두는 플루토늄의 양을 줄여서 RI로부터 영향받을 가능성을 줄인다.

두테륨과 트리튬의 핵융합으로 생성된 중성자는 보통의 핵분열로 생성되는 중성자에 비해 7배나 활동적이며, 그 만큼 더 많은 핵분열을 촉진하는 데, 활동적인 중성자가 충돌하므로 더 많은 이차 중성자를 생성하게 된다.¹⁵¹ 1kt 규모의 내폭형 핵탄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 양은 각각 플루토늄 1~2kg이고 HEU 5~10kg으로 본다. Boosting은 1943년 미국의 핵과학자 텔러(Edward Teller)가 개발했고, 현재 미국 핵무기의 90%가 boosting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¹⁵²

5. 3차 핵실험 가능성과 전략

가. 3차 핵실험 가능성과 예상 유형

북한이 2013년 초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 시기는 동북아의 정세가 불안정할 수 있는 안보적 취약기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추가 핵실험의 목적을 요약하면, 대내적으로 2012년 4월 개정 헌법에 김정일

¹⁵¹- <http://en.wikipedai.org/wiki/Boosted_fission_weapon>.

¹⁵²- <<http://www.britannica.com>>.

I
II
III
IV
V
VI
VII
VIII

의 업적으로 명시한 ‘핵보유국’ 지위를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굳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 북한’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시키고 새로 출범하는 한-미 정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징후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¹⁵³ 2010년 2월 2일 블레이어(Dennis Blair) 미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 국장은 연례위협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의 1차 핵실험은 규모가 1kt도 안되는 부분성공이지만 북한이 핵장치를 만들었다는 미국의 오랜 평가와 일치했고, 수 kt의 파괴력을 보여준 2차 핵실험은 2006년 때보다 더 성공적이었으며, 3차 핵실험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¹⁵⁴ 2010년 11월 16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 주변에서 차량의 이동과 시설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모습과 갱도를 파면서 나온 토석류가 폭 12m에 걸쳐 쌓여있는 것도 확인되었다.¹⁵⁵ 2011년 들어서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러 개의 지하갱도를 추가로 굴착했고, 추가 갱도는 500~1,000m 깊이의 L자 형 모양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있었다.¹⁵⁶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전문가도 제10차 상그릴라 대화에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핵폭탄을 이용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이나 미국은 이런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저지하지 못할 것이고, 북한은 절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⁵⁷ 2012년

153- 전성훈,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국제정세·남북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제52권 제2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2).

154- Dennis Blair,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or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February 2, 2010, <www.dni.gov/files/documents/Newsroom/Testimonies/20100202_testimony.pdf>.

155- 『연합뉴스』, 2010년 11월 17일.

156- 『동아일보』, 2011년 2월 21일.

157- 『국민일보』, 2011년 6월 7일.

4월 초 우리 군 당국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새로운 남쪽 갱도 인근에 외부에서 반입한 토사를 관측했고,¹⁵⁸ 4월 20일에는 일본 후지TV의 온라인 뉴스가 일본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3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¹⁵⁹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는 해커(Siegfried Hecker) 박사는 북한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2주 안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⁶⁰

3차 핵실험은 한 차례씩 실시했던 과거의 핵실험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핵탄두를 대상으로 복수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 5월 중순(11일, 13일)과¹⁶¹ 하순(28일, 30일)에¹⁶² 각각 다섯 차례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연쇄적으로 실시한 후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플루토늄 핵탄두, HEU 핵탄두 및 증폭 핵탄두를 개별적으로 실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인 증폭 핵탄두와 HEU 핵탄두를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 연쇄적으로 실험하는 것이다. 해커 박사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복수의 실험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는 북한이 HEU와 플루토늄 핵탄두를 각각 실험할 것으로 추정했다.¹⁶³

158- 『한국일보』, 2012년 4월 9일.

159- 『서울신문』, 2012년 4월 21일.

160- Frank Pabian and Siegfried Hecker, “Contemplating a Third Nuclear Test in Nor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ugust 6, 2012).

161- *Nuclear Weapons*, Federation of Atomic Scientists, 2011년 6월 24일, <www.fas.org/nuke/guide/india/nuke/>.

162- *Pakistan Nuclear Weapons: A Brief History of Pakistan’s Nuclear Program*, Federation of Atomic Scientists, 2011년 4월 23일, <www.fas.org/nuke/guide/pakistan/nuke/>.

163- Frank Pabian and Siegfried Hecker, “Contemplating a Third Nuclear Test

I
II
III
IV
V
VI
VII
VIII

나. 3차 핵실험 이후의 핵전략

북한은 3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핵전략을 선보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에 맞설 수 있는 “최소 억지력”(minimal deterrence)을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추가 핵실험 유예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쌍방 핵군축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실험 전면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CTBT 가입과 추가 핵개발 중지를 향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추진할 수 있는 핵전략의 윤곽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¹⁶⁴

(1) 플루토늄 핵능력 동결, HEU 잠재력 유지

3차 핵실험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자신감을 확보한 후 북한이 취할 핵전략의 기본 노선은 플루토늄 핵능력을 동결하면서 동시에 HEU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협상에서 동북아 주둔 미군의 존재와 한·미 동맹 및 미국의 對韓 핵우산을 안보위협으로 내세우며 ‘완전한 핵포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in North Korea.”

¹⁶⁴ 아래의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의 관련 부분을 발췌·보완한 것이다. 전성훈, “북한의 3차 핵실험 전후 대책,” 『전략연구』, 제XVIII권 제2호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년 7월), pp. 135~137.

1. 플루토늄 핵무기의 추가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 보유한 선에서 플루토늄 핵능력을 “동결”(Freeze)한다.
2. 추가 핵실험을 중단한다.
3. “핵실험 전면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용의를 표명한다.
4. 제3국으로 핵기술과 핵물질을 확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5. 2010년 11월 공개한 원심분리기 시설은 시험용 경수로의 핵연료 생산을 위한 평화적인 원자력시설이므로 북핵폐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시설이 평화적인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IAEA의 사찰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선언한다.

북한은 이러한 제안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대폭 감축, 對韓 핵우산 철회 등 미국의 대북한 위협제거 조치와 관계정상화 및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3의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원심분리기 시설에서는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을 계속 생산할 것이다. 결국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전략은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동시에 민수용 원자력시설까지 보유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와 원자력을 동시에 손에 쥐겠다는 ‘일거양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북·미 핵군축 추진

이와 동시에, 북한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미국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며 북·미 쌍방 간의 핵군축 회담을 제의할 것이다. 핵군축 회담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의 와해이다. 북한 정권의 주한미군 철수 의지는 집요한데, 핵이 없었던 1980년대까지는 재래식 전력 감축을 매개로 주한 미군과 핵 철수를 주장했었지만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나서는 것이다. 북한은 지

I
II
III
IV
V
VI
VII
VIII

금도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남한을 세계 최악의 핵전쟁 위험지역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⁶⁵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한 2005년 2월 10일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인 3월 31일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담화’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담화는 핵보유국임을 최초로 공식 선언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자산으로 구사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¹⁶⁶

1. 이제 와서 미국은 저들의 핵위협은 뒷전에 밀어놓고 우리만 핵무기를 내놓으면 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처럼 비핵화의 본질을 오도해 나서고 있다.
2.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남조선에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자체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 …… 이와 함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일체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핵위협 공간을 청산해야 하며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주변나라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되어야 한다.

6. ‘핵보유국 북한’ 호칭을 둘러싼 논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Weapon

¹⁶⁵- 가장 최근의 문건으로는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비난하며 북한의 조선반핵평화위원회가 발표한 백서를 들 수 있다. “남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핵화약고, 핵전쟁 발원지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14일.

¹⁶⁶- 『조선중앙방송』, 2005년 3월 31일.

State)로 부르기를 주저하는 견해가 많다. 북한을 NPT 상에서 허용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반면 핵폐기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미국의 주요 관리와 공식문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호칭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불러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던 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제1항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호칭과 관련해서 표명된 입장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미국의 당국자와 관련 문건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핵보유국 호칭을 자주 사용한 반면, 한국은 매번 이런 호칭이 야기할 파장을 우려해서 서둘러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김일성의 교시이자 기존의 정책이었던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외무성 성명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¹⁶⁷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

¹⁶⁷. 『조선중앙방송』, 2005년 2월 10일.

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선언이 나온 지 나흘 뒤인 2월 14일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이 2003년 4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최초 발언한 이후 공식 비공식 핵보유 주장이 열 차례가 넘는다면서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이를 공식 선언이 아닌 ‘핵보유 공식주장’이라고 규정한다”, “북한을 핵 보유국가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 보유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Neither Confirm Nor Deny: NCND)을 유지하다가 핵 실험을 통해 외부에 확인됐는데, 북한의 이런 주장은 전례도 없고 실체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강경론자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 해도 그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¹⁶⁸

2005년 8월 23일 당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사무차장은 모스크바 방문 중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당국은 과거와 달리 핵 동결이 아닌 핵 포기를 (회담의)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기존 핵시설을 포함해 (향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등을 전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자력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축 및 재처리시설이 없으면 핵무기

¹⁶⁸ 『연합뉴스』, 2005년 2월 14일.

개발은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도 핵 보유국으로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⁶⁹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던 2006년 10월 4일 당시 미국측 6자회담 대표이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⁷⁰ 그는 “북한이 핵을 갖고,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면서 “북한이 이런 장치(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것은 끔찍한 도발행위로 우리는 북한이 이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을 가진 북한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핵과 미래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에게 핵실험을 하는 것이 엄청난 실수임을 깨닫게 할 것이며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은) 미래에 자신들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든 자동적으로 핵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당시 한나라당은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¹⁷¹

¹⁶⁹- 『연합뉴스』, 2005년 8월 23일.

¹⁷⁰- 『연합뉴스』, 2006년 10월 5일; David Sanger and Jim Yardley, “U.S. warns North Koreans about nuclear-weapon test,” *New York Times*, October 5, 2006.

¹⁷¹- 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북한핵실험을 규탄한다,” 2006년 10월 9일, <<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delegationBriefing/mainDelegateBriefingView.do>>.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이며 한반도 전쟁에 버금가는 극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무모한 행동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온 노무현정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음을 밝혀둔다. ……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게 되었다. 피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야를 초월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즉각 안보내각을 구성해서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북한 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야당과 공유하면서 미증유의 한반도 위기사태를 헤쳐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증권, 금융, 수출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즉각 마련해야 한다.

2007년 3월 21일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대 정외과 총동창회 강연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한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다고 누구도 생각 안 한다. 핵보유국이라고 인정도 안 한다. 실무당국자로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견해를 갖고 있다.”¹⁷²

한편 미국에서는 2008년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Barack Obama) 후보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¹⁷³ 예를 들어, 오바마는 2007년 10월 2일 시카고 유세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이 핵무장국가 클럽에 합류했고, 이란은 (핵클럽의) 문을 두드리

172. 『동아일보』, 2007년 3월 22일.

173. 『연합뉴스』, 2008년 12월 11일.

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23일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핵무기와 핵 시스템(핵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거가 끝난 후인 2008년 12월 1일 차기 미 행정부 외교안보팀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과 이란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8년 12월 초에는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이 포린어 페어스지(*Foreign Affairs*) 2009년 1·2월 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⁷⁴ 이 글은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작성한 것으로서 자신이 국방장관직을 그만 둘 것으로 전제하고 솔직하게 쓴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게이츠 장관은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고, 이란은 핵클럽 가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¹⁷⁵ 북한이 제조한 핵폭탄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인지 등 북한의 핵능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가 북한의 핵폭탄 제조를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2008년 11월에 발간한 세계경향에 관한 보고서도 핵을 가진 북한의 내부불안이 야기할 위험을 경고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했다.¹⁷⁶ 미 국가정보위원회는

174. 『연합뉴스』, 2008년 12월 11일.

175.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addition, there is the potentially toxic mix of rogue nations, terrorist groups, and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North Korea has built several bombs, and Iran seeks to join the nuclear club.” Robert M. Gates,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9), <<http://www.foreignaffairs.org/20090101faessay88103/robert-m-gates/a-balanced-strategy.html>>.

같은 해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중국, 인도, 러시아와 함께 핵보유국으로 명시했다.¹⁷⁷

2008년 12월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nited States Joint Forces Command: USJFCOM)가 발간한 보고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했다. 보고서는 32페이지에 태평양 및 인도양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면서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차례로 명기했다. 또한 39페이지에서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했다면서 이스라엘에서 북한, 러시아까지 핵보유국의 띠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¹⁷⁸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자 합동군사령부는 12월 10일 보고서가 “공식적인 미국 정부

¹⁷⁶-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ossibility of a future disruptive regime change or collapse occurring in a nuclear weapon state such as North Korea also continues to raise questions regarding the ability of weak states to control and secure their nuclear arsenals.” *Global Trend 2025: A Transformed World* (NIC 2008-003, November 2008), p. x, <<http://www.acus.org/publication/global-trends-2025-transformed-world>>.

¹⁷⁷-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China, India, North Korea, and Russia possess nuclear weapons, while Iran is an aspiring nuclear power.”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ICA 2008-10D, *Strategic Implications of Global Health* (December 2008), p. 37.

¹⁷⁸-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 China, India, Pakistan, North Korea, and Russia” (p. 32); “North Korea has tested a nuclear weapon and has produced sufficient fissile material to create more such weapons... In effect, there is a growing arc of nuclear powers running from Israel in the west through an emerging Iran to Pakistan, India, and on to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in the east”(p. 37). *The JOE: The Joint Operating Environment 2008: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oint Force* (Suffolk, VA: United States Joint Forces Command, 2008), <<https://us.jfcom.mil/sites/J5/j59/default.aspx>>.

의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합동군사령부는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는 32페이지에 핵보유국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다. 북한에 관한 언급내용은 (핵과 관련된) 북한의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합동군사령부는 또 “주미한국대사관에도 이와 같은 점을 이미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¹⁷⁹ 반면에 북한은 합동군사령부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¹⁸⁰

미국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발표하였다. 최근 발표된 미 국방성 연례보고서는 아시아대륙에 이미 5개의 핵무기보유국들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 인디아, 파키스탄, 조선, 러시아를 차례로 밝혔다. 미국이 정부보고서에서 조선을 핵무기보유국으로 공식인정하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된다.

2009년 1월 13일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는 미주 한인회와 한미경제연구소창립 기념식에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계속 비랑 끝 전략을 통해 핵불능화 이행과 검증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려고 시도”하겠지만 “이런 일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⁸¹

179. 『연합뉴스』, 2008년 12월 11일.

180. 『조선중앙통신』, 2008년 12월 10일.

181. 『연합뉴스』, 2009년 1월 14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2009년 4월 20일 당시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을 포함, 9개국을 핵보유국으로 거명하면서 “북한이 핵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나는 어느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¹⁸² 그러나 미 정부 당국자들은 엘바라데이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5월 1일 세이모어 백악관 WMD 정책조정관은 브루킹스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대답도 “노(NO)”라고 강조했다.¹⁸³ 같은 해 5월 30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핵 등 여러 가지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의 행위는 미국과 그 우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한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⁸⁴ 같은 해 8월 원자력 관련 학술지는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북한에 대해 잠정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북한이 운반수단인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제조한 핵무기를 포기하며 핵능력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는 대신 플루토늄 자체는 “가상 핵무기”(virtual bomb)로서 보유하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이었다.¹⁸⁵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26일 AP, 로이터 및 다우존스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래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핵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182- 『연합뉴스』, 2009년 4월 21일.

183-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4일, p. 4.

184- 『연합뉴스』, 2009년 5월 30일.

185- Hugh Gusterson, “Thinking Creatively about the North Korean Stalemat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ugust 12, 2009).

북핵폐기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아울러 “핵무기를 비밀리에 일본이 만들고 또 대한민국이 만들어도, 만들기만 하면 나중에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¹⁸⁶

2010년 3월 30일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은 G-8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정권으로 칭했다.¹⁸⁷ 같은 해 4월 21일 세이모어 백악관 WMD 정책조정관은 카아네기재단 연설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면서 이는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¹⁸⁸ 미 국무부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사이드(Ferial Ara Saeed)는 2010년 9월 국방대학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추가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분간 북한이 현재까지 개발한 핵무기의 보유를 용인하는 소위 “협상에 의한 북핵 중단”(negotiated nuclear pause) 방안을 주장했다.¹⁸⁹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의 핵능력을 용인하는 대가로 추가 핵능력 개발을

¹⁸⁶- 『연합뉴스』, 2009년 9월 27일.

¹⁸⁷-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recognize the new threats that are coming that are aimed at both of our countries, at Europe, at the Middle East and elsewhere from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that already has nuclear weapons, and regimes like that in Iran that are clearly seeking nuclear weapons. *Remarks With G-8 Foreign Ministers After Their Ministerial Meetings*,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Gatineau, Quebec, Canada, March 30,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0/03/139287.htm>>.

¹⁸⁸- 『연합뉴스』, 2010년 4월 22일.

¹⁸⁹- Ferial Ara Saeed, *Redefining Success: Applying Lessons in Nuclear Diplomacy from North Korea to Iran*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eptember 2010).

막고 사찰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2011년 1월 29일 연쉐통(閻學通) 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중국은 러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핵 보유국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관계”라고 말했다.¹⁹⁰ 정몽준 의원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2011년 3월 29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가진 특강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¹⁹¹

이런 이유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일부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전술핵무기는 1993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 자발적으로 철수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이 선언을 위반하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과의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되는 협상에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제거는 포기한 채 북한 핵무기 비확산에 만족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핵 카드(counter-nuclear force)만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억제 시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북한에게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보유국입니다.

정몽준 의원은 북한이 개정헌법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을

¹⁹⁰ 『연합뉴스』, 2011년 1월 30일.

¹⁹¹ 『연합뉴스』, 2011년 3월 30일; 정몽준의원실 특강 원고.

김정일의 유산으로 명기하자, 전술핵 재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기한 이상 협상을 통한 핵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¹⁹² 2012년 1월 한 국책연구기관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보고서를 발간하자 통일부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러한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¹⁹³

I

II

III

IV

V

VI

VII

VIII

¹⁹² 『조선일보』, 2012년 6월 4일.

¹⁹³ 『한겨레』, 2012년 2월 1일.

IV. 실체적인 북한의 핵위협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보유했다고 해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공격과 방어 차원의 적절한 대응능력은 상대방의 무력이 커다란 군사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공·수 양면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이 핵위협으로 실체화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느끼는 위협은 정치·심리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정치·심리적 위협¹⁹⁴

가. 정치·심리적 대남 협박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발표한 이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했고, 이를 토대로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은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전반적인 국력상승에 대응하는 대항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남한의 월등한 국력이 야기하는 체제위협 효과를 상쇄하면서 남한과의 체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루이자 대남 압박을 통해서 정치·경제적 실리를 획득할 수 있는 카드이다. 아울러 핵무기는 남북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위협을 구실로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이를 대남 정치·심리적 협박에 사용하면서 남남갈등을 부

¹⁹⁴ 전성훈, “북한의 핵위협 재평가와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pp. 67~74.

추기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남위협을 강화하면서 위협수준을 “서울 불바다”(1994년 남북대표회담에서 박영수 발언)에서 “남한 잿더미”로 격상시키고, 각종 대남 위협성명을 통해 수시로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의 논평에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¹⁹⁵ 2008년 10월 28일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은 “괴뢰당국은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위에 자주적인 통일조국을 세우는 정의의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⁹⁶ 2008년 12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¹⁹⁷

남조선의 호전광들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타격수단에 의거한 우리 식의 선제타격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위에 통일조국을 세우는 가장 단호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대남 비방과 협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왔고, 2012년 들어서 그 수위가 극에 달해 남은 것은 행동밖

195- “남조선군 당국자들은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08년 3월 30일.

196- 『조선중앙통신』, 2008년 10월 28일.

197- 『로동신문』, 2008년 12월 23일.

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다. 한국의 지도부를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하는 것은 일상화된 지 오래됐고, 말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은 다 나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김정일 빈소에 대한 조문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전 군에 경계령을 내린 것을 두고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민족의 대국상’ 앞에서 애도를 표시하지는 못할망정 불경죄를 범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011년 12월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¹⁹⁸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각계층의 조의방문길을 악랄하게 가로막아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저들의 반인륜적 망동을 원칙훼손이니, 남남갈등 유발이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 않는 궤변으로 변명하며 조문열기를 무마시켜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 우리 인민은 17년 전 민족의 아버이를 잃고 비애에 몸부림치는 겨레의 가슴에 칼질을 한 김영삼 역도의 반민족적죄악에 대해 오늘도 치를 떨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 각계층의 조의방문길을 막아나서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우리의 최고 존엄을 엄중히 모독하는 특대형범죄자로 낙인하고 두고두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2월 28일 김정일의 영결식과 29일 중앙추도대회를 마친 다음날인 12월 30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민족의 대국상 앞에 만고대죄를 저지른 남한 정부를 끝까지 결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¹⁹⁹

민족이 겪고 있는 이번 대국상 앞에 유독 남조선 괴뢰들만은 천 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대역죄를 저질렀다. 조선민주주의인

¹⁹⁸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25일.

¹⁹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0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먼저 이번에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한 악행의 진상부터 세계와 민족 앞에 밝힌다. …… 우리의 중대보도가 나가기 바쁘게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해외대표부들까지 비상근무태세로 이전시키면서 마치 바라던 긴급사태가 도래한 것처럼, 우리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호기라도 온 것처럼 분주탕을 피웠다. 괴뢰 륭·해·공군부대들에는 경계비상과 전투비상을 하달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전쟁전야의 충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30여개의 우익보수반동단체들을 전연에 내몰아 여러 차에 걸쳐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소요를 선동하는 내용의 반공화국빠라까지 살포하는 광기를 부리었다. …… 미 선포한대로 리○○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역적패당의 만고대죄는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흘리는 피눈물의 바다는 그것이 그대로 역적패당을 끝까지 따라가 씨도 없이 태워버리는 복수의 불바다가 될 것이며 터지는 곡성은 괴뢰들의 아성을 짓부수는 복수의 포성으로 될 것이다.

12월 31일 조평통은 우리 정부의 비상조치 발동과 선별 조문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다시 발표했다.²⁰⁰

괴뢰역적패당은 우리의 중대보도가 나가자마자 괴뢰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청와대와 행정부처들을 비상근무태세에 돌입시키는 한편 북지도부와 주민분리대응을 운운하면서 무엄하게도 우리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흔들어보려고 온갖 음흉한 술책에 매달렸다. 역적패당은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의 조의방문을 가로막고 조의문을 가로채어 칼질을 하며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마저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을 뿐 아니라 리희호, 현정은 일행의 조의방문에 동행하려던 6·15 핵심관계자들을 강압적으로 폐농아 끝끝내 오지 못하게 하였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의 피터지는 분노를 대변하여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리○○패당이 만고대죄를 사죄하지 않는한

²⁰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1일.

부득불 최후결판을 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단호히 천명한다.

조평통은 2012년 1월 5일자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핵포기시 경제지원 의사를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핵보유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²⁰¹

민족의 대국상에 저지른 반인륜적이며 반민족적인 대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파렴치한 꾀변이며 동족대결흥심을 변함없이 드러낸 또 하나의 극악무도한 도발이다. 이번에 역도가 그 무슨 큰 변화니 뭐니 하고 떠든 것은 아직도 체제대결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의 가소로운 녀두리이다. …… 민족의 대국상에 온 겨레가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세계가 우리 인민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고 칼부림을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망나니 짓을 감행한 천하야만의 무리들이 그 무슨 진정성에 대해 운운하고 평화와 안정, 협력과 대화에 대해 떠드는 것이야 말로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 ……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이며 핵억제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혁명유산이다. 이 귀중한 혁명유산을 그 무슨 지원 따위로 흥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오산에 불과하다. 우리는 원수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 외무성 산하 평화군축연구소는 2012년 1월 20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²⁰²

201-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89호,”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5일.

202- ““리명박 정권’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교란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20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리명박 정권은 집권 4년간 6·15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낙인하면서 흡수통일을 대북정책의 대전제로 삼고 우리의 그 무슨 급변사태를 노린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대북정책과 전략이 북과 남사이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후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킨 사태가 연쇄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만들고 비핵화과정에도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는데 그 후과의 엄중성과 심각성이 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월 1일 남한 당국에 대해 9개 항의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면서 남한의 정책변화 가능성을 따져물었다.²⁰³

1. 우리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사죄할 결심이 되어 있는가.
2.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리행할 의지를 내외에 공식 표명하겠는가.
3.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결코 우리를 더 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할 수 있는가.
4. 우리를 과녁으로 삼고 벌리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할 정책적 결단을 내리겠는가.
5.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발을 잠글 결심이 되어있는가.
6. 악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
7. 북남협력과 교류를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번영과 공리공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재개하고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가.
8.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에 호응해 나설 수 있는가.
9.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들을 즉시 철폐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²⁰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1일.

2012년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훈련이 개시되는 때에 맞춰 조평통은 2월 4일 한·미 훈련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²⁰⁴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슬픔이 미처 가셔지기도 전에 괴뢰패당이 미국과 결탁하여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천하 야만행위로서 리○○ 패당이야말로 얼마나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집단, 전쟁미치광이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 미국과 괴뢰패당이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얻을 것은 수치스러운 파멸과 죽음뿐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인내성 있게 노력할 것이지만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침략의 불을 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2월 22일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3개 단체 명의의 합동성명을 발표하고 3월 하순으로 예정된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²⁰⁵

서울핵안전수뇌자회의는 미국과 괴뢰패당이 반공화국 핵소동의 판을 더 크게 벌려놓으려는 또 하나의 유치한 광대극이다. 미국의 핵전초기지이며 세계최대의 핵 화약고인 남조선에서 핵안전 문제를 론의 하는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자체가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들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서울핵안전수뇌자회의 개최 책동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민족과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염원에 배치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범죄행위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엄청난 도발로 낙인하고 준열히 규탄한다. …… 우리는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핵 모의판을 벌려놓는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

20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4일.

205.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2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을 것이며 무적필승의 선군위력으로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들의 반공화국 핵소동을 단호히 짓부셔 나갈 것이다.

2월 25일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노골적인 파괴라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²⁰⁶

1.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우리 식의 성전으로 짓부셔버릴 것이다.
2. 반전, 평화의 구호밑에 매국역적 리명박 정권을 청산하기 위하여 일떠선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정의로운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 것이다.
3. 침략적인 전쟁과 간섭에 체질화된 미제 호전광들에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짜 총대 맛,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줄 것이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이 성명에서 미국을 겨냥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²⁰⁷ 돌이켜 보건데 4월 13일 단행된 제4차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염두에 둔 강성발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언제나 미제침략군의 본거지들과 반공화국 군사소굴들을 우리의 타격권 안에 집어넣고 움쩍만 하면 일격에 짓몽개버릴 것이다. 핵무기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타격장비가 있다. 대양건너 먼 거리에 미국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것처럼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 침략자들을 짓몽개버리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타격강도와 타격계산에는 한계가 없다. 진짜 총대 맛,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

²⁰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5일.

²⁰⁷- 위의 글.

가를 보여주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다.

인천시 인근 우리 군부대 내무반에 걸린 북한 지도부 타도 구호가 보도되자 북한군은 3월 2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²⁰⁸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괴뢰군부대의 내무반에서만도 벽체와 문짝들에 감히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어놓고 그 아래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써 붙이는 천하무도한 망탕짓을 벌여놓고 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무분별한 이 모든 중상모독행위는 오직 리○○ 역적패당만이 벌릴 수 있는 반민족적인 히스테리적 광기이며 나라의 정세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으로 몰아가는 무지한 깡패집단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역적패당의 중상모독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괴뢰 육해공군부대들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공기표적 사건, 괴뢰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써 붙이거나 내다 건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현수막 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어진 최고 존엄 표적사격 행위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우리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만고대역죄는 우리 최고 존엄을 가장 엄중히 모독한 악행중의 악행이다.

그러면서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남한에 대해서 복수의 성전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²⁰⁹ 이튿날인 3월 3일 국방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도 가졌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 남조선각계의 민심을 반영하여 이미 내외에 천명한대로 역적패당

20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2일.

209- 위의 글.

I
II
III
IV
V
VI
VII
VIII

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우리 식의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다. …… 물리적 타격을 기본으로 한 우리 식 성전은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모든 행위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리○○ 역도와 군부 호전광들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지은 대역죄를 민족 앞에 사죄할 때까지 중단 없이 벌이게 될 것이다.

3월 6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남한의 최고 존엄 모독사건을 다시 비판하면서 북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핵무기보다 위력적인 최첨단 타격장비를 갖고 있다고 공언했다.²¹⁰

혁명의 수뇌부는 우리의 최고 존엄이며 생명이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높은 권위와 위력,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은 수뇌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민의 마음의 기둥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고 존엄을 혈투하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다. 때문에 남조선의 역대 괴뢰도당들도 우리의 최고 존엄만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유독 리○○ 역적패당만이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분별없이 망탕짓을 하였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가장 철저히, 가장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기질이다. …… 우리의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오늘의 보복성전은 우리의 결심을 실지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의의 성전으로 될 것이다.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것이 선군조선의 기질이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단숨에 달려가 괴뢰도당을 격멸 소탕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우리에게서 핵무기보다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

²¹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 무리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로동신문』, 2012년 3월 6일.

3월 5일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의 최고준엄 모독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월 9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²¹¹

우리는 천추에 씻지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리○○역적패당이 씨도 없이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만단의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역적패당이 노골적으로 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자비한 멸적의 의지로 끓어 번지는 보복의 용암을 활화산으로 총 폭발시켜 조국통일로 결속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종결단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 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판가리 복수전, 조국통일 성전에 용약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를 역적패당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최고준엄을 중상 모독한 리○○역적패당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사태를 초래한 특급전범자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은 3월 26~27일로 예정된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닳새 앞두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발표하고,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²¹²

서울핵안전수뇌자회의는 철두철미 역적패당이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핵소동의 연속판이며 확대판이다.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핵물질보유 및 관리에서 국제적 규범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강조하건대 조선반도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회의에 상정될 아무런 명분도 없다. …… 서울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성명발표 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기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21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9일.

212.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21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념원에 대한 극악무도한 모독으로,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또 하나의 특대형 범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어떠한 도발도 그것은 곧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되며 그 결과는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장애로 될 것이다.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태양절)가 끝난 후에는 대남 비방이 더욱 강화되었다. 백성은 굶주리고 나라 형편도 좋지 않은데 북한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20억 달러의 비용을²¹³ 들여가면서까지 생일 축하행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대학생과 시민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태양절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의 4월 16일자 라디오 연설 내용(북한의 개혁·개방 촉구)을 구실로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²¹⁴

지난 16일 리○○역도는 우리의 태양절경축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 인터넷, 라디오 연설이라는데 출연하여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우리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지어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까지 시비하면서 핵무기 포기과 개혁, 개방, 변화만이 살 길이라는 주제넘은 망발을 쉼쳐댔다. 한편 괴뢰역적패당은 극우보수언론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태양절 경축행사를 중상 모독하는 악선전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극우익늑다리들과 어용보수청년단체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내몰아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사격 표적으로 삼고 지어 백두산위인들의 초상화에 불손한 짓을 감행하는 등 극악무도한 광란극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천추에 용납 못할 또 하나의 특대형 비상도발 사건이다. …… 지금 리○○ 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213- 『조선일보』, 2012년 3월 21일.

21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8일.

적개심은 하늘에 닿아있으며 극악한 도발자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쓸어버릴 멸적의 투지에 불타고 있다. 리○○ 역적패당이 무분별한 대결광란으로 얻을 것은 무서운 복수의 불벼락과 파멸밖에 없다. 리○○ 역적과 그 추악한 족속들은 이번 특대형 도발의 대가를 툭툭히 치르게 될 것이며 그로 하여 가장 비참한 운명을 절대로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같은 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서울 한복판이라고 해도 북한의 최고 존엄, 즉 감정은을 혈뜬는 도발원점인 이상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²¹⁵

지금 리○○ 역적패당은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형상한 모형들을 만들고 거기에 총질까지 해대는 란동을 부리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태양절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의 성대한 열병식이 끝난 직후부터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 모습까지 날조하여 나름대로 광고하면서 무엄하게 놀아대고 있다. ……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특대형 도발행위에 이골이 난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도발원점들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는 것이다. 최고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으로 다져진 총대는 특대형 도발자들에 대하여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디에 있든 무자비한 복수의 세례를 안기게 될 것이다.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혈뜬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다음 날인 4월 19일에는 북한의 정부·정당·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이 태양절 모독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복수의 성전을 펼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²¹⁶

²¹⁵-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8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리○○ 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경사를 축하는 해주지 못할망정 그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온갖 허튼 수작질을 해대는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대역죄를 저질렀다. 특히 리○○ 역도는 우리의 태양절행사가 거행되는 때 제놈이 직접 나서서 북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만도 돈을 얼마 썼을 것이고 그 돈이면 강냉이를 얼마를 사올수 있었을 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쫓쳐댔는가 하면 극우보수 언론들은 때를 만난 듯이 그 무슨 잔치비용이요 뭐요 하면서 북이 태양절경축행사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다느니, 그 돈이면 식량을 몇 년 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 악담하였다. …… 괴뢰역적패당은 우리의 태양절행사를 중상 모독한 중대범죄에 대해 당장 사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천만군민은 활화산 같은 분노를 총폭발시켜 북주의 성전에 떨어내설 것이며 이 땅에서 괴뢰역적패당을 영영 쓸어버릴 것이다.

4월 22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다면서, 동맹국이라도 민족 내부의 일에 간섭하려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창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성명을 발표했다.²¹⁷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하였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리○○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만일 동맹자나 동반자라고 하여 인륜도덕까지 무참히 짓밟은 인간쓰레기를 두둔하면서 우리 민족내부의 일에 간섭하려드는 나라가 있다면 하늘 끝에 가닿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창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9일.

217-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2일.

2012년 4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특별작전행동소조’라는 조직을 내세워서 김정일 사후 전개된 대남 공세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협박을 가했다.²¹⁸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는 동아일보, KBS, MBC, YTN 등 언론사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부셔버리기 위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날을 따라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는 것을 알린다. 우리의 특별행동은 노호한 민심과 분노의 폭발이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성전이다.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리○○ 역적패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쏘고있는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빈말을 모른다.

2012년 6월 4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공개통첩장을 발표하고 남한 특정단체의 좌표까지 제시하면서 대남 협박을 이어갔다.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기념행사에 대한 남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심술사납게 찬물을 끼얹는 망동”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²¹⁹

이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새로운 악행이며, 우리 혁명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극악무도한 비방증상으로서 더 이상

21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3일.

219.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4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그대로 둘 수 없는 특대형 범죄이다. …… 전선의 군단, 사단, 연대들과 중심의 전략로켓트군 장병들은 새로운 악행을 연출하고 있는 역적패당의 본거지들인 조선일보사는 서울시 중구 북위 37도 6분 83초, 동경 126도 7분 65초 위치에, 중앙일보사는 서울시 중구 북위 37도 3분 45초, 동경 126도 8분 14초 위치에, 동아일보사는 서울시 종로구 북위 37도 7분 10초, 동경 126도 7분 81초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KBS, CBS, MBC, SBS방송국 자리표도 확정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서 징벌을 가할 타격명령을 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역적패당에게 다음과 같은 최후통첩을 보낸다. ……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우리 사상과 제도, 인민을 해치고 있는 특대형 도발자들의 소굴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철의 의지이다. 그래 우리 군대의 타격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아겠는가. 스스로 최후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한국군 지휘부에 대한 압박과 선제공격 동기 유발

핵무장을 포기한 한국은 북한의 1차 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2차 대응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한국군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의 핵이 남한 땅에서 터지지 않도록 모든 가용한 수단과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군 지도부의 “선제공격”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북한 핵을 타격할 수 있다는 발언이 다음과 같이 몇 차례 있었다. 첫째, 2000년 12월 이준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전제로 유사시 대북 타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²²⁰ 둘째, 2008년 3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가 우리(남한) 지역에서 작동하지(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서 터지지 않도록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²²¹

이 발언이 소위 “대북 선제예방공격”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확대되어 국내 진보세력의 비판을 야기한 것은 물론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대화 거부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통지문을 발표하고 김태영 합참의장의 답변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북남관계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에게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²²² 이후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남한의 선제타격론과 미국의 선제공격론을 엮어서 대남 비방을 강화했다.²²³

셋째, 최근 한국의 한 언론은 한국정부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될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²²⁴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징후가 확실하게 포착되면 한국이 먼저 공격해야 한다

220- 이준 국방부장관은 2002년 12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의 전술핵 무기 개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한국에 대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사시 대북 타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2년 12월 30일.

221- 『중앙일보』, 2008년 3월 27일.

222- 『연합뉴스』, 2008년 3월 29일.

223- 예를 들어,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발언, 『로동신문』, 2008년 12월 23일.

224- 『문화일보』, 2012년 5월 3일.

면서 이때 선제공격뿐만 아니라 확산될 경우 3일 안에 북한 전체 화력의 90%를 꺾어버리는 작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하화된 북한의 핵심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미국으로부터 병커버스터 GBU-28 폭탄을 들여와서 2014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²²⁵

한국이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확정했다는 이 보도가 나가자 북한은 2012년 5월 8일 로동신문을 통해 선제타격 계획을 자멸을 재촉하는 계획으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비판했다.²²⁶

괴뢰들은 이 작전계획에 따라 우리의 지하군사시설들과 장거리 포들을 파괴하기 위해 병커버스터 GBU-28을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북침선제공격을 위한 리○○패당의 책동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괴뢰들의 선제타격 작전계획수립은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전면전쟁을 노린 위협천만한 망동이다. …… 미국은 있지도 않는 북핵위협설을 여론화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괴뢰들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확대해왔다. 미국의 부추김 밑에 괴뢰군부 패거리들은 선제타격폭언을 공공연히 췌치며 우리를 심히 위협하고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었다. 해마다 미국과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벌리면서 그 실행을 위한 작전적 토대로 구축하였다. 이런 속에 괴뢰당국이 선제타격 작전계획까지 수립한 것은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전쟁도발이 리○○패당의 전략으로 정식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은 미국과 남조선으로부터 오고 있다. 폭로된 바와 같이 최근 미국과 괴뢰들은 조선반도 유사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한다고 하는 이른바 확장억제력 사용을 정식 모의하였으며 그 실행을 위한 훈련까지 벌렸다.

225_ 위의 글.

226_ 『로동신문』, 2012년 5월 9일.

아울러 이 신문은 선제공격은 결코 미국과 남한의 독점물이 아니며 내외의 호전광들이 원자탄으로 북한을 위협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은 핵이 없는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 핵이 먼저 사용되는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군사목표이기 때문에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한국군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군 지휘부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한국군의 이런 점을 역이용해서 한국군 지휘부를 자극하고 선제공격을 감행하도록 유도하면서, 이를 구실로 남한에 대해 국지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군사적 위협²²⁷

북한이 보유한 소수의 핵무기는 군사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데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한반도의 현실은 이런 결론을 내릴 만큼 간단하지 않다. 소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한 신생 핵국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기존 핵국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핵 보복을 우려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전략적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즉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함부로 핵을 사용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핵국이 적대관계에 있는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용이하다.

²²⁷ 이 절은 북한의 핵위협을 제기하고 핵능력을 분석한 다음 글의 관련 부분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전성훈,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의 선택,” 『국가전략』, 제10권 3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4), pp. 5~32; 전성훈,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 분석,” 『국가전략』, 제11권 1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5), pp. 5~37.

I
II
III
IV
V
VI
VII
VIII

핵무기가 최초로 사용된 것도 비핵국인 일본에 대해서였다. 북한의 대남 핵사용을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핵우산이지만 이미 한국 땅에서 핵이 터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으로 보복할 것인지 아니면 재래식 전력에 의한 응징에 국한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북한이 본토 공격용 ICBM 능력을 개발할수록 핵우산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의 대남 핵사용 결정에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군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지휘부는 만에 하나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우려 수준을 넘어서서, 군의 사기와 전쟁수행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수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우려는 한국의 선제공격 동기를 촉발하게 된다. 만약 전쟁 직전에 혹은 전쟁 중에 남한 영토에 단 한 발의 핵폭탄만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과 국민들의 전쟁수행 의지가 꺾이고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만연하는 공황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

가. 전면전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는 전쟁 개시 전에 남한의 대응의지를 꺾기 위해서 혹은 전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고 남한의 전쟁수행 의지를 약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쟁 와중에 사용될 수 있다. 전쟁 개시 전이나 전쟁 중에 남한으로 사전에 비밀리에 반입한 핵탄두로 주요시설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남한 내부를 교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전면전의 추이에 따라서 ‘폭파 위협’에서 ‘실제 폭파’로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 사전에

반입된 핵탄두가 없다면 육상 운반수단으로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인근까지 핵을 운반해서 폭발시켜 수도권에 간접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핵탄두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국지전

북한이 국지전을 감행해서 백령도나 수도권 등 핵심지역을 점령한 후 전쟁을 조기 종결시킬 목적으로 남한으로 사전 반입된 핵탄두를 폭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서부전선 MDL 인근에서 핵탄두를 폭발시켜 핵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 남한과의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북한이 MDL 근처에서 핵탄두를 터뜨리더라도 그 피해가 전방에 배치된 남한 군부대는 물론 그 남쪽 지역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남한 내부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 군사적인 운반수단에 의한 핵위협

육상수단에는 각종 전투 및 수송용 차량, 해상수단으로 각종 전투함과 잠수함 및 반잠수정, 공중수단으로는 전폭기와 군용 화물기 등이 있다. 이러한 군사적인 운반수단은 전시에 사용가능한 수단으로서 선제 공격에 이용될 수 있으나 평시의 위장침투는 불가능하다.

공중 운반수단의 경우, 처음에는 항공기를 이용하고 후에 탄도미사일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북한은 이와 반대로 탄도미사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²²⁸ 탑재중량 1,000kg 정도의 노동미사일과 전폭기 등이 공중경로를 통한 운반수단에 해당되는데, 신속

I

II

III

IV

V

VI

VII

VIII

하고 기습적인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패트리엇 미사일 등 지대공 미사일과 요격기에 의한 피격 위험이 상존한다.

파키스탄이 북한에서 들여온 노동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북한과 파키스탄 간에 핵탄두 설계에 대한 협조가 있었다면 북한 역시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 정부가 2003년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비밀 브리핑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²⁹ 이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이미 보유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파키스탄 당국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라. 평시 남한 내 반입을 통한 핵위협 현실화

민수용 운반수단이 평시에 위장침투 수단으로 활용되어 북한 핵의 남한 내 반입 및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육상수단으로 도로와 철도를 이용하는 각종 차량과 열차, 해상수단으로 여객선, 화물선, 컨테이너 선박, 공중수단으로는 민항기와 화물기를 들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크기가 일본에 투하된 제1세대 핵폭탄 정도일 것으로 전제하고, 북한의 운반수단이 이런 규모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핵탄두가 60년 전의 제1세대에 준하는 큰 규모라 하더라도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규모와 중량이 큰 핵탄두도 통상적인 민수용 운반수단

²²⁸- NRDC, 2003,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003," p. 77.

²²⁹- David Sanger, "Pakistani tells of North Korean nuclear devices," *New York Times*, April 13, 2004.

을 통해 남한으로 위장, 기습 침투시켜서 유사시 대남 위협 및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핵물질과 방사능물질의 경우,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물품으로 위장하거나 은폐하여 비밀 운반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핵탄두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플루토늄은 그 크기가 작은 오렌지 정도이고, IAEA 과학자들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을 모두 합쳐도 농구공보다 약간 큰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²³⁰

이와 관련, 남북화해 분위기에서 실시된 도로·철도·항로의 개통과 항만의 개방이 북한정권의 의도에 따라서는 대남 공격용 핵탄두와 관련 물질의 운반통로로 역이용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탄두와 방사능무기 및 관련 물질을 남한 내에 비밀리에 반입시켜 두었다가, 유사시 대남 위협 및 공격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화 “쉬리”가 현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남북한이 합의한 통행 관련 합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²³¹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국가안보상의 취약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가 초기 선적지에서의 사전검사임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출발지점에서 선적과정과 선적물의 내용에 대한 현장점검과 같은 확실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남북합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²³⁰- Robert Marquand, “North Korea’s Nukes: Advanced, but Hidden,” *Christian Science Monitor* (December 21, 2004).

²³¹- 전성훈, “한국의 PSI 전면참가와 남북통행합의서의 보완,” 『Strategy 21』, 통권 27호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 209~227.

V. 미국의 對韓 핵우산: 기원과 발전과정

1. 핵우산의 법적 근거와 평가²³²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의 법적 근거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이 동맹국들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인데,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미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보유를 포기한 비핵국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소위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 약속이다.

먼저, 한·미 동맹의 경우 1978년 제11차 SCM부터 매년 회의 때마다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합의문에 명시해두었다.²³³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사를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보장받아 온 것이다. 한편,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에 명시함으로써,²³⁴ 핵우산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한·미 동맹의 공동비전으로 명명된 문건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 같은 보장[미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미국이 비핵국들에게 제공하는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이란, NPT에 가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본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특정한 경우에는 핵

²³²- 이 절은 필자의 다음 저서의 관련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pp. 53~57.

²³³- 전호환,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국방정책연구』, 제 24권 2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8), pp. 29~57.

²³⁴-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Washington, D.C. June 16, 2009.

I
II
III
IV
V
VI
VII
VIII

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조건으로 두는 것이다. 그 조건이란 비핵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핵보유국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 해당 비핵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철회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Ⅶ장 참조).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에 따르면, 핵보유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은 상기 예외조항에 의거해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장하는 원칙적인 안전장치라면, 미국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에 담겨있는 예외조항은 핵우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 9번째로 핵무기를 개발한 만큼 이러한 예외조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핵을 가진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이를 핵으로 보복·격퇴하는 데 국제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것은 1978년 미 국무장관 밴스(Cyrus Vance)의 유엔연설로 정책화되기 시작한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이 중국을 제외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사실이다. 1995년 4월 5일 러·영·불 3개국은 유엔총회에서 비핵국에 대한 핵보유국의 안전보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문안까지 그대로 답습하여 발표한 바 있다.

핵우산은 냉전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의 세력팽창과 전쟁도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특정국가에 대한 핵보복 위협은 해당국가의 도발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데 기여해왔다. 예를 들어, 1990년 걸

프전쟁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에게 화학·세균무기를 연합군에게 사용할 경우 미국은 “가장 강력한 대응”(the strongest possible response)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부시의 경고가 후세인의 전쟁수행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²³⁵ 미국의 핵보복 위협이 전쟁당사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핵우산의 효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핵우산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핵우산의 신뢰성 문제이다. 적대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공격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핵무기로 보복할 가치와 필요성이 똑같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어야만 핵우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우산이 제공되기 시작한 이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에도 미국이 과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지속되어 왔으며, 이런 의문은 소련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더욱 거세어졌다. 그 이유는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에 대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경우 미국 본토가 소련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뮌헨이나 영국의 런던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되

²³⁵- Steve Fetter, “Limit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Harold Feiveson, ed., *The Nuclear Turning Point: A Blueprint for Deep Cuts and De-Alerting of Nuclear Weap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9), p. 39.

I
II
III
IV
V
VI
VII
VIII

는 경우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미국이 서울이나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혹은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이 초래하는 정치적, 도덕적 부담이다. 핵우산은 적대국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선제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 미국이 1945년 일본에 두 발의 핵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정치적, 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군사안보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미국 행정부의 안보전략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을 채택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안보상황이 핵무기의 선제사용에 따른 정치·외교적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핵무기 없는 세계”(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를 지향하면서 핵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²³⁶

2. 對韓 핵우산의 발전과정

핵우산은 핵국과 비핵국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²³⁷ 핵우산의 요체는

²³⁶- James Woolsey, “Too Much Mr Nice Guy,” *New York Times*, May 7, 2010.

²³⁷- 필자는 다음 저서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pp. 57~58.

핵강대국이 비핵동맹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자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핵우산을 둘러싼 중요한 오해는 핵우산이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이 그렇지 못한 약소동맹국에게 베푸는 안보적 시혜라는 인식이다. 이는 안보동맹을 책임지는 세계질서의 주관자인 강대국이 우방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패권논리의 무의식적 발로라고 할 수도 있다. NPT라는 국제제도의 틀 속에서 자체 핵무장의 길을 포기한 많은 나라들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핵우산을 안보적 시혜의 관점에서 수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핵우산에 대한 시혜적 관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제대로 인식해야 할 사실은 핵국이 동맹인 비핵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바로 해당 동맹국의 핵개발 포기라는 사실이다. 핵국은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핵확산을 방지하는 안보적 이익을 챙기며, 비핵국은 핵우산을 통해 안전보장을 제공받는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이 미국의 안전보장 혜택을 받는 대가로 핵무장을 포기한 것은 미국에게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라는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즉 핵우산을 정점으로 한 핵국과 비핵동맹국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쌍방이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라는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공개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명시한 시점이 1978년 7월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시점은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응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재처리시설을 도입하려던 시도가 좌절된 후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대처해서 재

I
II
III
IV
V
VI
VII
VIII

처리시설 도입을 다시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주평화연구원의 한인택 박사는 미국이 1978년부터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제공을 최초로 명기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시도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이라고 해석했다.²³⁸ 이에 더해, 한·미 양국이 1977년 제10차 SCM에서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1978년 제11차 SCM에서 창설한 “연합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CFC) 역시 한국의 핵개발 시도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미국이 비핵동맹국인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핵우산 제공을 공개적으로 문서에 명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CFC 창설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²³⁹

어쨌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우산 공약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1978년 7월 27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제11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였다.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몇 차례 새로운 핵우산 공약을 제공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네 차례의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①2006년 10월 20일 제38차, ②2009년 10월 22일 제41차, ③2010년 10월 8일 제42차, ④2011년 10월 28일 제43차)과 2009년 6월 16일 양국정상이 합의한 한·미 동맹을 위한 미래비전, 그리고 2010년 10월 8일 발표된 한·미 국방협력지침이 해당된다.²⁴⁰

주목할 것은 핵우산 제공에 관련된 미국의 공약이 북한이 1차 핵실

²³⁸ 한인택, “동맹과 확장역지: 유럽의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동아시아연구원·제주평화연구원 공동 주최, EAI-JPI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2009.9.11), p. 117.

²³⁹ 이는 한·미 관계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로서 당시의 외교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엄밀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²⁴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경우 새로운 핵우산 공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전에 합의된 공약이 계속해서 SCM 공동성명에 등장한다. 자료협조에 흔쾌히 응해주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박창권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힘을 한 2006년 이후 폭과 심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빈번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판단된다. 핵우산 공약이 발표된 시간 순서대로 그 배경과 관련 합의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1978년 7월 27일 제11차 SCM 공동성명(샌디에고)

노재현, 브라운(Harold Brown) 국방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이 충분한 방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 …… 양 대표단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 위협에 대처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북괴가 현대화된 무기를 더욱 증강하고 군수산업을 확대시킴으로써 공격적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북괴의 전반적인 군사적 위협이 계속 심각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3.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충분한 수준의 방위력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결론지었다. ……

이런 상황판단 하에서, 미국은 제4항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국을 안심시키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상의 안전보장 의무를 재확인하고, 한국이 현재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고 장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4. 브라운 장관은 카터 대통령의 1978년 4월 21일자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보장과 미지상군 전투병력의 철수계획 일부 수정에 관한 특별공약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미 지상군 전투병력의 철수가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기본방위전략에 어떠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브라운 장관은 노 장관에게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전적으로 유효하며, 동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 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계속 확고하고, 강력하다고 보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북괴나 또는 다른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 계속 강력하다는 데 대하여 추호도 의심이나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나. 2006년 10월 20일 제38차 SCM 공동성명(워싱턴)

윤광웅,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서 같은 해 10월 9일 단행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의 지속적인 제공을 약속하면서 북한에 대해 신속한 핵포기를 촉구했다.

3. 양 장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으며,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지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 양 장관은 북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

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 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 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다. 2009년 6월 16일 한·미 동맹 미래비전(워싱턴)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6월 16일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결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동맹 미래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명명된 공동성명은 핵우산을 명기한 최초의 정상회담 합의문이다. 두 정상은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한·미 동맹관계는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 같은 보장을 강화한다.**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연합방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외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 있는 군사력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 2009년 10월 22일 제41차 SCM 공동성명(서울)

김태영, 게이츠(Robert Gates)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 4월과 5월에 발생한 북한의 3차 장거리미사일과 2차 핵실험을 지역과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3. 양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2009년 4월과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I
II
III
IV
V
VI
VII
VIII

및 최근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들이 UN안보리 결의들과 6자회담 합의사항들을 명백히 위반하고, 범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며, 대한민국과 인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UN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제6항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 3축”(New Strategic Triad)으로 규정한 핵전력(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를 이용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역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6.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역지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김태영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공약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측은 확장역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마. 2010년 10월 8일 제42차 SCM 공동성명(워싱턴)

김태영, 게이츠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해서 2010년 7월 서울에서 최초로 열린 양국간 ‘국방·외무 2+2회담’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제4항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공동입장을 표명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3. 양 장관은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양측이 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북한이 완전하

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하였으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의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 합동조사결과 보고서가 발간된 것과, 천안함 침몰에 관한 특별조사에 대한 유엔사의 특별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되어, 안보리 공식 문서로서 정식으로 회람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천안함 사태이후 안보환경하에서의 북한의 군사활동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서해에서의 한·미 연합연습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게이즈 장관은 제6항에서 제41차 SCM에서와 같은 확장역지 제공 약속을 했고, 두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확장역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6. 게이즈 장관은 **미 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역지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 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확장역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역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바. 2010년 10월 8일 한·미 국방협력지침(워싱턴)

한·미 양국은 제42차 SCM에서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에 합의했다. 이 지침은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2009년 6월 16일 양국 정상이 발표한 한·미 동맹미래 비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침은 제Ⅲ장 “한국연합방위”(Combined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그 배경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역과 세계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관련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과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억지 능력을 강화한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과 탄도미사일 개발, 생산, 보유, 확산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다. 양국은 우리의 정책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의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전략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지침은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전략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에 필요한 일곱 가지 조치를 제시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며, 이 위원회는 확장억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조치의 하나는 북한의 급변사태,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능력 및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확장억지정책위원회 제도화의 상황적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한 전략지침 제공을 통해 한·미군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우발상황에 대한 작전계획 발전 능력을 강화한다. 작전계획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협과 비대칭 위협들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키며, 양국 정부 내 모든 관련기관들에 걸친 폭넓은 협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사. 2011년 10월 28일 제43차 SCM 공동성명(서울)

김관진, 파네타(Leon Panetta)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서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위협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2010년 11월 공개한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를 촉구했다.

3. 양 장관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작년 11월 북한이 공개한 우리늄농축 프로그램(UEP)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방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핵물질 및 민감 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우리늄농축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한의 핵활동이 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이자 9·19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 배치된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UEP를 포함한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추구를 포기하고, 나아가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

두 장관은 제4항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응한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한 비대칭위협이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심각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

4. 양 장관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불가측한 안보환경 하에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군사위협 증가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 주도, 미국 지원형’ 동맹의 역지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제7항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역지를 한국에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고, 양국은 확장역지정책위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확장역지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역지전략을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7.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역지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

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확장억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카니즘으로서 올해 들어 두 차례 실시된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향후 확장억지정책위원회 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한·미 확장억지수단운용연습 (Table Top Exercise: TTX) 등 향후 활동을 통하여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방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맞춤형 억지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VI. 미국의 對北 안전보장 공약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1. 부시(George H.W. Bush) 행정부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 방향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1992년 1월 22일 캔터(Arnold Kanter) 미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을 대표로 하는 북·미간 첫 고위급 접촉을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것이다. 김용순을 뉴욕으로 초청해서 캔터 차관과 만남을 주선한 것은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외교의 금기로 여겨왔던 ‘미국과 북한 외교관의 직접 접촉 금지’ 원칙을 깨는 시발점이었다. 김용순·캔터 만남은 이후 양국 관리들이 때로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전략에 힘을 실어주었다.

둘째, 부시 대통령이 1991년 9월 27일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무기의 대부분을 철수하고 퇴역시키겠다는 일방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 철수 선언에 대응해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도 같은 해 10월 5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소 양국 간에 해외에 전진 배치된 전술핵무기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철거한다는 양해가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 철수 선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²⁴¹

- 해외에 배치된 지상배치 단거리 핵무기를 본토로 철수해서 기존에 보유한 같은 종류의 핵무기와 함께 모두 폐기함.

²⁴¹- “The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PNIs) on tactical nuclear weapons at a glance,” *Arms Control Association*, 2009, <<http://www.armscontrol.org/print/111>>.

- 평시에는 지상에서 이륙하는 해군항공기, 공격용 잠수함 및 함선에 전술핵 탑재를 금지함. 단 위기가 발생하면 이들 무기를 다시 장착할 수 있음.

이 선언에 따라서 당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모든 지상배치 전술핵 무기가 철수되었고, 선언에서 금지하지 않은 항공기 탑재 핵폭탄도 함께 제거되었다.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으로 한국 땅에는 단 한 발의 핵탄두도 존재하지 않는 ‘비핵화’가 실현되었고, 이는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내 핵부재 선언’의 토대가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는데, 이 선언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남한 땅에서 모두 철수되었음을 알리는 정치적인 조치였다. 부시 대통령이 전술핵 철수를 선언한 주된 배경은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있을 것이다. 소련과 중국의 거대한 재래식 무력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수단으로서 서유럽과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소련의 붕괴로 전술핵의 효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 철수 선언이 실행된 양상은 서유럽과 한국이 매우 다르다. 서유럽에는 2012년 현재에도 항공기에 탑재된 전술핵폭탄 180여 발이 5개국(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의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²⁴² 반면에, 한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선언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핵부재 선언까지 불과 2개월 21일 만에 지상 배치 전술핵은 물론 선언에 포함되지 않는 항공기 탑재 전술핵폭탄도

²⁴²- Daryl Kimball, Oliver Meier and Paul Ingram, “NATO on Nuclear Weapons: Opportunities Missed and Next Steps Forward,” (May 21, 2012) <<http://www.armscontrolnow.org>>. 항공기 탑재 전술핵폭탄의 명칭은 “B-61 nuclear gravity bomb”(B-61 핵중력탄)이다.

모두 철수되었다.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당시 커져가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의식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것이었다고 본다.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시 행정부가 서둘러서 주한미군 전술핵을 철수한 정책은 실패작이다.

2. 클린턴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는 재임 8년 동안 적어도 다섯 차례의 공식 문건을 통해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 약속을 해줬다. 북핵문제는 1995년 NPT 평가회의에서 이 조약의 무기한 연장 실현을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인식한 클린턴 행정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1993년 3월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북한의 태도가 NPT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탈퇴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전까지 북한의 의사를 번복시키기 위해 전력투구 했으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의 북·미 고위급회담과 이 회담에서 1993년 6월 11일 발표된 북·미 공동성명이다.

미국과 북한은 1993년 6월 2~11일 뉴욕에서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과 갈루치(Robert Gallucci) 국무성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는데, 그 첫항이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 공약이었다. 그 대가로 북한은 NPT 탈퇴선언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함으로써, NPT 연장회의를 앞두고 조약에서 탈퇴하는 나라가 생기는 불상사를 막는 데 협조하게 된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합의문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 전면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 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공동성명이 채택된 일주일 후인 6월 18일 강석주는 북·미 회담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안전보장을 불가침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²⁴³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문제를 위주로 하여 토의하였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 발단된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라는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자면 무엇보다도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상대방의 제도와 자주권을 인정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정책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조·미 사이의 호상 존중과 불가침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는 40여 년간의 조·미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미·북 관계의 역사에서 첫 번째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한 달 열흘 만에 양국은 두 번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993년 7월 14~19일 제네

²⁴³ 『조선중앙방송』, 1993년 6월 19일.

바에서 가진 북·미 2단계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안전보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두 번째 공동성명을 채택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석주는 “아주 전진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었으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 보장 원칙을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²⁴⁴

북·미 3단계 1차 고위급회담은 1994년 7월 8일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8월 5~12일 제네바에서 재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도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²⁴⁵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전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일에 관한 용의를 표명하였다.

세 번째 공동성명을 채택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석주는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비정상적 관계인 북·미간에 해결해야 할 중국적 목표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며, 양국 간에 외교대표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이번 문건에 무게가 있다”고 주장했다.²⁴⁶

네 번째 합의문건은 북·미 양국관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244. 『중앙일보』, 1993년 7월 20일.

245. 『월간 북한동향』 (서울: 통일부, 1994), p. 186.

246. 위의 책, pp. 187~188.

합의인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Geneva Agreed Framework)이다. 사실상 북핵문제의 끝장을 보기 위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3단계 2차 고위급회담(1994년 9월 23일~10월 24일)의 결과로 채택된 기본합의문의 3항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및 남북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북한의 협상대표 강석주는 제네바 기본합의가 채택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합의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이며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문건으로서 북·미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²⁴⁷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약속한 다섯 번째 문건은 2000년 10월 9~12일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해서 만들어졌다. 조명록은 김정일의 친서와 북·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올브라이트 국무

²⁴⁷ 『조선중앙방송』, 1994년 10월 23일.

장관, 코헨(William Cohen) 국방장관 등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났다. 양국은 2000년 10월 12일 조명록의 방문 결과를 정리해서 조·미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공동 코뮈니케의 대북 안전보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제공하는 관행은 클린턴 행정부 때 처음 시작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중 김정일에게 세 번의 친서를 보냈다. 첫 번째는 제네바 기본합의가 발표되기 직전인 1994년 10월 20일 클린턴 대통령이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제공 약속을 미국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이었다.²⁴⁸ 두 번째는 페리(William Perry) 조정관이 1999년 5월 25~28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클린턴의 친서를 전달한 것이다.²⁴⁹ 친서의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방문 이후 페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두 번째 친서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248. 『조선중앙방송』, 1994년 10월 20일.

249. 『연합뉴스』, 1999년 5월 26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페리가 클린턴의 위촉을 받아 북한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검토를 단행한 결과로 1999년 10월 12일 발간한 보고서는²⁵⁰ 그의 이름을 따서 페리프로세스라고 명명되었다. 페리프로세스의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동시에 직면한 미국이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주면서 두 가지 문제를 묶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리가 제시한 새로운 대북정책 방안의 하나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소해주면서 북·미 상호 간에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클린턴의 세 번째 친서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23~25일 평양을 방문하면서 김정일에게 전달한 것이다.²⁵¹ 역시 친서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시는 11월 중순 중에 클린턴의 방북까지 점쳐지던 때였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대북 안전보장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3.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6개월의 고민 끝에 북한이 제기하는 모든 안보적 우려사항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2001년 6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성명은 다음과 같은 의제에 대해 북한과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²⁵² ①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의 개선, ② 북한의 미사일 프로

²⁵⁰- William J.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12, 1999), <http://www.state.gov/www/regions/eap/991012_northkorea_rpt.html>.

²⁵¹- 『연합뉴스』, 1999년 10월 23일.

²⁵²-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1/06/20010611-4.html>>.

그램과 수출의 검증 가능한 규제, ③ 위협적인 재래식 군사력 태세.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시가 선택한 방법은 북·미 양자협상 구도를 6자회담 구도로 바꾸는 것이었다.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집요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클린턴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합의위반을 어렵게 하고 합의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북·미 양자구도보다는 다자구도가 더 적합한 협상방식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2003년 8월부터 중국을 사실상의 주최국으로 하는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중요한 결실은 2005년 7월 26일~8월 7일, 9월 13~19일 두 단계로 나누어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소위, ‘9·19 공동성명’이다. 이 성명의 제1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도 ‘핵무재’ 상황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미국이 단행한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등으로 이 성명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6년 12월 말 베를린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의 회동에서 6자회담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6자회담의 3단계 회의에서

I
II
III
IV
V
VI
VII
VIII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로서 ‘2·13 합의’가 도출되었다. 2·13 합의에서 대북한 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Ⅱ조 3항)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미 국무부는 2008년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987년 대한항공 폭파를 계기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이 관련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서 핵프로그램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강도 높은 IAEA 핵사찰을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 하에 단행되었다. 하지만 북·미 양국은 핵사찰에 관한 서면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북한이 구두로 약속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북한이 반박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6자회담은 2012년 가을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미국이 먼저 조치를 취했지만 그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들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전술핵 철수 조치와 꼭 닮은꼴이다.

한편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고려하기 시작한 수단의 하나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고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문제 해결의 방도가 바로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입장을 즐기치게 견지해왔다. 미국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 대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북한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자세변화의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5월 18일 뉴욕타임스지는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과 젤리코(Philip Zelikow) 자문관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북 포괄접근 방식을 보도한 바 있는데, 새로운 방식은 비핵화 노력과 대북 금융제재를 지속하는 동시에 정전상태의 종식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다.²⁵³ 뒤이어 2006년 11월 8일 개최된 한·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남·북한·미국 3자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종전선언 용의를 표명하기도 했다.²⁵⁴

이런 맥락에서, 9·19 공동성명의 제4항은 6자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과 “6자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2·13 합의도 다섯 개의 실무그룹(W/G)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축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으며, 의장국은 러시아가 맡았다.

임기 초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펴던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에 여러 형태를 통해서 빈번하게 북한에 대한 안

²⁵³-David Sanger, “U.S. said to weigh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New York Times*, May 18, 2006.

²⁵⁴-스노우(Tony Snow)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November 17, 2006),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11/print/20061117-16.html>>.

I
II
III
IV
V
VI
VII
VIII

전보장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2002년 2월 20일 서울을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invading) 의도가 없고 한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는 비무장지대 건너편에 우리에게 대한 위협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자세에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²⁵⁵ 같은 해 11월 15일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가시적으로 제거할 것을 주문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²⁵⁶

미국은 북한과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갖기를 희망한다. 지난 2월 서울방문에서 분명히 했듯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이는 오늘도 그대로 유효하다. 미국은 북한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료들도 대북 안전보장 약속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예를 들어, 부시의 성명 발표 사흘 뒤인 11월 18일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간주하며,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²⁵⁷ 부시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13일 김대

²⁵⁵ 『연합뉴스』, 2002년 2월 20일.

²⁵⁶ 『남북관계연표 1994~2011년』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336.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States hopes for a different future with North Korea. As I made clear during my visit to South Korea in February, the United States has no intention of invading North Korea. This remains the case today. The United States seeks friendship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Statemen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Vol. 38, No. 46 (Monday, November 18, 2002), p. 2038, Online from the Government Printing Office, <www.gpo.gov>.

²⁵⁷ 『연합뉴스』, 2002년 11월 19일.

중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이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²⁵⁸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이 개시된 2003년에도 새해 벽두부터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반복했다. 1월 7일 새해 첫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부시 대통령은 “내가 서울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²⁵⁹ 나흘 뒤인 1월 11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장쩌민 주석에게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²⁶⁰ 파월 국무장관은 2003년 2월 6일 케리 상원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가 한 국가로서의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는 없지만 어떠한 군사행동도 테이블에서 치워지지 않았다”고 밝혔다.²⁶¹

부시 대통령 2기에서도 대통령 자신과 고위 관료들의 대북한 안전보장 약속은 멈추지 않았다. 예를 들어, 라이스 국무장관은 2006년 10월 10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이미 밝혔고 9·19 공동성명에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북한은 그런 보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도발적으로 북한을 침공하려 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²⁶²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

258- 『연합뉴스』, 2002년 12월 13일.

259- 『문화일보』, 2003년 1월 7일.

260- 『연합뉴스』, 2003년 1월 11일.

261- 『남북관계연표 1994~2011년』, p. 343; 『국민일보』, 2003년 2월 7일.

262- 『연합뉴스』, 2006년 10월 11일.

의 핵실험이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면서도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²⁶³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도 확인했다. 이번 주 북한의 행동으로 북한은 다시 한 번 6자회담 공동성명이 제안한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역의 긴장을 고조하는 길을 택했다. ……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것이다.

4.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북핵폐기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출범했다. 대화의 방식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되 북·미 직접 대화도 병행한다는 것이었다. 2008년 8월 29일 발표된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을 정도로 북핵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였다. 정강정책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핵물질과 핵무기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직접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과 협력해서 검증 가능한 한반

²⁶³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we have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We affirmed that we have no intention of attacking North Korea. With its actions this week, North Korea has once again chosen to reject the prospect for a better future offered by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Instead, it has opted to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diplomacy.” *Press Conference by the President* (the Rose Garden/October 11, 2006), <<http://pierretristam.com/Bobst/library/wf-397.htm>>.

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²⁶⁴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북한이 2009년 4월과 5월 각각 단행한 3차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이었다. 대화의 상대인 북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동력은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2월 23~24일 북경에서 열린 북·미 3차 고위급회담 결과로서 2월 29일 발표된 ‘2·29 합의’ 역시 4월 13일 4차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2·29 합의는 양측이 합의사항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평양과 워싱턴에서 각각 합의에 대한 자기측 해석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태생적으로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행상의 입장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내포했던 것이다. 양측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북한은 외무성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2·29 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²⁶⁵

- 양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함,
-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함,
-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함,
- 미국은 북한에 24만톤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무조치를 취하기로 함,

²⁶⁴- *Renewing America's Promis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Committee, August 29, 2008), pp. 23~38.

²⁶⁵-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9일.

- 미국은 대북제재가 주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함,
-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게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 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임,
-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영변 우리늄농축 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함.

미국의 경우 2월 29일 클린턴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²⁶⁶

-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우리늄농축 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함,
- 북한은 IAEA 사찰관이 복귀해서 우리늄농축 활동의 중단을 검증·감시하고 5MWe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하는 데 동의함,
- 오늘의 발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작은 걸음임,
- 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부를 잘 관찰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을 판단할 것임,
- 24만 톤의 영양 지원의 경우 분배에 필요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과 만날 것임.

²⁶⁶-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Statement Before the 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Washington, D.C., February 29, 201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2/02/184885.htm>>.

한편 미 국무부도 같은 날 2·29 합의와 관련한 논평을 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⁶⁷

-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함,
-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1953년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임을 인식함,
- 24만 톤의 영양지원과 필요한 경우의 추가지원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임,
- 미국의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겨냥한 것은 아님.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턴이나 아버지·아들 부시 행정부처럼 북한이 주장하는 ‘안보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명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문건으로 안전보장 약속을 해주지는 않았다. 이는 정책의 변화라기보다 안전보장을 제공할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오바마 1기 4년 동안 북핵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협상도 새로운 합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4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사실상의 안전보장을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NSA)에서 조건을 삭제하고 무조건적인 NSA를 약속한 것은 다분히 북한을 겨냥한 조치였기 때문이다(관련 내용은 제Ⅶ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조건부 NSA 하에서는 북한이 NPT에 가입했다라도 남한을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NPR은 북한이 NPT

²⁶⁷- Victoria Nuland, Department Spokesperson, Office of the Spokesperson, “Press Statement: U.S.-DPRK Bilateral Discussions,” (Washington, D.C., February 29, 2012), <<http://www.state.gov/r/pa/prs/ps/2012/02/184869.htm>>.

I
II
III
IV
V
VI
VII
VIII

에 복귀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핵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NPT에 가입한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복 不可’라는 새로운 정책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밀러(James Miller) 국방부 수석부차관 보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의 하나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²⁶⁸

²⁶⁸- FPC(Foreign Press Center) Briefing, “DOD’s Nuclear Posture Review Rollout Briefing” (The Washington Foreign Press Center, Washington, D.C., April 7, 2010), p. 14, <http://www.defense.gov/npr/docs/FPC%20_4-7-10_%20Nuclear%20Posture%20Review.pdf>.

VII. 오바마 행정부의 핵·억지 전략

1.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후 1년 간의 검토 끝에 2010년 4월 6일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다.²⁶⁹ 새로운 NPR은 앞으로 5~10년간 미국의 핵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지침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등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대결처럼 국가 간의 핵전쟁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핵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새로운 위협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하면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NPR은 새로운 핵정책의 핵심 목표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핵테러 예방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은 핵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반증한다:²⁷⁰

- 핵확산과 핵테러를 예방함,
-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임,
- 핵전력을 감축하면서 전략적 억지와 안정을 유지함,
- 지역차원의 억지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안심시킴,
- 안전하고 잘 보관된 효과적인 핵전력을 유지함.

북한 핵문제 및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두 번

²⁶⁹-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10).

²⁷⁰- *Ibid.*, p. iii.

째 목표, 즉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부분이다. NPR은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fundamental role)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기존의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개정해서 다음과 같이 보다 강화된 새로운 NSA 정책을 천명했다.

미국은 NPT에 가입해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²⁷¹

가. 과거의 소극적 안전보장: 조건부 NSA

과거 미 행정부가 NSA 정책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힌 것은 1978년 카터 행정부 당시 밴스(Cyrus Vance) 국무장관이 유엔군축특별회의에서 발표한 연설에서였다. 이 연설에서 밴스 국무장관은 “NPT 혹은 기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협정에 가입한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해당 국가가 다른 핵보유국과 동맹을 맺거나 협력해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²⁷²

바로 이 조건 때문에 기존의 NSA는 “조건부 NSA”로 명명되었다. 한반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북한이 NPT에 가입해서 국제규범을 성

²⁷¹- NPR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weapons states that are party to the NPT and in compliance with their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Ibid.*, p. viii.

²⁷²-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use or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any non-nuclear weapon states which joined the NPT or any other binding agreement not to acquire nuclear weapons, except in the event of an attack on the US or its allies by a non-nuclear weapon state allied to or assisted with a nuclear weapon state in carrying out or sustaining the attack.” Speech of Secretary of State Cyrus Vance at the 1978 UN 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 *UN document A/S-10/AC.1/30*.

실하게 이행하더라도 미국을 공격하거나 남침을 하는 경우에는 핵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조건부 NSA의 요체였다. 이 조건은 미국의 對韓 핵우산 공약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연결고리로서 북한의 남침을 억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수단이였다. 즉 북한의 핵개발 여부에 관계없이, 6·25때와 같이 재래식 무기로 남침을 하더라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억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1995년 유엔에서 기존의 조건부 NSA의 골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문맥을 수정한 다음 정책을 발표했다.²⁷³

미국은 NPT에 가입한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해당국가가 다른 핵보유국과 동맹을 맺거나 협력해서 미국, 미국의 영토, 미국 군대,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이 안보 공약을 한 나라를 공격하거나 침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상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다른 네 나라 (영·프·러·중)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세 나라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거의 그대로 답습할 정도로 조건부 NSA는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정착되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1995년에 발표한 조건부 NSA는

²⁷³-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States reaffirms that it will not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weapon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except in the case of an invasion or any othe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its armed forces or other troops, its allies, or on a State towards which it has a security commitment, carried out or sustained by such a non-nuclear-weapon State in association or alliance with a nuclear-weapon State.” “Conclusion of 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Assure Non-Nuclear Weapon States Against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Documents, S/1995/263 (The United States).

I
II
III
IV
V
VI
VII
VIII

다음과 같다.²⁷⁴

러시아는 NPT에 가입한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해당국가가 다른 핵보유국과 동맹을 맺거나 협력해서 러시아, 러시아의 영토, 러시아 군대, 러시아의 동맹국이나 러시아가 안보공약을 한 나라를 공격하거나 침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 가운데 중국만이 비핵국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안전보장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²⁷⁵

중국은 어떤 상황과 어느 시점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첫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어떤 상황과 어느 시점에서든 비핵지대나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²⁷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Russian Federation will not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weapon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except in the case of an invasion or any other attack on the Russian Federation, its territory, its armed forces or other troops, its allies or on a State towards which it has a security commitment, carried out or sustained by such a non-nuclear-weapon State in association or alliance with a nuclear-weapon State.” *S/1995/261* (The Russian Federation). 영국과 프랑스의 조건부 NSA 문서는 다음과 같다: *S/1995/262* (The United Kingdom), *S/1995/264* (France).

²⁷⁵ 원문은 다음과 같다: “China undertakes not to be the first to use nuclear weapons at any time or under any circumstances. China undertakes not to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weapon states or nuclear-weapon-free zones at any time or under any circumstances.” *S/1995/265* (China).

나. 새로운 소극적 안전보장

오바마의 NPR이 천명한 새로운 NSA에서는 핵보복의 여지를 남겨 둔 조건이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비핵국가가 NPT에 가입해서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하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화학·세균무기로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더라도 핵으로 보복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즉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무조건 핵으로 보복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핵무기만 포기한다면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NPT에 가입한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복 不可’라는 새로운 정책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새로운 정책이 현재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고, 게이즈 국방장관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핵확산을 계속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서 모든 수단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NSA는 미국의 핵위협을 거론하며 핵무기 개발을 합리화하고 있는 북한과 같은 핵비확산 체제의 “이탈국가”(outlier)를 겨냥해서 이들의 핵개발 명분을 제거하고 NPT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부시 행정부의 “불량국가”와 비교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하는 이탈국가라는 용어 자체가 핵비확산 체제에서 떨어져나간 국가라는 뜻임과 동시에 다시 이 체제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오

I
II
III
IV
V
VI
VII
VIII

바마의 새로운 NSA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다. 오바마의 NPR과 미국의 對韓 핵우산 공약

북한과 같은 이탈국가에게 핵개발의 명분을 주지 않고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새로운 NSA를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NSA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미국 조야에서 많이 표출되었다. 예를 들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너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억지전략의 토대인 “전략적 모호성”을 훼손했고, 미국 본토가 화학·세균무기 공격을 받아 대량의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핵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미국이 핵사용 위협을 안한다고 해서 북한이나 이란이 핵개발을 멈추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²⁷⁶

오바마의 새로운 NPR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도 부정적이다. 2010년 4월 9일 외무성대변인은 새로운 NPR이 북한과 이란을 핵보복 대상으로 남겨둔 것을 두고서, 북한을 핵선제공격 목표로 삼고 핵위협을 일삼아온 부시 행정부 초기의 적대시정책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더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²⁷⁷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준수하는 비핵 국가들에 대하여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나라

²⁷⁶- David Sanger and Thom Shanker, “Obama’s new nuclear strategy is intended as a message to Iran and North Korea,” *New York Times*, April 6, 2010.

²⁷⁷-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9일.

리와 이란은 핵불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위협을 일삼아온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미국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핵무기나 상용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공약을 완전히 뒤집어엮고 모처럼 마련되고 있는 회담 재개 분위기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할 만큼 더 늘리고 현대화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의 새로운 NSA가 북한의 핵포기 결심을 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한국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핵우산은 알게 모르게 약화되어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개발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이라는 북한 정권의 ‘미국 위협론’이 먹혀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1990년대 초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 위협론’으로 집요하게 공략했고, 그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제V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문제를 미끼로 성사된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1993년 6월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약속한 이후 미국은 여러 차례 유사한 약속을 되풀이했다. ‘핵개발 포기’를 미끼로 미국으로부터 수 차례 핵불사용, 무력불사용 약속을 받아낸 북한 정권이 이제는 ‘핵무기 포기’를 구실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억지의 근간인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북한 핵문제의 실상이다.

오바마의 새로운 NSA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핵위협을 구실로 핵

I
II
III
IV
V
VI
VII
VIII

무장을 합리화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NSA가 당면한 핵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북한의 다른 위협은 상당히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핵우산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은 새로운 NSA가 한국의 중장기 안보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의 조건부 NSA는 북한의 핵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남침을 하면 핵보복을 할 수 있었다. 즉 북한이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남침하던 관계없이, 핵우산을 넓게 펴서 한국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NSA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폭넓은 핵우산을 제공한다. 일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하기만 하면 핵우산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북한이 화학·세균무기를 쓰거나 비대칭전력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더라도 핵보복 옵션은 선언적인 차원에서조차 거론대상이 아닌 것이다.²⁷⁸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NPR에서 밝힌 새로운 NSA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핵우산을 그대로 펼치지만 일단 핵을 포기하면 핵우산 자체가 소멸되는 정책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200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비전에 천명된 핵우산 제공 약속에도 저촉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오바마의 새로운 NPR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과제를 던진 것이다.

²⁷⁸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북한이 NPT에 복귀하더라도 핵테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핵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2010년 4월 8일 미·러 양국 정상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신전략 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 서명하고, 핵군축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조약은 2011년 2월 5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소위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타결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적어도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프라하는 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핵확산과 핵테러의 위협을 경고하고 인류를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자신의 정책적 구상을 밝힌 곳이다.²⁷⁹ 미국이 역사적인 이 조약의 서명 장소로 프라하를 제안하고 러시아와 체코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프라하는 국제 핵비확산 노력의 상징이 되었다.

가. 협상과정과 합의내용

(1) 협상과정과 쟁점

신전략무기감축조약에 대한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담에서 1991년에 체결된 “전략 무기감축조약 I”(START I)을 대체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협상의 목표를 대폭적인 핵감축으로 잡는 대신에 2009년 12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TART I의 후속조약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전

²⁷⁹-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Hradcany Square, Prague, Czech Republic,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5, 2009), <<http://www.whitehouse.gov>>.

략핵 태세에 대한 감시검증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핵감축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²⁸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협상은 세계 6개 도시에서 10차례의 전체회의와 14차례의 양국 정상 접촉을 포함하는 힘든 여정이었다.

이 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²⁸¹ 첫째, 미국이 유럽에 배치를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MD)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반응이었다. 러시아는 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미국이 MD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MD는 이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를 설득했다. 미국은 2011년 지중해, 2015년 루마니아 그리고 2018년 폴란드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는 3단계 배치계획을 갖고 있다.

MD 문제는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으며,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타협안으로 조약 전문에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의 연관성을 명시하고,²⁸² 각자의 주장을 담은 “일방적 해석”(unilateral statement)을 조약 말미에 첨부하기로 합의했다. 두 방안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MD 문제는 양국 의회의 비준과정에서도 논의되었다. 러시아는 미국의 MD가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미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새 조약이 미국의 MD 유럽배치 계획에 지장을 주면 비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²⁸³

둘째, 러시아가 가급적 검증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많은

²⁸⁰- Peter Baker, “Twists and turns on way to arms pact with Russia,” *New York Times*, March 26, 2010.

²⁸¹- *Ibid.*

²⁸²- “A worthy U.S.-Russia arms control treaty,” *Washington Post*, March 27, 2010, p. A12.

²⁸³- Mary Beth Sheridan and Philip P. Pan, “United States and Russia reach nuclear arms control,” *Washington Post*, March 25, 2010, p. A01.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START I에 의거해서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기지(Votkinsk)에 설치했던 상주감시소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미국이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재설정”(reset)하겠다고 말하면서 강력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미사일 생산기지의 상주감시소는 러시아가 힘들었던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굴욕적인 합의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ty)라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러시아는 정보교환에도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미사일 시험 자료의 교환도 거부하다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검증과 공개에 부정적인 태도는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에서 소련이 보였던 일반적인 행태였는데, 앞으로 국제군축무대에서는 푸틴의 집권 이후 러시아가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 내용

START I은 양측이 보유한 “전략핵운반체계”(Strategic Nuclear Delivery Vehicle: SNDV)를 1,600기로 제한하고 실천 배치된 전략핵탄두도 6,000개로 규제한 조약이다. SNDV는 흔히 핵전략의 3축이라고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및 장거리 폭격기로 구성된다. 소련의 붕괴로 감축 일정에 차질이 있었지만 소련의 핵보유국 지위를 승계한 러시아가 2001년 12월 폐기 의무를 완료했고, 조약에서 정한 대로 2009년 12월 5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START I의 정신과 합의를 발전적으로 승

제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조약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 바로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 SORT)이다. 지난 2002년 5월 부시와 푸틴은 양측의 실전배치 전략핵탄두의 수를 1,700~2,200개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SORT는 2003년 6월 발효되었으며,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양측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전략핵탄두의 수를 1,550개로, SNDV의 총 수를 800기로, 유지·보수 중인 운반체계를 제외하고 실제로 배치된 SNDV의 수를 700기로 규제했다. 전략핵탄두의 보유수 면에서는 SORT에 비해 30% 감축하는 것이고, SNDV의 규모로는 START I에 비해 50%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START I을 준거로 삼아 엄격한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현재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SNDV는 미국이 1,200기를 밀돌고 러시아는 800기 정도이며, 전략핵탄두는 미국이 2,100여 개, 러시아가 2,600여 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²⁸⁴ SNDV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일방적인 감축을 해온 소련과 달리 추가 감축의 의무가 거의 미국의 몫이 될 것이다. 일부 SNDV는 폐기하는 대신 재래식 핵탄두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용도가 전환될 수도 있다.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장거리미사일을 이용해서 지구적 타격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²⁸⁵ 전략핵탄두의 경우에는 산정방식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감축되는 양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아래의 ‘평가’ 부

²⁸⁴- Peter Baker, “Treaty advances Obama’s nuclear vision,” *New York Times*, March 25, 2010.

²⁸⁵- Walter Pincus, “Obama administration may send U.S.-Russia arms treaty to Congress by late April,” *Washington Post*, March 30, 2010, p. A13.

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번 합의가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할 예정인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이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타격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백악관의 판단이다.²⁸⁶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START I과 같이 발효 후 7년 간의 감축기간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발효 후 10년이고 양측의 합의 하에 5년 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양측 의회의 비준으로 발효되었는데, 미국은 상원의 2/3, 즉 상원의원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발효될 수 있다. 1979년 6월에 체결된 SALT II의 경우 당시 카터 대통령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상원에 비준을 거부할 것을 요청해서 이행이 무산된 바 있다. 비준하는 데 START I의 경우 430일, SORT의 경우 9개월 이상이 걸린 반면, New START는 10개월이 소요되었다.

나. 평가

(1) 미·러 관계 개선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가장 큰 의미는 출범 이후 미·러 관계를 대결에서 협력의 관계로 “재설정”(reset)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러 외교가 성공했음을 입증한 상징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양측은 새 조약을 통해서 미·러 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었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오바마 대통령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타결을 공표하던 자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면 양측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도 앞당

²⁸⁶- “Key Facts about the New START Treaty”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March 26, 2010), <<http://www.whitehouse.gov>>.

긴다고 선언하고,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미·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²⁸⁷

클린턴 국무장관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미·러 협력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히고 반테러, 핵안보, 비확산과 같은 최우선 정책과제를 달성하는 데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국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²⁸⁸

(2) 핵비확산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두 번째 성과는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러가 핵전력을 감축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NPT 제6조의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핵국들에 대해 핵포기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동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는데, 핵안보정상회의와 NPT 평가회의에서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채찍을 들자는 미·러의 입장에 힘이 실렸다.²⁸⁹

오바마 대통령도 이 조약의 타결을 공표하면서 미·러가 NPT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고 비핵국들이 주어진 책임을 대하도록 하기 위한 지구적 노력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²⁹⁰ 클린턴 국무장관도 새로 체결된 조약은

²⁸⁷- *Remarks by the President on the Announcement of New START Treaty*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March 26, 2010), <<http://www.whitehouse.gov>>.

²⁸⁸- “Administration’s remarks on the arms control treaty,” *New York Times*, March 26, 2010.

²⁸⁹- “Arms control’s new era,” *New York Times*, March 28, 2010.

NPT상의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함 것임과 동시에 특히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에게 미·러의 최우선 관심사가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해서 핵물질이 나쁜 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²⁹¹

(3) 산정방식에 따른 군축효과의 한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군사적 의미는 미·러 당국의 발표와 달리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미국의 당초 목표가 대폭적인 군축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조약’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 조약은 군사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정방식 때문에 조약문서에 합의된 전략핵탄두 상한선에 비해서 양측이 실제로 보유하게 될 핵탄두의 수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²⁹²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미·러 양측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전략핵탄두의 수를 총 3,100개로 제한했지만, 양측이 실제로 보유하게 될 양은 이보다 1,300~2,200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폭격기의 경우 하나의 핵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계산하기로 합의한 것이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의 경우 14개의 크루즈 핵미사일과 6개의 핵포탄 등 모두 20개의 전략핵탄두를 탑재하지만 신전략무기감축조약에서는 한 개의 핵탄두로 계산된다.

²⁹⁰- *Remarks by the President on the Announcement of New START Treaty.*

²⁹¹- “Administration’s remarks on the arms control treaty.”

²⁹²- Peter Baker, “Arms control may be different things on paper and on the ground,” *New York Times*, March 30, 2010.

I
II
III
IV
V
VI
VII
VIII

결과적으로 미국이 현재 보유한 2,100여 개의 핵탄두 가운데 450여 개가, 그리고 소련의 2,600여 개 핵탄두 가운데 860여 개가 감축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감축하게 될 전략핵탄두의 수는 각각 100개와 190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 국제안보 차원의 의의

(1) 군비통제의 복원

전임 부시 행정부가 기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국제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 즉 군비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과정을 복원했다는 것이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군비통제를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평가 절하한 것은 물론 냉전시대에 군사적 긴장완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탄도미사일요격체계 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서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를 초래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군비통제 프로세스가 정상궤도로 복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⁹³ 협력과 소통의 리더십, 경청과 절제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제레짐을 강조하는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2) 감시검증체계의 복원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START I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엄격한 감시검증체계를 구축했다. START I에 입각해서 실

²⁹³ “Arms control’s new era.”

행했던 일부 검증조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현실을 반영한 조치를 추가하는 형태로 검증체제를 갖추었다. 특정 시설에 대한 현장검사는 물론 자료교환, 인공위성과 영공정찰 등 기술적 정보수집수단인 “국가 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NTM)의 정보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와 미사일 시험 데이터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사일 생산현황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미사일 생산 공장에 설치했던 상주감시소는 폐쇄된다.

START I 조약의 효력이 2009년 12월 만료되면서 그동안 양국 전략핵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감시했던 검증체제도 함께 기능이 정지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타결은 중단된 감시검증체제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적절한 감시검증체제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의 생산과 운용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임과 동시에 신뢰구축 방안이다. 따라서 감시검증체제를 복원한 것은 양국관계 개선을 군사적으로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향후 발전방향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더 대폭적인 군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징검다리 조약”(small bridge treaty)라고 할 수 있다.²⁹⁴ 2009년 12월 START I의 유효기간 만료를 염두에 두고 시작된 협상은 시간의 제한 때문에 대폭적인 핵감축을 내용으로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더 대폭적인 군축을 하기 위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²⁹⁴- Peter Baker, “Treaty advances Obama’s nuclear vision.”

I
II
III
IV
V
VI
VII
VIII

새로운 협상에서는 전략핵 운반수단과 실전 배치된 전략핵탄두의 추가 감축은 물론 예비 핵탄두도 감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측이 보유한 전술핵탄두를 감축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은 1,100개 정도의 전술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80개 정도가 유럽의 여섯 나라(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및 영국)에 전진 배치되어있다. 러시아는 3,000~6,000개의 전술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당국은 해외배치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²⁹⁵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NPT상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영국, 프랑스, 중국도 협상에 참여시키는 다자간 핵군축조약을 위한 협상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미·러의 핵전력이 다른 세 나라의 핵전력에 접근할 정도로 핵감축이 추진되면 5자 핵군축 혹은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포함하는 다자 핵군축이 필연적인 수순이 될 것이다. 다자 핵군축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3. 맞춤형 확장억지 전략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와 달리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핵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함께 제시한 새로운 억지전략이 “지역맞춤형 억지체계”(Regionally Tailored Deterrence Architecture: RTDA)이다. 지역맞춤형 억지체계는 다양한 지역별로

²⁹⁵- “The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PNIs) on tactical nuclear weapons at a glance,” *Arms Control Association*, 2009, <<http://www.armscontrol.org/print/111>>.

각 지역이 직면한 구체적인 위협과 안보도전 요소에 맞춰서 해당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이런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억지 수단과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억지력을 갖추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²⁹⁶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맞춤형 억지체계 개념을 세 가지 주요 정책검토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했다.²⁹⁷

첫째, 4년마다 발간되는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QDR)는 미국의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억지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잠재적인 적대세력이 개인, 네트워크 아니면 국가인지 여부 및 이들의 능력과 의도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²⁹⁸ 더 나아가 QDR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²⁹⁹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진배치, 적절한 재래식 군사력 (미사일방어 포함) 및 확장핵억지에 해나 지속적인 공약을 결합하는 새로운 맞춤형 지역 억지체계에 관해서 그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체계와 새로운 능력은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하게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탄도미사일방어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²⁹⁶- Elaine Bunn, “U.S. Policy Review and NATO Strateg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NATO’s Nuclear Deterrent: the New Strategic Concept and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in Rome, Italy (1~2 March 2010).

²⁹⁷- Cheon Seongwhun, “Changing Dynamics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pp. 55~56.

²⁹⁸-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010), p. 14.

²⁹⁹- *Ibid.*

I
II
III
IV
V
VI
VII
VIII

Report: BMDR)는 지역적 접근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위치, 위협의 역사와 특성, 협력적인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군과 군의 관계에 따라서 매우 다른 각 지역의 독특한 억지 및 방어 소요에 맞춰져야 한다고 명시했다.³⁰⁰ 아울러 BMDR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지역체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³⁰¹

- 강력한 협력적 관계와 적절한 부담공유의 토대 위에 구축되는 지역 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하고,
- 각 지역의 독특한 위협과 환경에 맞춰서 “단계적이고 적응성 있는 접근”(a phased, adaptive approach)을 추구함.

셋째,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4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핵정책과 핵태세의 5대 핵심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 지역차원의 억지강화도 포함되었다.³⁰²

- 핵확산과 핵테러를 예방함,
-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을 줄임,
- 감축된 핵전력 수준에서 전략적 억지와 안정을 유지함,
- 지역차원의 억지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재안심시킴,
- 안전하고 보완이 잘되며 효과적인 핵전력을 유지함.

한편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역별로 다른 안보위

³⁰⁰-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010), p. 22.

³⁰¹- *Ibid.*, pp. 23, 28.

³⁰²-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p. 2.

협에 직면해있다면서 “억지와 안심 및 핵무기 위험이 줄어든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세가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맺은 파트너십에서 선택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³⁰³ 유럽에는 아직도 200기의 전술핵탄두가 배치되어있는 반면, 한반도의 전술핵은 모두 철수되었고 일본이 반대하던 “전술핵 탑재 해상 발사 토마호크 미사일”(the Tomahawk, nuclear-equipped, sea-launched cruise missile: TLAM-N)도 퇴역시키기로 한 결정은³⁰⁴ 의식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서유럽의 경우 미국의 전술핵폭탄이 배치된 5개국 공군기가 핵폭탄을 탑재하고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핵공격 계획수립과 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12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억지태세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는데, 미국은 전면전보다는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⁰⁵

I
II
III
IV
V
VI
VII
VIII

³⁰³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are separate choices to be made in partnership with allies in Europe and Asia about what posture best serves our shared interests in deterrence and assurance and in moving toward a world of reduced nuclear dangers.” *Ibid.*, p. 32.

³⁰⁴ *Ibid.*, p. 46. 일본정부는 냉전종식 후에도 일본 방어를 위한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TLAM-N의 조기퇴역에 반대해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퇴역을 결정한 것이다.

³⁰⁵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와의 의견교환, 2012년 9월 4일.

VIII. 對韓 핵우산의 신뢰성 제고방안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I
II
III
IV
V
VI
VII
VIII

1. 고려사항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가. 재래식 확장역지의 변화³⁰⁶

북한의 핵위협은 점증하는 와중에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 약속은 연이어 계속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펴므로써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북핵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한국이 당면한 안보상의 문제점을 가중시켜 온 요인이 있다. 바로 재래식 분야에서 미국의 확장역지 공약이 점차 변화되어왔다는 점이다.

냉전시기에도 닉슨과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등 확장역지를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미·소 대결이라는 큰 틀이 안보질서를 규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는 미 행정부의 조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³⁰⁷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체제대결이 끝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역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이’ 한반

³⁰⁶ 이 절의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의 관련 부분을 보완·정리한 것이다. 전성훈, “한국의 핵정책 옵션: 핵무장까지 갈 것인가?” 『한국 안보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세종연구소 주최 제24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011년 4월 12일), pp. 73~74.

³⁰⁷ 카터 대통령의 무리한 주한미군 철수 시도가 미국 행정부와 군의 총체적인 반대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군복을 벗은 싱글러브(John Singlaub) 소장의 용기에 대해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감사하고 있다.

도의 안보구도에 질적인 변화를 야기해왔다. 북한의 핵위협을 포함한 WMD 등 비대칭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중에 미국의 확장역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재래식 역지 차원에서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對韓 확장역지는 다음과 같이 변해왔다. 첫째,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북한이 인민군의 후방배치를 조건으로 줄기차게 요구하던 주한미군의 후방배치가 북한에 대해 아무런 반대급부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미국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인계철선”(Trip Wire)이 사라져버렸다. 인계철선은 주한미군을 가급적 군사분계선에 근접하게 배치해서 북한의 남침으로 미군이 피해를 입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규모 미군 투입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카드였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은 2003년 3월 이후 사라졌다. 당시 고건 총리가 허바드(Thomas C. Hubbard) 주한대사에게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방부의 고위당국자는 인계철선이란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계철선이라는 말은 워싱턴에도 나쁜 감정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것은 10~30년 전에 적용됐을, 매우 낡고 불공정한 말이다. 왜냐하면 미군이 먼저 죽지 않으면 한국군이 스스로 방어하거나 역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⁰⁸ 주한미군의 확장역지와 안보공약의 상징으로서 과거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식”(Common Sense)이었던 인계철선이 이제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몰상식”(Non Sense)한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다.³⁰⁹

³⁰⁸ 『조선일보』, 2003년 3월 19일.

³⁰⁹ 미국은 현재의 국방력이 과거 인계철선이 유효했던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되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보면서 한국이 미국을 신뢰하지

셋째, 북한정권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위력적이었던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키 리졸브, 이글, 을지 등 제한된 규모의 훈련이 메우고 있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봄에 실시된 팀 스피리트 훈련은 육·해·공·해병을 망라하는 수만 명의 미군을 포함해서 20만 명의 한·미 연합군이 참가하는 대규모 종합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북한이 IAEA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사용되고 없어져버렸다.

넷째,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오로지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불박이 군’이었지만 이제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른 분쟁지역을 순회하는 ‘이동군’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이 개념으로 인해서 확장억지가 쇠퇴하고 미국과 제3국 간의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³¹⁰ 미국은 주한미군 장병의 가족 동반을 허용한 것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강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미군 가족은 유사시 한국을 신속히 떠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2006년 장관급 회담에서 쌍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선에서 어정쩡한 타협을 했다. 주한 미8군 사령부가 2011년 4월 5~15일 필리핀에서 실시된 ‘발리카탄 2011’ 훈련에 장병 500여 명을 파견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

못하느냐는 이의를 제기한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와의 의견교환, 2012년 9월 4일.

³¹⁰- “New Beginnings,” in *the U.S.-ROK Alliance: Recommendations to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Korea Society and APARC at Stanford University, May 2010), p. 15.

I
II
III
IV
V
VI
VII
VIII

개념에 따른 병력운용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¹¹

다섯째, 전작권전환의 전환과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이다. 2007년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 6월 27일 토론토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되,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기로 합의했다. 2010년 7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기념으로 열린 최초의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도 북핵위협 등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양국 정상회담의 토론토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다.³¹²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CSIS)는 상황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필요가 있고, 연합사 해체에 앞서 한국군의 지휘·통제권 등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³¹³

나.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와 Pivotal Deterrence

(1) 안전보장의 딜레마

미국이 북핵폐기를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무력불사용 약속을 들어주고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에게 한·미 동맹의 이완 및 미국의 ‘제3자 입장화’라는 안보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북

³¹¹ 『동아일보』, 2011년 3월 19일.

³¹² *Joint Statement of ROK-U.S.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Meeting on the Occas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ffice of the Spokesman, U.S. Department of State, July 21, 2012), <<http://www.state.gov/r/pa/prs/ps/2010/07/144974.htm>>.

³¹³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 (Washington, D.C.: CSIS, August 2012).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한·미 관계의 약화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북한 쪽에 다가서는 경우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한·미 동맹의 훼손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역지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딜레마는 미국이 “중심축 억지”(pivotal deterrence) 전략을 전개할 때 발생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있다.³¹⁴ 이 연구는 핵폐기의 선례인 우크라이나·리비아의 상황과 북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이 중심축 억지를 실행하는 경우 전개될 수 있는 한국·미국·북한을 연결하는 안보 삼각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³¹⁵

북핵 위기가 발생한 한반도가 중동의 리비아나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크게 다른 점은 남북한의 군사적인 대치상태이다.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경우 두 나라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쟁국이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개발에 신경은 쓰겠지만 핵강국인 러시아가 특별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리비아의 핵개발에 주목했지만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리비아의 핵개발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안보위협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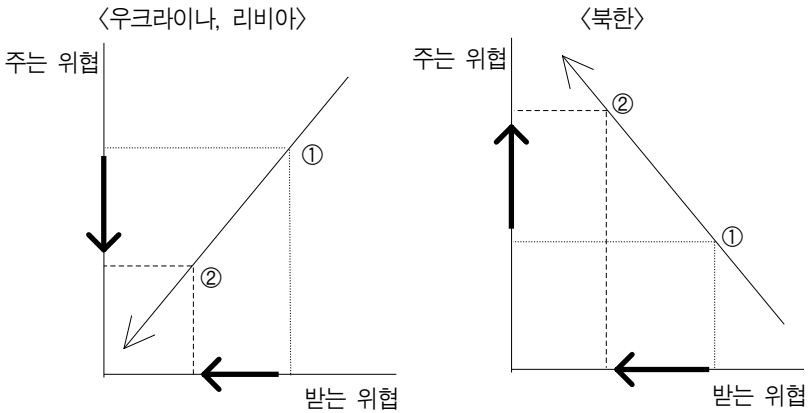
남과 북이 첨예한 군사적인 대치상태에 있는 한반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경쟁하는 남아시아와 더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핵폐기 대가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남한의 안

³¹⁴ 전성훈,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8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9.

³¹⁵ 아래의 내용은 Pivotal Deterrence 개념을 적용해서 상기 논문의 관련 부분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보가 악화되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불안정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의 초점이 남한에게 안보공약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만큼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남한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림 VIII-1 핵개발 대상국가의 받는 위협과 주는 위협의 상관관계 비교



<그림 VIII-1>은 크라이나·리비아의 사례와 북한의 현실을 비교한 것이다. 세로축은 안전보장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핵개발 국가가 해당지역과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안보적인 위협의 정도’를 표시한다. 반면에 가로축은 핵개발 국가가 안전보장을 제공해주도록 요구하는 대상국으로부터 ‘받는 안보위협의 정도’를 나타낸다.

왼쪽은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안전보장을 제공해주도록 요구하는 국가(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미국, 리비아의 경우에는 미국)로부터 받는 안보위협이 줄어들게

되면, 핵폐기 약속을 지키고 테러 등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호전적인 정책을 바꿨다. 즉 두 나라 모두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역내의 다른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주는 위협의 정도도 함께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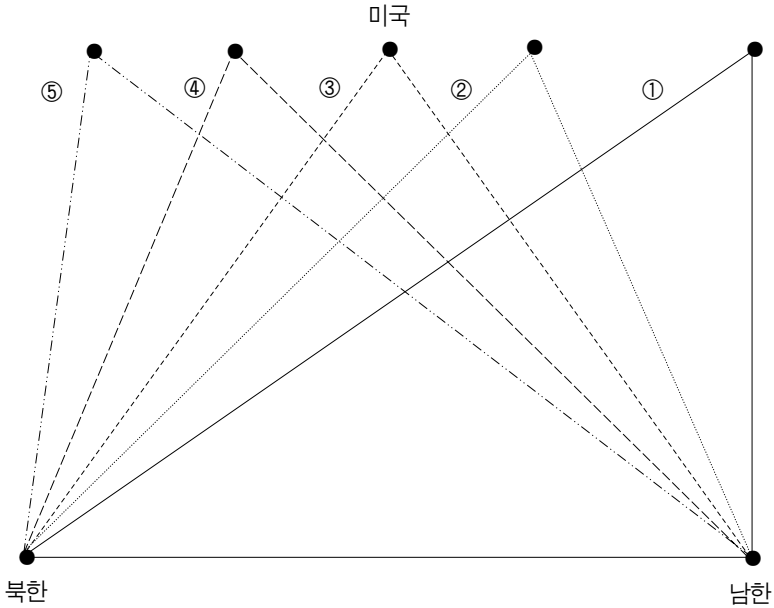
<그림 VIII-1>의 오른쪽은 북한이 핵폐기를 미끼로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제공받아서 받는 위협이 줄어드는 반면에 북한의 다른 비대칭 전력의 가치가 핵폐기 이전보다 높아짐으로써, 미국의 대남 안보공약은 약화되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주는 안보위협은 증가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표시하고 있다. 부연설명하면, 북한이 안전보장을 제공해주도록 요구하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안보위협이 줄어들 경우 핵폐기가 실현되고 남한에 대한 핵위협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에 제기하는 전통적인 안보위협 요인들은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특히 국제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화학·세균무기,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 계속 현대화되고 있는 미사일, 기습침투가 가능한 특수전부대 등 핵을 제외한 다른 비대칭 위협은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북핵 폐기가 이러한 안보위협의 제거와 병행 추진되지 않는다면 핵폐기의 대가로 안전보장을 제공해서 야기되는 주한미군의 전력 변화 내지는 약화가 한·미 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비대칭 안보위협이 핵무기가 사라짐으로써 북한에게는 더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동시에 한국에게는 더 중요한 군사위협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으로 인해서 대북 억지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북한의 비대칭 안보위협 요인들의 비중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2) 미국의 “중심축 억지”(Pivotal Deterrence) 전략의 문제점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으로 인한 대남 안보공약 약화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사례가 북한 핵문제와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는 핵폐기 국가에게 안전보장을 해주는 국가(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러시아, 리비아의 경우 미국)가 핵폐기 국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경우에는 미국이 핵폐기국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인 한국이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해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보호해야 할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즉 남북한과 미국의 “안보 삼각구도”(Security Triangle)가 한반도 특성인 것이다. 이 구도에서 미국이 중심축 억지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여부가 한·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VIII-2>는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안보 삼각구도가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Ⅷ-2 남·북한·미국 안보 삼각구도의 변화 가능성



- 시나리오 ①: 북·미 > 남·북 > 한·미
- 시나리오 ②: 남·북 > 북·미 > 한·미
- 시나리오 ③: 남·북 > 북·미 = 한·미
- 시나리오 ④: 남·북 > 한·미 > 북·미
- 시나리오 ⑤: 한·미 > 남·북 > 북·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선의 길이가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양국 사이의 선이 길수록 두 나라 사이의 갈등과 긴장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한다. 관찰의 주안점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및 한·미 관계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은 고정된 것으로 전제한다.

시나리오 1은 북·미 간의 갈등과 긴장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남·북한, 마지막으로 한·미 간의 순서를 따른다.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I
II
III
IV
V
VI
VII
VIII

수 있다. 시나리오 2는 북·미관계가 진전되면서 한·미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이 제일 높은 상황을 나타낸다. 시나리오 3은 북·미관계가 더욱 진전되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사이에 갈등과 긴장의 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게 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심축 억지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4는 남·북 사이의 갈등과 긴장에 변화는 없지만 시나리오 3에 비해서 한·미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를 나타낸다. 미국의 중심축 억지 전략으로 인해 한·미 간에 균열과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5는 한·미 관계가 가장 나빠지는 경우로서 미국의 중심축 억지전략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시나리오 1과는 정반대에 해당된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시나리오이다.

우크라이나·리비아와 한반도의 사이에는 동맹의 존재로 인한 안전보장의 딜레마라는 안보적 특성 이외에도 역사와 전통, 지정학적 질서, 대결과 협력이 공존하는 정치적 상황 등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지역에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가 없었으며 단지 러시아로부터 안보위협을 받았을 뿐이다. 서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는 없었고, 동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위협을 가하는 적대적인 국가도 없었다. 단지 러시아만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특정 국가를 위협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단지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오판이나 오해 혹은 사고에 의한 우발적인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잠재적인 위협국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을 요구한 것은 미국의 침략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재확인하는 안전장치로서 미국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을 요구한 러시아나 미국이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군사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중동의 경우에는 미국이 리비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우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리비아의 핵무기에 대한 적절한 억지수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채 미국의 핵우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이 북한의 핵이라는 비대칭적 위협에 노출된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남북한과 달리 이스라엘과 리비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설혹 리비아가 핵보유에 성공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주는 위협이 북한 핵이 남한에 주는 위협만큼 크지는 않다. 재래식 전력의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군이 없이도 리비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즉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의 대미 의존도가 리비아를 상대하는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크다. 이런 사실은 한·미 동맹과 미국의 대남 방위공약이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북핵폐기를 위해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대북 억지태세가 약화되고 한·미 동맹이 이완되는 가운데 북한의 여타 비대칭 안보위협이 그대로 남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큰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북한은 핵이

I
II
III
IV
V
VI
VII
VIII

외에도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막강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혹은 리비아에 적용했던 방식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북핵폐기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폐기의 대가로 미국의 대남 안보공약과 대북 억지태세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국내의 핵무장 관련 논의³¹⁶

한국은 1970년 중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 프랑스로부터 재처리시설을 도입해서 핵무장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월남패망, 주한미군 철수,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빈번한 군사도발 등 대내외 안보악재에 직면한 정부가 자구책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박정희 정부의 구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이후 역대 정부에서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은 없다.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핵문제에 관한 최초의 공식정책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핵개발 포기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주한미군이 대공산권 억지 차원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1991년까지 많게는 수 백기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지만 미군의 전술핵은 한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에서 한국군과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 옵션이 진지하게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도 거의 없고, 일반 국민들이 핵문제에 대해 충분

³¹⁶- 이 절의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의 관련 부분을 보완·정리한 것이다. 전성훈, “한국의 핵정책 옵션: 핵무장까지 갈 것인가?” pp. 77~80.

히 이해할 기회도 별로 없었다.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70~80%를 상회하는 나라이지만³¹⁷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다분히 감상적인 의사표시일 뿐, 구체적으로 계산되고 정제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1990년 북한 핵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진 이후 지난 20년간 이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은 핵문제에 대해 많을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북한 핵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핵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동학, 핵비확산체제와 규범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의식이 일깨워지고 그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북한이 도와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다가오면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핵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이런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며 단단하게 다져졌고, 2011년 초부터 더욱 부각되면서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핵무장에 관련된 국내의 논의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주장하는 ‘독자 핵무장론’과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전술핵 재배치론’으로 대별된다.

(1)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의 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2011년 1월 11일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도발을 하는 것은 핵을 믿기 때문이고 현 상태로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핵폐기 시한을 정한 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을 때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³¹⁷- Norman Levin, *The Shape of Korea's Future: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Long-Term Security Issues* (Santa Monica: RAND, 1999).

I
II
III
IV
V
VI
VII
VIII

국도 핵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고문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¹⁸

한반도 문제 전문가, 북한연구자, 학자와 정치인 어느 누구도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북한은 그들이 핵을 포기하는 날 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당사자는 물론 주변 국가 모두가 ‘비핵화가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버릇처럼 해보는’ 대북협상의 허상에 매달리고 있는 꼴이다. 북한이 어느 경우도 핵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입만 열면 북핵 포기를 떠들고 있으니 이런 자기기만이 없고,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 이런 위선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전환을 모색하는 길은 우리 한국도 핵을 갖는 것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날, 남북 간에는 비로소 실체가 있는 협상의 길이 열릴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남(南)도 핵을 보유함으로써 상호견제와 핵군축 협상을 벌일 때 한반도의 비핵화는 가능하다. …… 한국의 ‘핵’은 정확히 말해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니다. 남북한 균형을 겨냥한 견제용이며 대북 협상용이다.

이 칼럼이 발표된 지 약 한 달 뒤에 김대중 고문은 북한의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대응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차 북핵을 상쇄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³¹⁹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 수십만 명이 희생된 뒤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통일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핵보복이나 핵우산은 ‘행차 뒤 나팔’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핵을 갖는 목적은 북핵의 용도를 상쇄하자

318- 김대중, “南이 핵 가져야 北이 협상한다,” 『조선일보』, 2011년 1월 11일.

319- 김대중, “한국의 핵무기,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 『조선일보』, 2011년 2월 8일.

는 것인데 그런 논의조차 못한대서야 어디 자위국가, 자존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이 핵무장 논의에 입을 다물고, 핵문제의 공론화를 못 들은 척하고 있을수록 북한을 포함한 상대국들은 우리가 핵 의지도, 핵 보유 능력도, 그럴 국격도 없는 나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 정말 두렵다.

(2) 정치권의 논의

김대중 고문의 두 번째 칼럼이 소개된 지 2주 후 국회에서도 핵보유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당시 국회에서 핵문제를 제기한 의원들과 답변에 나선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³²⁰

-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는 없다.”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참고하라.” “미국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수호천사는 아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국가는 어떠한 동맹도 도울 수 없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우리과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장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북이 3차 핵실험을 한 뒤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바로 미 정부에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해야 한다.”
-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 “다른 선진국도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했

³²⁰ 『조선일보』, 2011년 2월 26일.

다.” “우리의 핵무장은 금기사항이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야 한다.”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우리도 이제 핵무장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 “쌀과 돈을 퍼주면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허황된 일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또 두려움에 떨면서 미국과 중국에 메아리 없는 도움만 청할 거냐?” “북핵 폐기를 위해 우리도 핵 주권을 가져야 하고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 <원유철 국회국방위원회 위원장>: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독자적인 자위수단이 없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를 조건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고 2014년 만료를 앞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 <박주선 민주당 의원>:³²¹ “북한의 일방적인 굴욕만을 요구해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 <민주당 이낙연 의원>:³²² “북한은 억압받는 기간에 핵 능력을 강화했다. 기다리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
- <김황식 국무총리>:³²³ 핵보유론 등에 대해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정책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핵개발 경쟁보다는 6자회담 등 국제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까

321. 『중앙일보』, 2011년 2월 26일.

322. 『중앙일보』, 2011년 2월 26일.

323. 『연합뉴스』, 2011년 2월 25일.

지 해 온 대로 한·미동맹의 틀에서는 미국의 핵확장 억지정책에 의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³²⁴ 핵무기 재배치 등 대중 압박 지렛대를 쓸 것을 미국에 요구하라는 주문에 대해 “물론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김관진 국방부장관>:³²⁵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지 대책에 동의한다.” “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전술 핵무기 반입에 관련된 협의는 없었다.”

김대중 고문의 핵무장 필요성 주장 이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 모두 70%의 국민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북한의 핵위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69.1%,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7.3%였다.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2.5%, “개발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14.0%였다.³²⁶

2012년 5월 10일 정몽준 의원은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저작권 이양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핵 대응능력만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고려해

324. 『중앙일보』, 2011년 3월 1일.

325. 『중앙일보』, 2011년 3월 1일.

326. tvN 방송국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리서치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011년 3월 2~3일 이틀 동안 전국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다.

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매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⁷ 북한이 2012년 개정헌법 전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 것이 김정일의 유산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 정몽준 의원은 기존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2년 6월 3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해 대내외에 천명해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됐으며, 이는 북핵폐기가 더 이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한 마당에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당장 자체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⁸

라. 미국 내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

1991년 9월 27일 아버지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 이후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금기시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는 와중에도 자체 핵무장이든 전술핵 재배치든 간에 남한 땅에 핵이 있어선 안된다는 원칙은 확고했다. 핵무기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오바마 정부에서 이런 입장에 변화가 있을 리 만무하다. 오바마 정부와 대다수 전직 관료·학자들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술핵 재배치 없이도 본토의 ICBM, 장거리폭격기, SLBM과 미사일 방어 등으로 북핵

327. 『연합뉴스』, 2011년 5월 10일.

328. 『조선일보』, 2012년 6월 4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감지된 것이 바로 2001년 2월 26일 세이모어(Gary Samore) 백악관 WMD 조정관의 발언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WMD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세이모어에 의해 미국 정부의 정책적 금기사항이 깨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1년 2월 26일 미국의 터프츠 대학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온 그의 발언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³²⁹

-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면 미국은 응할 것이다. 미국이 핵심 동맹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 만약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해도 그 규모는 작을 것이며 군사적 중요성보다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잠수함과 해외기지에 배치된 무기를 포함해서 한국 인근의 핵능력으로도 남한을 보호하는 데는 충분하다.
- 중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막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끊는 등 가능한 모든 외교수단을 사용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해체하려 할 것이다.
- 배치된 전술핵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된 후 바로 철수될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리라고는 어느 누구

³²⁹- *Joongang Daily*, March 1, 2011.

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세이모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고, 그의 발언 직후 미국에서도 발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세이모어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협의도 없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월 28일 세이모어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에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하다고 말했다.³³⁰ 같은 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대변인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이고 이 같은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전술핵무기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불필요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반입할 ‘계획’(plan) 또는 ‘의사’(intention)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³³¹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변화 가능성은 2012년 5월 미 의회에서도 표출되었다. 2012년 5월 9일 미 하원군사위원회가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채택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원군사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군사도발에 대응해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요청했는데, 아리조나 출신 프랭크스(Trent Franks)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찬성 36 對 반대 26’으로 가결되었다.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도 2명이 찬성한 것이다.³³² ‘2013

330- 『연합뉴스』, 2011년 3월 1일.

331- 『연합뉴스』, 2011년 3월 1일.

332- Josh Rogin, “House Pushes Obama Administration to Consider Tactical Nukes in South Korea,” (May 10, 2012), <<http://thecable.foreignpolicy.com>>.

국방수권법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³³

- 북한의 불법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에 대응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방의 안보와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함,
-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배치 지역을 '한국'으로 명시하진 않았으나 한국이 대상지역임은 분명함),
- 이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도발에 대응해서 서태평양 지역에 추가 재래식 전력과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함,
- 기존의 양자협정, 미군주둔협정 및 비용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주문함.

미 하원은 5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 요구가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채택했다.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의 조지아 출신 존슨(Hank Johnson)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찬성 160 對 반대 261'로 부결되었다.³³⁴

미 하원이 전술핵 재배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데 대해서, 한·미 양국 정부는 기존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당국자는 5월 13일 "91년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이후 북핵에 대한 억지는 핵우산과 재래식 정밀타격이 포함된 확장된 억지를 치밀하게 유지·강화해 가는 것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한·미 모두 기존 정책을 뒤집진 않을 것으

³³³- *Union Calendar No. 335, 112TH CONGRESS, 2D SESSION H. R. 4310* [Report No. 112-479], pp. 438~439.

³³⁴- 『연합뉴스』, 2012년 5월 19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미군 전술핵 철수 이후 한국 정부는 ‘도덕적 우위’에 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전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³³⁵ 같은 날 한국의 군 소식통도 “우리 땅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이는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하는 게 된다”면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없애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후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여러모로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³³⁶

5월 14일 정레브리핑에서 놀런드(Victoria Nuland) 국무부 대변인은 “핵없는 한반도를 지지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서 “한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무기는 필요 없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도 뜻도 없다”고 강조했다.³³⁷ 5월 18일 하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 요구가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 채택되자 백악관은 수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³³⁸

³³⁵ 『중앙일보』, 2012년 5월 14일.

³³⁶ 『조선일보』, 2012년 5월 14일.

³³⁷ 『세계일보』, 2012년 5월 16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ll, as you know, our policy remains support for a nonnuclear Korean Peninsula, so we don’t have any plans to change that policy. Tactical nuclear weapons, in our view, are unnecessary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So we don’t have any plans or intention to deploy them there.” Victoria Nuland, Spokesperson, *Daily Press Briefing* (Washington, D.C., May 14, 2012), <<http://www.state.gov/r/pa/prs/dpb/2012/05/189849.htm>>.

³³⁸ 『연합뉴스』, 2012년 5월 19일.

마. 한·미 공동연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KIDA)과 미국국방연구원(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IDA)의 전문가 두 명이 수행한 공동연구도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증강하는 현실을 감안 해서, 한·미의 확장억제 정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위협에 발맞추어 적응성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필요시 핵무기를 동맹방어의 수단으로 삼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⁹ 두 기관 모두 양국 국방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 국방부의 사전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할 때, 이 공동연구의 결과는 한·미 국방부가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한국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공동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공동연구는 먼저 북한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핵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상정했다.³⁴⁰

- <시나리오 1>: 북한이 한·미를 신속하게 패퇴시키기 위해 소규모의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며 도발을 감행하는 ‘선 핵사용, 후 남침’ 상황이다. 예를 들어, 소수의 핵무기로 가장 중요한 군사지휘 통제센터를 파괴하고 통신을 차단한 다음 약화된 방어망을 뚫고 서울을 점령하고 핵심 군사목표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이다.

³³⁹- Victor Utgoff, 박창권, 이수진, 『한·미 국방전문가가 본 확장억제 전략』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³⁴⁰- 위의 책, pp. 15~22.

I
II
III
IV
V
VI
VII
VIII

- <시나리오 2>: 북한에 의한 도발이나 급변사태로 인해서 전쟁이 개시된 후에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즉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개시된 후에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사용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할 것으로 상정한다: ① 한·미가 북한의 핵전력을 파괴하거나 북한의 핵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음, ② 한·미는 북한의 추가 핵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복하는 데 제약을 받을 것임, ③ 한·미는 북한에게 전쟁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를 보장하면서 전쟁 종결을 도모할 것임.
- <시나리오 3>: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면서 핵을 외교협상용으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즉 북한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재래식 군사도발과 핵사용 위협을 통해 한·미 동맹을 시험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은 대화와 도발을 번갈아 시도하면서 한·미 동맹의 결속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공동연구는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위협의 변화에 맞게 확장역지 조치도 발전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방위능력 개선과 재래식 타격 능력의 현실화는 물론 핵 억지력 부분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³⁴¹ 만약 동맹에 우려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일 내에 추가 핵전력이 한국 영토나 인근에 전진 배치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동맹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는 한·미 동맹뿐

³⁴¹- Victor Utgoff, 박창권, 이수진, 『한·미 국방전문가가 본 확장역제 전략』, pp. 22~25.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관계에서도 신뢰성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가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공동연구의 결론이다.

공동연구는 한·미 동맹의 확장역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곱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다음 두 방안이 핵 역지력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³⁴²

- <한국이 핵무기 책임을 보다 완전히 공유토록 함>: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모든 계획과 핵사용에 대한 결정 및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역할에 함께 참여해서, 핵사용에 따른 도덕적, 정치적 및 기타 책임을 가능한 한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핵사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① 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과 같은 협의체를 창설해서 핵무기 사용 방식과 가능한 옵션을 함께 계획함, ② 핵사용의 성격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상 간 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암호화된 통신설비를 구축함, ③ 핵임무를 계획하고 실행할 담당관 제도를 마련함.
- <필요시 한반도 및 인근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함>: 이 방안의 장점은 추가적인 억지 조치이자 안전보장 조치라는 것이다. 미 핵무기의 전진 배치는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북한도 전진 배치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대남 공격 역지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의 표시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반면에 이 방안은 핵비확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

³⁴²- Victor Utgoff, 박창권, 이수진, 『한·미 국방전문가가 본 확장억제 전략』, pp. 31~32; 34~36.

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핵무기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과 상반되는 방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핵 전진배치가 선례가 되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미 지도부가 동맹국 보호가 핵비확산보다 중요하고 핵은 동맹국 방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이 공동연구의 주장이다.

바. 한·미 확장역지정책위원회

(1) 구성과 의미

2010년 10월 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전통적인 동맹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된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문건을 승인하고 서명했다.

-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the Strategic Alliance 2015)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국방협력지침”(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
-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지침과 권한을 한·미 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전략기획지침”(the Strategic Planning Guidance)

한편, 게이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해 확장억지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지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한다.”³⁴³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확장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확장억지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EDPC)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권력승계 등으로 한반도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확장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성명에서 구성하기로 한 확장억지정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는 국방협력지침의 제3장(한국 연합방위)에 명기되어 있다. 양국 국방부가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전략비전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곱 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며, 이 위원회는 확장억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한다.”³⁴⁴

한·미가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장억지의 실효성을 높이

³⁴³ 관련 부분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Secretary Gates reaffirmed the continued U.S. commitment to provide and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to include the U.S. nuclear umbrella, conventional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Moreove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greed to institutionalize an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which will serve as a cooperation mechanis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xtended deterrence.”

³⁴⁴ 영어원문은 다음과 같다: “Institutionalize an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which is to serve as a cooperation mechanis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xtended deterrence.”

I
II
III
IV
V
VI
VII
VIII

기로 한 것은 당면한 안보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물리적으로 입증되었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북한의 비대칭 능력이 과감하고 무모한 재래식 도발의 형태로 현실에 구현됨으로써 핵을 가진 북한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군사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개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통해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운용을 추진해왔고,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등 핵 억지전략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WMD 및 비대칭 위협의 증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향적인 핵정책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한국사회에서 대북 위협인식이 증가하고 미국의 안보 공약과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이런 의문은 증폭될 것이다.³⁴⁵ 즉 미국이 뉴욕이나 L.A.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이나 부산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이는 결국 미국이 북한의 본토타격 능력을 의식해서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한반도 방어와 본토 방어를 연계하지 않는 “분리”(Decoupling)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제 42차 SCM에서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판단된다.

³⁴⁵ 게이트 국방장관 2011년 1월 12일 중국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5년 내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수 있고,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a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lisabeth Bumiller and David Sanger, “Gates warns of North Korea missile threat to U.S.” *New York Times*, January 11, 2011.

(2) 이행현황

일 년에 두 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EDPC의 제1차 본회의는 2011년 3월 28~29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및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Strategic Alliance 2015 Working Group: SAWG)와 병행해서 열렸다. 1차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과 WMD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핵위협 상황에서 확장억지수단 운용연습(TTX)을 실시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협의했다.³⁴⁶

제2차 EDPC 본회의는 2011년 9월 22~2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1차 회의 때와 같이, SPI 및 SAWG 회의과 같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확장억지수단 운용연습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과 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³⁴⁷ 이를 토대로, 한·미 양국은 2011년 11월 8~9일 미 전략사령부에서 EDPC 주관으로 확장억지수단 운용연습(TTX)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의 쉬퍼(Michael Schiffer)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및 로버츠(Bradley Roberts)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등 다수의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북핵위기 상황 하에서 양국 간 협의 및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연습을 실시했다.³⁴⁸

제3차 EDPC 본회의는 2012년 4월 26~27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10월 제43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신설키로 합의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고위급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KIDD 고위급 회의는 국방부

346.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11년 3월 28일).

347.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11년 9월 21일).

348.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11년 11월 4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정책차관 간의 회의로서 연 1회 열리며, 본 회의는 기존 국방당국 간 협의체인 SPI, EDPC 및 SAWG 회의를 통합해서 일 년에 두 번 개최하도록 했다. 3차 EDPC 본회의에서는 가능한 북한의 핵도발 시나리오를 한·미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2012년 확장억지수단 운용연습(TTX) 시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장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미 간 공동연구 및 고위정책결정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³⁴⁹

사. 중국의 입장

중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되고 미 의회마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자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에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던 2011년 초 환구시보(環球時報)가 3월 1일 사설과 별도의 기사에서 전술핵 재배치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비판했다.³⁵⁰

- <사실: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리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배치하고 더 선진적인 운반체를 개발해 스스로의 전략적 안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³⁴⁹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12년 4월 7일).

³⁵⁰ 『중앙일보』, 2011년 3월 2일.

- <별도 기사>: “갑작스러운 전술핵 재배치 논란으로 한반도에 다시 ‘핵 대결 시대’가 열릴까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이핵제핵’(以核制核)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제기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박창권 박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중국에서 가진 한 회의에서 중국 학자들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한국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³⁵¹ 미 하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요구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되자 5월 15일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의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미 하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다음과 같이 실었다.³⁵²

- <환구시보>: 미국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압력임. 미 공화당이 전면에서 나서 논란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제어하려는(以華制朝)” 전략임.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반도 전술핵무기 논란이 벌어지면서 동북아에 ‘핵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음. 북핵문제 해결은 동북아 안전에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그 이유는 중일 간에는 다오위다오(釣魚島), 한·일 간에는 독도 다툼이 상존하는 등 분쟁거리가 산적한 때문임.
- <중국 국영 CCTV>: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북핵문제 해

³⁵¹ 필자와의 의견교환, 2012년 6월 5일.

³⁵² 『연합뉴스』, 2012년 5월 19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

- <인민일보>: 미국 언론매체들의 한반도 전술핵 관련 보도를 인용하면서 우려를 표시함.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됐다고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이와는 모순되는 일이라고 밝힘.

2. 핵우산정책의 신뢰성 제고방안

본 절에서는 미국의 對韓 핵우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방안은 독자적으로 채택될 수도 있고 다른 방안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핵억지의 성공요건 충족

핵우산, 즉 확장핵억지는 미국이 보유한(혹은 한·미 공동으로 관리하는) 핵무기를 자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핵우산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핵억지가 성공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북한처럼 권력승계과정에 있는 체제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연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해서 기존의 핵억지 역학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연구는 핵억지의 성공 여부가 억지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정보보다는 억지전략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미국(혹은 한·미)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³⁵³ 이 연구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억지전략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소련이 “하지 말아

야 할 행동”(proscribed action)을 분명히 규정했고, 흐루시초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알렸기 때문에 소련이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억지의 대상인 상대방의 심리상태를 파악해야 억지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억지가 성공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쿠바 미사일 위기의 경우 관련자들의 인터뷰, 해제된 비밀문서 등 많은 자료를 통해서 억지가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⁵⁴ 미국이 소련에 대해 ‘해선 안 될 행동’(핵미사일의 쿠바 주둔)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련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불할 대가를 밝히면서 분명하게 경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³⁵⁵

첫째, 케네디(Robert Kennedy) 법무장관이 1962년 10월 27일 아침 7시 45분 미국주재 소련대사 도브리닌(Anatoly Dobrynin)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일까지 쿠바의 핵미사일 기지가 제거되어야 한다. 이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다. 소련이 기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다.” 1964년 케네디를 인터뷰한 엘스버그(Daniel Ellsberg)에 따르면, 당시 케네디는 도브리닌에게 미사일을 제거할 시간이 48시간밖에 없고, 48시간 안에 미사일 제거작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미국이 공격하고 쿠바를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³⁵⁶ 엘스버그에 따르면, 쿠바에 대한 통제력을 상

³⁵³- Van Jackson, “Extended Deterrence and Dealing with Regional Contingencies,” a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U.S.-ROK Strategic Dialogue* (Royal Lahaina Resort, Maui, February 9~10, 2012), p. 1.

³⁵⁴- 필자와 Van Jackson과의 의견교환, 2012년 2월 12일.

³⁵⁵- Bruce Allin, James Blight, and David Welch, “Essence of Revision: Moscow, Havana,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89~1990), pp. 163~167.

³⁵⁶- Seymour Hersh, “Was Castro out of control in 1962?” *Washington Post*,

실한 흐루시초프가 케네디의 메시지를 최후통첩으로 이해하고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둘째, 10월 26일 오후 1시에 미국주재 소련대사관 직원인 포민(Aleksandr Fomin)이 ABC 방송국의 국무부 출입기자인 스칼리(John Scali)를 만나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스칼리는 소련이 수 시간 내에 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미사일 위기가 끝난 후에 포민은 스칼리에게 그의 의견이 매우 가치가 있었다는 흐루시초프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쿠마 미사일 위기에 대한 이런 분석에 근거해서 잭슨은 역지의 대상에 대한 정보의 충분성 여부에 관계없이, 역지가 성공할 수 있는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³⁵⁷

- 상대가 해선 안 될 행동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 상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치르게 될 대가의 신뢰성을 높일 것
- 이런 위협을 실행할 능력을 배양할 것

한·미가 북한에 대해 핵억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북한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금지된 행동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핵무기 사용, ② 국지전 도발, ③ 핵무기 사용 위협, ④ HEU 핵개발, ⑤ 핵능력 확산.

October 11, 1987, pp. H1~H2,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³⁵⁷- Van Jackson, "Extended Deterrence and Dealing with Regional Contingencies," p. 2.

둘째,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한·미가 취할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다. 대응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신뢰성도 향상될 것이다. 각각의 금지된 행동에 대해서 별도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핵무기 사용 ↔ 북한 지도부에 대한 핵보복, ② 국지전 도발 ↔ 전술핵 재배치, ③ 핵무기 사용 위협 ↔ 미군 핵전력 한반도 인근 배치, ④ HEU 핵개발 ↔ 유엔안보리 제재 강화, ⑤ 핵능력 확산 ↔ PSI 및 유엔안보리 제재 강화. 특히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북한 정권이 치르게 될 대가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간(Patrick Morgan)도 핵을 보유한 불량국가에 대한 억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극은 피하되 가능한 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오해의 소지를 예방해야 하며,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위협과 같이 정권이 두려워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위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³⁵⁸

셋째, 금지선을 넘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실행할 능력은 한·미 양국의 철저한 정책공조와 준비 및 훈련을 통해 배양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꾸준히 국제사회에 알리는 외교력도 병행해야 한다.

나. 전술핵 재배치의 협상카드화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 시한을 정해놓고 북핵폐기 협상을 진행하되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고(조건부), 이후 북핵폐기 협상을 북한 핵과 주한미군 전술핵의 함께 감축하는 쌍방향 군축협상

³⁵⁸- Patrick M. Morgan, *Deterrence Now*, p. 275.

I
II
III
IV
V
VI
VII
VIII

으로 전환해서 군축협상이 성공할 때까지(한시적으로) 전술핵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북핵협상을 연계하는 이 방안은 “이중경로 정책”(Dual track policy)이란 이름으로 처음 소개되었고,³⁵⁹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정책”이란 이름으로 제시되기도 했다.³⁶⁰ 2010년에는 이중경로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보완한 방안이 제시되었는데,³⁶¹ 이상의 세 가지 방안은 모두 북핵폐기 협상의 시한을 전시작전권 전환일인 2012년 4월 17일로 설정했다. 북핵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 일정이 2015년 12월로 변경되면서 북핵협상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조정하고 추진단계와 목적을 명시해서 ‘조건부·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³⁶²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카드화 하는 방안은 북핵협상에 우리의 안보를 무작정 맡길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6자회담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그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대폭 강화되었고 회담의 마지막 레드 라인이었던 ‘핵기술 수출 금지’도 깨졌다. 6자회담 10년 동안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4배로 늘어났고 두 번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시리아에 원자로를 건설해주었다. 2010년 11월에는 북한 당국이 집요하게 존재를 부인하던 원심분리기 시설까지 공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낙관론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회담만 무한정 지속할

359- 전성훈, “북한 핵개발의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글로벌 차원의 영향,” 『북핵문제와 북한 체제변화』 (제21차 세종국가전략포럼, 2009.10.9).

360-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p. 82.

361-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국가전략』, 제16권 1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0), pp. 76~81.

362- 전성훈, “한국의 핵정책 옵션: 핵무장까지 갈 것인가?” pp. 83~85. 협상시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설정한 조건부·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방안은 다음 논문을 통해 영문으로도 국제사회에 소개되었다. Cheon Seongwhun, “Changing Dynamics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pp. 56~60.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인 것이다. 이제는 북핵협상이 재개될 때마다 가졌던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하는 좌절로 바뀌는 반복되는 모순에 종지부를 찍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일방적인 짝사랑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국민적 욕구가 크다. 북한 핵문제가 시작된 이후 지난 20년간 한반도의 안보담론을 주도해 온 쪽은 핵을 협상카드로 삼아 의제를 선점해 온 북한이라는 사실도 잊어서 안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 협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면서 안보담론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 본 연구는 주한미군 전술핵의 조건부·한시적 재배치를 협상카드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990년에 공론화된 북핵문제가 금년으로 23년째가 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귀에 ‘핵’이라는 낯선 말이 들려오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는 것이다. 1990년생 아이가 자라 대학교 3, 4학년이 되던 사이에 남북한, 북·미, 4자, 6자회담, KEDO 등 여러 형태의 협상을 했다. 그리고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했다. 그 사이에 북한의 핵능력은 대한민국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전면에 부상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핵무장 논의는 북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지난 2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허무감, 북한정권의 강력한 핵보유 의지와 설득을 통한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좌절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무력감, 남북 간의 전략적 균형이 깨졌다는 자괴감, 그리고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핵을 가진 북한이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할 것이라는 위기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민심의 울림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카드화 하는 방안은 건국 이후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서, 다음의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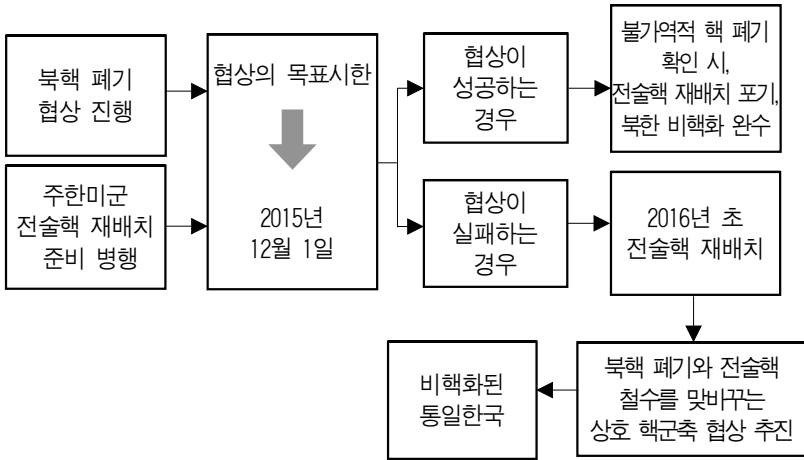
VI

VII

VIII

<그림 VIII-3>과 같은 이중경로를 따른다. 2010년 6월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이명박·오바마 두 대통령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일이 2015년 12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협상시한은 기존의 2015년 12월 31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했다.

●그림 VIII-3 조건부·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앞서 소개한 2011년 3월 초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대로 응답자의 69.1%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1단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점인 2015년 12월 1일까지 북핵협상을 추진하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정규모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기본구상에 합의한다.
- <2-1단계>: 이런 구상을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에게 통보하고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제의·추진한다.

- <2-2단계>: 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미 간에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재배치할 전술핵의 규모와 투발수단, 전술핵의 운용 및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한다.
- <3-1단계>: 협상이 성공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원칙에 의거해서 북핵폐기가 불가역적인 상황에 도달하는 경우 전술핵 재배치 계획을 철회한다.
- <3-2단계>: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2016년 초부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 배치 규모와 장소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 <4단계>: 전술핵 재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에 대해 북핵폐기와 전술핵 철수를 연계한 쌍방 핵군축 협상을 제의한다.
- <5단계>: 통일이전 혹은 통일과정에서 핵군축 협상을 성공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한다.

전술핵의 조건부·한시적 재배치를 협상카드화 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우리가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이다.
- 북한의 핵위협으로 우리 사회와 군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서 도발을 해도 한·미가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도발을 함부로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이다.³⁶³

³⁶³ 우리 사회에는 전술핵을 재배치해도 북한의 재래식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재배치 무용론도 존재한다. 2012년 8월 24일, 외교안보연구원 최우선 박사와의 의견 교환. 냉전시기에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우리 군사력에 대한 대규모 직접 도발이고 우리 영토에 대한

I
II
III
IV
V
VI
VII
VIII

- 핵에는 핵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감안할 때, 그 어떤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도 핵무기의 파괴력에 견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북핵협상을 촉진하고 타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우리에게 아예 핵이 없으면 협상에서 우리의 발언이 먹혀들지 않고 협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³⁶⁴
- 북한과 중국도 북한 핵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당근 위주의 협상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정적 인센티브”(Negative Incentive)를 제공하는 것이다.
-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보공약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기 위해서이다. 핵이든 재래식 전력이든 북한에 가까이 있어야 억지력이 높아진다. 미 지상군이 본토에 주둔하다 유사시에 한반도에 급파되는 것보다 한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안보공약을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2011년 중국을 방문한 게이트 국방장관의 말처럼 북한이 5년 내에 핵탑재용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³⁶⁵ 앞으로 미국

공개적인 공격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도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는 데는 핵 억지력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자신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 지도부가 무분별한 행동을 삼가도록 견제하는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³⁶⁴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의 핵보유 동기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북핵폐기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2012년 8월 24일 국방대학교 김영호 교수와의 의견교환. 그러나 북한 지도부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주고 핵보유에 따른 안보적 부담을 체감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을 촉진하는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³⁶⁵ Elisabeth Bumiller and David Sanger, “Gates warns of North Korea missile

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핵우산이 말뿐인 공약(空約)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위협적인 실천수단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³⁶⁶

다. 한·미, 한·일, 한·미·일 핵자문회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핵의 사용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 간에 양자 차원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을 추진하고 한·미·일 3각 협력도 촉진해 나가야 한다. 한·일 및 한·미·일 핵협력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⁶⁷

threat to U.S.”

³⁶⁶ 현재 한·미 간에 2014년 만료되는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 협상과 미사일사거리 연장 협상 등 예민한 사안들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미국에게 부담을 주고 한·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의 의견교환, 2012년 9월 4일. 전술핵 재배치가 다른 사안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므로, 미사일 사거리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데 국가역량을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협정은 순수하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고 핵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은 전술핵 재배치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굳이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³⁶⁷ 이 절은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보완한 것이다.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pp. 89~94;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pp. 81~84.

I
II
III
IV
V
VI
VII
VIII

(1) 현황과 배경

한·일 양국은 모두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양국 내에서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어졌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을 정립하고 필요한 훈련을 해놓지 않는 한 핵우산 공약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북한의 핵개발에 더해서 미 국방부가 소위 “지구적 태세검토”(global posture review)에 따라 추진 중인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과 신속적인 운용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는 사실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³⁶⁸ 또한 한국의 경우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공약과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도 서유럽의 경험을 원용해서 미군의 핵전력 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국도 미국 핵무기의 표적선정 등 사용계획에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고, 미국의 핵탄두를 한국의 미사일에 탑재하는 등 핵우산 구성전력에 한국군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³⁶⁹

2009년 8월에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서유럽의 핵계획그룹과 같은 동북아판 “핵전략계획그룹”(Nuclear Strategic Planning Group: NSPG)

³⁶⁸- Jacquelyn Davis, et al., *Updating U.S. Deterrence Concepts and Operational Planning* (IFPA, February 2009), p. 11, <www.ifpa.org/pdf/Updating_US_Deterrence_Concepts.pdf>.

³⁶⁹- 홍순명, “서독 사례로 본 ‘핵 없는 핵 보유’ 가능성,” 『신동아』, 2009년 7월호, pp. 288~291.

을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³⁷⁰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고위자문관을 담당했던 예이츠와 화이트(Stephen Yates and Christian Whiton)은 지금의 동북아는 서유럽의 1960년대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하고 미국은 동맹국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NSPG를 창설해서 핵억지와 방어 계획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동맹국들과 논의해서 전통적인 핵억지 외에도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거부억지”(deterrence by denial) 등으로 억지의 저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의 잘못된 행동으로 중국의 공격능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가 깨닫도록 자극함으로써 중국의 대북한 압력 행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서유럽식의 핵계획그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비전’에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언급한 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³⁷¹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 핵무기에 관한 전략, 전력구조, 운용 독트린 및 표적선정 등을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극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를 의미 있게 다룰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불분명

³⁷⁰- Stephen Yates and Christian Whiton, “Smarter North Korean diplomacy: talking to allies is more important than talking to Pyongyang,” *Wall Street Journal*, August 5, 2009.

³⁷¹- Brad Glosserman and Ralph Cossa, “U.S.-ROK Relations: a Joint Vision--and Concerns about Commitment,” *PactNet Newsletter #54* (Pacific Forum, August 4, 2009).

I
II
III
IV
V
VI
VII
VIII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문제와 같이 통제가 강한 사안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으며, 한국이 일본을 기준으로 삼아 미국에 대한 요구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 효과와 기능

미국 내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각각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2009년 6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수상이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지면 일본 내부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얘기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한·일 간에 북핵에 대응한 전략대화를 시작하자”고 응수하고 한·일 핵자문회의 구성을 제의했어야 했다.

또한 북핵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핵보다 정권붕괴를 더 걱정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을 이대로 방치하면 중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지도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중국전문가들이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아소 수상의 핵무장 발언은 중국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이 축적되어 일본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 즉 국제무대에서 일본 핵이라는 ‘절대 악’이 ‘필요 악’으로 둔갑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양국 간의 전반적인 안보협력은 물론 특히 핵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이미 지난 6월 29일 양국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체결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국내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도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아직 한·일 간에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양국의 국민정서와 정치권의 인식 등 제반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핵전략 분야에서 한·일 간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일본을 견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용일(用日)의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조금만 멀리 바라보면 한·일 간의 핵협력은 한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일 전략대화과 핵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북한 핵을 핑계로 한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미·일 핵전략 대화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화는 또한 양국 내에 존재하는 핵무장 선호 여론도 달래면서 양국의 비핵정책을 살려나갈 수 있는 완충역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일본과 미국 사이에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미·일 협력이 한·미 협력에 비해 앞서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등 불량국가의 WMD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했는데, 일본과는 WMD 방어워킹그룹을 구성해서 WMD로 공격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작전, 제독, 의료 등 제반 준비를 하는 반면에 한국과는 WMD 제거에 초점을 맞춘 반확산워킹그룹을 구성한 데 그쳤다.³⁷²

³⁷²- Paul Bernstein, *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2008), p. 29.

I
II
III
IV
V
VI
VII
VIII

핵전력 운용에 대한 미·일 간의 협력은 한국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소한 우리도 핵우산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전략 대화를 가질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한·일, 한·미 전략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를 한·미·일 “3국 핵자문회의”(Trilateral Nuclear Consultative Committee: TNCC)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3국 핵자문회의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내의 핵무장 지지 여론을 무마하고 건설적으로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핵무기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 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평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억지전략의 기본에 충실

(1) 선제공격 언급 자제

북한의 핵능력은 한국군에게 선제공격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1차 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2차 대응력이 핵무장을 포기한 한국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제Ⅳ장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 임무는 북한의 핵이 남한 땅에서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 지도부의 ‘선제공격’ 발언이 계속되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제공격은 한국의 적절한 군사전략이 될 수 없다. 선제공격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야 하는 기술적·정치적·법적 어려움, 상대의 보복과 더 큰 무력도발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위험성, 한국이 국제평화의 파괴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선제공격은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중견국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더욱이 선제공격 가능성을 암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군사전략인 억지전략과도 상충된다. 억지전략의 일차적 목표는 상대의 선제공격을 예방하는 것이고, 억지가 실패했을 경우 이차적으로 상대를 응징·보복해서 패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억지전략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즉 미국의 핵우산정책도 북한을 핵으로 선제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남한을 공격했을 때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우산정책과 억지전략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한국이 억지전략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과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꼴이 된다. 즉 한국군의 선제공격 발언은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핵우산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한국이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다.

선제공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인 억지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인 국방정책을 취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북한에게는 한국이 한·미 동맹과 핵우산을 불신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소위, “적극적 억지”(Proactive

I
II
III
IV
V
VI
VII
VIII

Deterrence)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적극적 억지’(Proactive Deterrence)에 대한 전략적 평가³⁷³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는 소위 ‘적극적 억지’ 독트린을 천명했다. 2010년 11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³⁷⁴ 이 회의에서는 ‘능동적 억지 전략’이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공격징후가 확실한 경우 먼저 북한의 전쟁지휘체계와 공격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고 도발의지 자체를 분쇄하는 전략으로 정의되었다.³⁷⁵

우리 군은 적극적 억지 개념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김관진 국방부장은 2011년 3월 3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도발의 원점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³⁷⁶ 김 장관은 4월 5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지원세력에는 공격을 감행한 부대 이외에 인근 부대까지 포함된다고 부연 설명했다.³⁷⁷ 박종현 공군참모총장도 2011

373- 아래의 내용은 필자의 다음 글을 발췌한 것이다. 전성훈, “북한의 핵위협 재평가와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 pp. 77~80.

374- 권태영·신범철,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 방향,” 『전략연구』, 통권 제51호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 29.

375- 위의 글.

376- 『조선일보』, 2011년 4월 1일.

377- 『조선일보』, 2011년 4월 6일.

년 4월 7일 국방부 기자단을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갖고, “적극적 억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방어 위주 비상대기보다 공격 비상대기 전투기 대수를 크게 늘려 운용 중이고 출격시간도 단축했다”고 밝혔다.³⁷⁸ 북한 전투기의 영공 침범에 대비해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방어용 비상대기보다는 유사시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을 갖춘 공격 비상대기 태세를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다.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의 기본적인 군사전략은 전통적인 억지전략이다. 전통적인 억지는 선제공격을 포기하고, 적의 도발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응징보복’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무수한 도발이 있었지만, 억지전략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북한의 테러나 국지도발을 전통적인 억지전략의 실패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저강도”(Low-Intensity)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만큼 전통적인 억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억지는 천안함 폭침 이후 전통적인 억지전략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의 핵개발 이후 핵사용을 막기 위해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발생한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군에게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더욱 각인 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제 대응은 국제법적으로 위협이 “임박한”(imminent)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위협의 임박성을 입증할 책무가 주어지게 된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부시 행정부는 후세인 정권의 WMD 개발을 ‘임박한 위협’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제사회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

I
II
III
IV
V
VI
VII
VIII

378. 『문화일보』, 2011년 4월 8일.

고, 오바마 행정부는 선제공격 독트린을 사실상 철회했다. 김관진 국방 장관은 2011년 6월 1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지도발시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전면전 시에는) 우리가 작전계획(작계)을 만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³⁷⁹

한국의 적극적 억지 전략은 선제공격 옵션까지 포함하기보다는 적 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한국의 적극적 억지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억지에 관한 한국의 인식변화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저장도 도발에 대해 한국이 보복하는 경우 북한의 또 다른 보복에 대해 한국이 재차 보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한 번의 ‘장군, 명군’은 가능할지 모르나 두 번 세 번 ‘장군, 명군’을 되풀이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또한 사회적·심리적으로 북한의 보복에 다시 보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의 캠벨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한국의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한국 측에 얘기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³⁸⁰

둘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보복이 결국에는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대규모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한국에 비해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이기에 확전을 감행할 의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확전에서의 우위”(escalation dominance)를 점유한 쪽은 북한이

379- 『연합뉴스』, 2011년 6월 13일.

380- 『중앙일보』, 2011년 4월 1일.

며, 한국의 적극적 억지 전략이 한반도의 “확전통제”(escalation control)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³⁸¹ 셋째, 한국이 안보전략과 대북방어태세의 근간인 억지전략을 수정하면서 전통적인 억지전략을 공유해 온 미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넷째, 선제공격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력인데, 미국의 정보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선제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군사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국력이 우세한 한국이 선제적 대응이나 압도적 보복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위험한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섯째, 한국이 북한의 함정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 정부가 천명한 대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규모의 도발을 해서 한국의 보복을 유인한 다음, 한국의 보복을 새로운 도발로 규정하고 더 큰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 한·미 확장억지정책위원회 내실화

확장억지정책위원회가 향후 한·미 동맹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위원회의 기본목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확장억지정책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확장억지가 전작권 전환 이전과 다름없이 공고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현재 28,500명 수준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³⁸¹- Abraham Denmark, “Proactive Deterrence: the Challenge of Escalation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On Korea*, Vol. 5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June 2012).

I
II
III
IV
V
VI
VII
VIII

최근에 복무기간을 가족까지 동반한 3년으로 늘리는 조치가 단행된 만큼, 안보공약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³⁸² 하지만 전략권 전환은 물론이고 가장 효과적인 지휘체계라고 정평이 난 연합사 해체로 인해서 ‘명령체계의 단일성’이 사라지는 만큼, 이로 인한 전략적 손실을 만회하는 것은 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확장역지정책위원회는 전략권 전환으로 인해서 미국의 확장역지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확장역지정책위원회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핵우산 문제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2010년 4월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고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새로운 핵전략을 채택했다. 핵무기의 역할 축소는 불가피하게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핵역지, 즉 핵우산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핵우산 약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미·일 간에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이다.³⁸³ 예를 들어, 미국의 외교정책분석연구소(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는 2009년에 일본과 미국이 핵을 포함해서 다양한 위협요인을 다루는 “억

382. 예를 들어,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1차 SCM의 공동성명 제5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양 장관은 이와 같은 공약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공약과 함께 모든 주한 미군장병들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10년 10월 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SCM의 공동성명 제5항이 미국의 이런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양 장관은 미 합중국의 이러한 공약이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과 더불어 모든 주한미군 소속 장병들의 복무기간 확대 및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383.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pp. 61~62.

지정책그룹”(Deterrence Policy Group)을 창설해서 다음과 사항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³⁸⁴ ① 미국의 핵정책과 미·일 핵협력 시나리오, ② 미·일 공동 위협평가, ③ 북한과 중국의 억지전략에 대한 공동연구, ④ 핵·미사일 확산에 대한 공동대처, 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조치 공유 등.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켈벨(Kurt Campbell)도 미·일 양국이 핵 억지의 요소들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³⁸⁵ 앞서 밝힌 대로, 미·일 양국은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강화하는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해왔고, 한·미에 비해 앞선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³⁸⁶

앞으로 한국은 확장억지정책위원회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DPC가 미국이 NATO 이외에 설치한 최초의 협력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에³⁸⁷ 만족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은 EDPC에 대해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부러워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일본 당국자들의 얘기는 다르다. 일본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미·일 양국은 EDPC와 같은 기구가 없이도 미국의 對일본 핵우산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일본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자구 하나 하나의 의

³⁸⁴- James Schoff, *Realigning Priorities: The U.S.-Japan Alliance &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Cambridge, MA: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March 2009), p. xiv.

³⁸⁵- Stephen Yates and Christian Whiton, “Smarter North Korean diplomacy: talking to allies is more important than talking to Pyongyang.”

³⁸⁶- Paul Bernstein, *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 29.

³⁸⁷-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12년 4월 27일).

미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³⁸⁸

향후 한·미 확장역지정책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핵무기의 역할 축소로 약화될 수 있는 확장핵역지, 즉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확장핵역지의 대상을 당면한 북한의 위협을 넘어 ‘미래에 상정할 수 있는 주변위협’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북한의 핵능력뿐만 아니라 장래에 제기될 수 있는 주변국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 평가를 통해 하나의 위협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 한·미 동맹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면, 확장역지정책위원회는 당연히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둘째, 단기, 중장기 차원에서 식별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비핵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과 조치를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과 기타 장래의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과 방식에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확장역지정책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수준을 넘어서 적어도 양국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한·미 핵전략 대화’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NATO의 경우 확장핵역지 문제는 장관급 회담의 의제이다. EDPC를 양국 국방장관급

³⁸⁸ 필자와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 간의 의견교환, 2012년 3월 15일.

회의의 자문기구로 상설화해서 SCM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참고문헌

1. 단행본

-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92.
-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KINU 연구총서 09-01.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KINU 정책연구 시리즈 07-08.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_____. 『북한의 WMD 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서울: 통일부, 1994.
-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94~2011년』.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Utgoff, Victor·박창권·이수진. 『한·미 국방전문가가 본 확장억제 전략』.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Albright, David and Christina Walrond. *North Korea'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August 16, 2012.

Bernstein, Paul. *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2008.

Crawford, Timothy. *Pivotal Deterr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Davis, Jacquelyn, et al.. "Updating U.S. Deterrence Concepts and Operational Planning." IFPA, February 2009. <www.ifpa

.org/pdf/Updating_US_Deterrence_Concepts.pdf>.

Freedman, Lawrence. *Deterrence*. Malden, MA: Polity Press, 2004.

George, Alexander and Richard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Hecker, Siegfried.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09: A Path to Nuclear Disarmament*. Program on Science and Global Security, Princeton University, October 2009.

Kapur, S. Paul. *Dangerous Deterrent: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Conflict in South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Levin, Norman. *The Shape of Korea's Future: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Long-Term Security Issues*. Santa Monica: RAND, 1999.

Morgan, Patrick M. *Deterrence N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_____. *Deterrence: A Conceptual Analysis*. 2nd ed.. Beverly Hills: Sage, 1983.

Paul, T.V.,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aul, T.V..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Saeed, Ferial Ara. *Redefining Success: Applying Lessons in Nuclear Diplomacy from North Korea to Iran*.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eptember 2010.
- Schoff, James. *Realigning Priorities: The U.S.-Japan Alliance &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Cambridge, MA: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March 2009.
- Shelling, Thomas.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Snyder, Glenn.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4.
- U.S. Department of Defense.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010.
- _____.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10.
- _____.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010.
-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 Washington, D.C.: CSIS, August 2012.

2. 논문

- 권태영·신범철.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통권 제 51호,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국가전략』. 제16권 1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0.
- _____. “북한 핵개발의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글로벌 차원의 영향.” 『북핵문제와 북한 체제변화』. 제21차 세종국가전략포럼. 2009.10.9.
- _____. “북한의 3차 핵실험 전후 대책.” 『전략연구』. 제XVIII권 제2호,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 _____.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의도와 대응방안.” 『북한』. 통권 469호, 서울: 북한연구소, 2011.
- _____.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국제정세·남북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5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2.
- _____.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 분석.” 『국가전략』. 제11권 1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5.
- _____. “북한의 핵위협 재평가와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 _____. “한국의 PSI 전면참가와 남북통행합의서의 보완.” 『Strategy 21』. 통권 27호,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 _____. “한국의 핵정책 옵션: 핵무장까지 갈 것인가?” 『한국 안보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세종연구소 주최 제24차 세종 국가전략포럼. 2011.4.12.
- _____.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의 선택.” 『국가전략』. 제10권 3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4.

전호환.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국방정책 연구』. 제24권 2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8.

한인택. “동맹과 확장억지: 유럽의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동아시아연구원·제주평화연구원 공동 주최. EAI-JPI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2009.9.11.

Adler, Emanuel. “Complex Deterrence in the Asymmetric-Warfare Era.”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Albright, David and Paul Brannan. “Satellite Image Shows Building Containing Centrifuges in North Korea.” *ISIS Report*.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November 21, 2010.

Allin, Bruce, James Blight, and David Welch. “Essence of Revision: Moscow, Havana,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89-1990.

Arreguin-Toft, Ivan. “Unconventional Deterrence: How the Weak Deter the Strong.”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Bunn, Elaine. “U.S. Policy Review and NATO Strateg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NATO’s Nuclear Deterrent: the New Strategic Concept and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in Rome, Italy. 1~2 March 2010.

- Cheon, Seongwhun. "Changing Dynamics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Pacific Focus*. Vol. XXVI, No. 1,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Inha University, 2011.
- Crawford, Timothy. "The Endurance of Extended Deterrence: Continuity, Change, and Complexity in Theory and Practic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Denmark, Abraham. "Proactive Deterrence: the Challenge of Escalation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On Korea*. Vol. 5.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June 2012.
- Fetter, Steve. "Limit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Harold Feiveson, ed.. *The Nuclear Turning Point: A Blueprint for Deep Cuts and De-Alerting of Nuclear Weap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9.
- Fortmann, Michel and Stefanie von Hlatky.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Impacts of Emerging Technologies on Deterrenc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Gates, Robert M.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9. <<http://www.foreignaffairs.org/20090101faessay88103/robert-m-gates/a-balanced-strategy.html>>.
- Glosserman, Brad and Ralph Cossa. "U.S.-ROK Relations: a Joint

- Vision--and Concerns about Commitment.” *PactNet Newsletter* #54. Pacific Forum. August 4, 2009.
- Gusterson, Hugh. “Thinking Creatively about the North Korean Stalemat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ugust 12, 2009.
- Harvey, Frank and Patrick James. “Deterrence and compellence in Iraq, 1991~2003.”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Hecker, Siegfried. “What I Found in North Korea: Pyongyang’s Plutonium is No Longer the Only Problem.” *Foreign Affairs* (Snapshot). December 9, 2010. <<http://www.foreignaffairs.com/print/66970>>.
- Heinonen, Olli.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Transition.” *38 North.org*. April 26, 2012.
- Jackson, Van. “Extended Deterrence and Dealing with Regional Contingencies.” a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U.S.-ROK Strategic Dialogue. Royal Lahaina Resort, Maui. February 9~10, 2012.
- Jervis, Robert. “Deterrence, Rogue States, and the U.S. Policy.”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Kimball, Daryl, Oliver Meier and Paul Ingram. “NATO on Nuclear Weapons: Opportunities Missed and Next Steps Forward.” May 21, 2012. <<http://www.armscontrolnow.org>>.
- Knopf, Jeffrey. “Three Items in One: Deterrence as Concept,

- Research Program, and Political Issu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Kristensen, Hans M. “Obama and the Nuclear War Plan.” *Federation of The American Scientists Issue Brief*. February 2010. <<http://www.fas.org/blog/ssp/>>
- Kristensen, Hans, Robert Norris, and Ivan Oelrich. “From Counterforce to Minimal Deterrence: A New Nuclear Policy on the Path Toward Eliminating Nuclear Weapons.” Occasional Paper No. 7.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and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April 2009. <www.fas.org/pubs/_docs/OccasionalPaper7.pdf>.
- Lebow, Richard. “Deterrence and Reassurance: Lessons from the Cold War.” *Global Dialogue*. Autumn 2001.
- Lewis, Jeffrey. “Can North Korea Build the H-Bomb?” <<http://38north.org/2010/06/>>.
- Marquand, Robert. “North Korea’s Nukes: Advanced, but Hidden.” *Christian Science Monitor*. December 21, 2004.
- Milonopoulos, Niko, et al.. “North Korea from 30,000 feet.”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anuary 6, 2012.
- Mistry, Dinshaw. “Complexity of Deterrence among New Nuclear States: the India-Pakistan cas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Morgan, Patrick. “Collective-Actor Deterrenc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_____ and T.V. Paul. "Deterrence among Great Powers in an Era of Globalization."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NRDC.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003."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April, 2003.

Pabian, Frank and Siegfried Hecker. "Contemplating a Third Nuclear Test in Nor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ugust 6, 2012.

Paul, T.V..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Rogin, Josh. "House Pushes Obama Administration to Consider Tactical Nukes in South Korea." May 10, 2012. <<http://thecable.foreignpolicy.com>>.

Snyder, Glenn. "The Balance of Power and the Balance of Terror." in Paul Seabury, ed.. *The Balance of Power*. San Francisco: Chandler, 1965.

Zhang, Hui. "Assessing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18, 2009.

3. 기타자료

『국민일보』.

『동아일보』.

『로동신문』.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Joongang Daily.

국방부 보도자료. 2011년 11월 4일.

_____. 2011년 3월 28일.

_____. 2011년 9월 21일.

_____. 2012년 4월 27일.

_____. 2012년 4월 7일.

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북한핵실험을 규탄한다.” 2006년 10월 9일. <<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delegationBriefing/mainDelegateBriefingView.do>>.

홍순명. “서독 사례로 본 ‘핵 없는 핵 보유’ 가능성.” 『신동아』. 2009년 7월호.

Baker, Peter. “Arms control may be different things on paper and on the ground.” *New York Times*. March 30, 2010.

_____. “Treaty advances Obama’s nuclear vision.” *New York Times*. March 25, 2010.

_____. “Twists and turns on way to arms pact with Russia.” *New York Times*. March 26, 2010.

Blair, Dennis.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or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February 2, 2010. <[www.dni.gov/files/documents/Newsroom/Testimonies/20100202_testimony .pdf](http://www.dni.gov/files/documents/Newsroom/Testimonies/20100202_testimony.pdf)>.

Bumiller, Elisabeth and David Sanger. “Gates warns of North Korea missile threat to U.S..” *New York Times*. January 11, 2011.

Clinton, Hillary Rodham. Secretary of State. “Statement Before the 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Washington, D.C.. February 29, 201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2/02/184885.htm>>.

FPC(Foreign Press Center) Briefing. “DOD’s Nuclear Posture Review

- Rollout Briefing.” The Washington Foreign Press Center. Washington, D.C.. April 7, 2010. <[http://www .defense.gov/npr/docs/FPC%20_4-7-10_%20Nuclear%20Posture%20Review.pdf](http://www.defense.gov/npr/docs/FPC%20_4-7-10_%20Nuclear%20Posture%20Review.pdf)>.
- Gertz, Bill. “CIA shifts on North Korean nukes.” *Washington Times*. July 4, 2003.
- Harrison, Selig. “Inside North Korea: leaders open to ending nuclear crisis.” *Financial Times*. May 4, 2004.
- Hecker, Siegfried.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Hearing on *Visit to the Yongbyon Nuclear Scientific Research Center in North Korea*. January 21, 2004.
- Hersh, Seymour. “Was Castro out of control in 1962?” *Washington Post*. October 11, 1987.
- IAEA.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V/2011/53-GC(55)/24. Vienna. IAEA. September 2, 2011.
- Kahlili, Reza. “Is Iran about to test a nuclear bomb in North Korea?” December 30, 2010. <<http://www.foxnews.com/opinion/>>.
- Nuland, Victoria. Department Spokesperson. Office of the Spokesperson. “Press Statement: U.S.-DPRK Bilateral Discussions.” Washington, D.C.. February 29, 2012. <<http://www.state.gov/r/pa/prs/ps/2012/02/184869.htm>>.
- Nuland, Victoria. Spokesperson. “Daily Press Briefing.” Washington, D.C.. May 14, 2012. <<http://www.state.gov/r/pa/prs/dpb/2012/05/189849.htm>>.
- Perry, William J..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12, 1999. <www.state.gov/www/regions/eap/991012_northkorea_rpt.html>.
- Pincus, Walter. “Obama administration may send U.S.-Russia arms treaty to Congress by late April.” *Washington Post*. March 30, 2010.
-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Tony Snow.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November 17, 2006.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11/print/20061117-16.html>>.
- Press Conference by the President. the Rose Garden/October 11, 2006. <<http://pierretristam.com/Bobst/library/wf-397.htm>>.
-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Hradcany Square, Prague, Czech Republic.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5, 2009. <<http://www.whitehouse.gov>>.
- Remarks by the President on the Announcement of New START Treaty.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March 26, 2010. <<http://www.whitehouse.gov>>.
- Remarks of Senator John Kerry on New Strategies to Meet New Threats. June 1, 2004. <http://www.johnkerry.com/pressroom/speeches/spc_2004_0601.html>.
- Remarks With G-8 Foreign Ministers After Their Ministerial Meetings.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Gatineau, Quebec, Canada, March 30,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0/03/139287.htm>>.
- Sanger, David. “North Koreans Unveil Vast New Plant for Nuclear Use.” *New York Times*. November 20, 2010.

- _____. “Pakistani tells of North Korean nuclear devices.” *New York Times*. April 13, 2004.
- _____. “U.S. said to weigh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New York Times*. May 18, 2006.
- _____ and Jim Yardley. “U.S. warns North Koreans about nuclear-weapon test.” *New York Times*. October 5, 2006.
- _____ and Thom Shanker. “Obama’s new nuclear strategy is intended as a message to Iran and North Korea.” *New York Times*. April 6, 2010.
- Sheridan, Mary Beth and Philip P. Pan. “United States and Russia reach nuclear arms control.” *Washington Post*. March 25, 2010.
- Smith, Jeffrey. “Pakistan’s nuclear-bomb maker says North Korea paid bribes for know-how.” *Washington Post*. July 7, 2011.
- _____ and Joby Warrick. “Pakistani scientist depicts more advanced nuclear program in North Korea.” *Washington Post*. December 28, 2009.
- Speech of Secretary of State Cyrus Vance at the 1978 UN 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 *UN document A/S-10/AC.1/30*.
- Union Calendar No. 335, 112TH CONGRESS, 2D SESSION H. R. 4310 [Report No. 112-479].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Documents. *S/1995/261*. The Russian Federation.
- _____. *S/1995/262*. The United Kingdom.
- _____. *S/1995/263*. The United States.
- _____. *S/1995/264*. France.

_____. S/1995/265. China.

Vinocur, John. “Who stands with Iran’s opposition?” *New York Times*. January 31, 2011.

Woolsey, James. “Too Much Mr Nice Guy.” *New York Times*. May 7, 2010.

Yates, Stephen and Christian Whiton. “Smarter North Korean diplomacy: talking to allies is more important than talking to Pyongyang.” *Wall Street Journal*. August 5, 2009.

“A worthy U.S.-Russia arms control treaty.” *Washington Post*. March 27, 2010.

“Administration’s remarks on the arms control treaty.” *New York Times*. March 26, 2010.

“Arms control’s new era.” *New York Times*. March 28, 2010.

“China, India, North Korea, and Russia possess nuclear weapons, while Iran is an aspiring nuclear power.”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ICA 2008-10D. *Strategic Implications of Global Health*. December 2008.

“Global Trend 2025: A Transformed World.” NIC 2008-003. November 2008. <<http://www.acus.org/publication/global-trends-2025-transformed-world>>.

“Joint Statement of ROK-U.S.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Meeting on the Occas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ffice of the Spokesman. U.S. Department of State. July 21, 2012. <<http://www.state.gov/r/pa/prs/ps/2010/07/144974.htm>>.

-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Washington, D.C. June 16, 2009.
- “Key Facts about the New START Treaty.”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March 26, 2010. <<http://www.whitehouse.gov>>.
- “*New Beginnings*” in the U.S.-ROK Alliance: Recommendations to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Korea Society and APARC at Stanford University. May 2010.
- “Nuclear warfare: conscientious objector.” *The Economist*. March 31, 2012.
- “Nuclear Weapons.” Federation of Atomic Scientists. 2011년 6월 24일. <www.fas.org/nuke/guide/india/nuke/>.
- “Pakistan Nuclear Weapons: A Brief History of Pakistan’s Nuclear Program.” Federation of Atomic Scientists. 2011년 4월 23일. <www.fas.org/nuke/guide/pakistan/nuke/>.
- “Renewing America’s Promis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Committee. August 29, 2008. <www.democrats.org>
- “Statemen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Vol. 38, No. 46, Monday, November 18, 2002. (Online from the Government Printing Office) <www.gpo.gov>.
- “The JOE: The Joint Operating Environment 2008: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oint Force.” United States Joint Forces Command, 2008. <<https://us.jfcom.mil/sites/J5/j59/default.aspx>>.

“The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PNIs) on tactical nuclear weapons at a glance.” *Arms Control Association*. 2009.
<<http://www.armscontrol.org/print/111>>.

“UN experts say North Korea is exporting ballistic missiles to Mideast and South Asia countries.” *Associated Press*. May 17, 2011.

<http://en.wikipedai.org/wiki/Boosted_fission_weapon>.

<http://en.wikipedai.org/wiki/Nuclear_weapon_design>.

<<http://www.britannica.com>>.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1/06/20010611-4.html>>.

부록

미국의 對韓 優待 産業 政策 에 關한 연구

〈부록 1〉

조·미 공동성명(1993.6.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정부급회담이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뉴욕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 제 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버트 엘 갈루치 국무성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북남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 전면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쌍방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우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1993년 6월 11일

뉴 욕

〈부록 2〉

조·미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문, 1994.10.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 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12일부 조미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경수로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 1)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 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 미합중국은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

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연합체를 조직한다. 이 국제연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된다.

- 미합중국은 연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시작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너지의 평화적 리용분야에서의 쌍무적 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2)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연합체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대용에너지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증유로 제공한다.
- 증유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톤 수준에 이르게 된다.

3)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너지 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는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 경수로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된다.
- 경수로대상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메가와트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폐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두 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한다.
 -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에너르기와 관련한 련관문제들과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대상으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련관문제들을 토의한다.
 -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폐연료의 보관 및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아간다.

- 1) 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3개월 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 2) 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령사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들을 개설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리행을 허용할 것이다.
 - 2) 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 3) 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핵관련 부분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담통보/403)을 완전히 리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대표단 단장
미합중국 순회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부록 3〉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1999.10.12)***

Unclassified Report by Dr. William J. Perry,
U.S.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 and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October 12, 1999

A North Korea policy review team, led by Dr. William J. Perry and working with an interagency group headed by the Counselor of the Department of State Ambassador Wendy R. Sherman, was tasked in November 1998 by President Clinton and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s to conduct an extensive review of U.S. policy toward the DPRK. This review of U.S. policy lasted approximately eight months, and was supported by a number of senior officials from the U.S. government and by Dr. Ashton B. Carter of Harvard University. The policy review team was also very fortunate to have received regular and extensive guidance from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senior policy advisors.

Throughout the review the team consulted with experts, both in and out of the U.S. government. Dr. Perry made a special point to travel to the Capitol to give regular status reports to Members of Congress on

* <http://www.state.gov/www/regions/eap/991012_northkorea_rpt.html>.

the progress of this review, and he benefited from comments received from Members on concepts being developed by the North Korea policy review team. The team also exchanged views with officials from many countries with interest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our allies, the ROK and Japan. The team also met with prominent members of the humanitarian aid community and received a wealth of written material, solicited and unsolicited. Members of the policy review team met with many othe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s well. In addition, the team traveled to North Korea this past May, led by Dr. Perry as President Clinton's Special Envoy, to obtain a first-hand understanding of the views of the DPRK Government.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North Korea Policy Review set forth below reflect the consensus that emerged from the team's countless hours of work and study.

The Need for a Fundamental Review of U.S. Policy

The policy review team determined that a fundamental review of U.S. policy was indeed needed, since much has changed in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1994 crisis.

Most important -- and the focus of this North Korea policy review -- are developments in the DPRK's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activities.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succeeded in verifiably freezing North Korean plutonium production at Yongbyon -- it stopped plutonium production at that facility so that North Korea currently has at most a small amount of fissile material it may have secreted away from operations prior to 1994; without the Agreed Framework, North Korea could have produced enough additional plutonium by now for a

significant number of nuclear weapons. Yet, despite the critical achievement of a verified freeze on plutonium production at Yongbyon under the Agreed Framework, the policy review team has serious concerns about possible continuing nuclear weapons-related work in the DPRK. Some of these concerns have been addressed through our access and visit to Kumchang-ni.

The years since 1994 have also witnessed development, testing, deployment, and export by the DPRK of ballistic missiles of increasing range, including those potentially capable of reaching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other significant changes as well. Since the negotiations over the Agreed Framework began in the summer of 1994, formal leadership of the DPRK has passed from President Kim Il Sung to his son, General Kim Jong Il, and General Kim has gradually assumed supreme authority in title as well as fact. North Korea is thus governed by a different leadership from that with which we embarked on the Agreed Framework. During this same period, the DPRK economy has deteriorated significantly, with industrial and food production sinking to a fraction of their 1994 levels. The result is a humanitarian tragedy which, while not the focus of the review, both compels the sympathy of the American people and doubtless affects some of the action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 unrelated change has com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ith the Presidency of Kim Dae Jung. President Kim has embarked upon a policy of engagement with the North. As a leader of great international authority, as our ally, and as the host to 37,000 American troops, the views and insights of President Kim are central to accomplishing U.S. security objectives on the Korean Peninsula. No

U.S. policy can succeed unless it is coordinated with the ROK's policy. Today's ROK policy of engagement creates conditions and opportunities for U.S. policy very different from those in 1994.

Another close U.S. ally in the region, Japan, has become mo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 in recent years. This concern was heightened by the launch, in August 1998, of a Taepo Dong missile over Japanese territory. Although the Diet has passed funding for the Light Water Reactor project being undertaken by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pursuant to the Agreed Framework, and the government wants to preserve the Agreed Framework, a second missile launch is likely to have a serious impact on domestic political support for the Agreed Framework and have wider ramifications within Japan about its security policy.

Finally, while the U.S. relationship with China sometimes reflects different perspectives on security policy in the region, the policy review team learned through extensive dialogue between the U.S. and the PRC, including President Clinton's meetings with President Jiang Zemin, that China understands many of the U.S. concerns about the deleterious effects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activities could have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ll these factors combine to create a profoundly different landscape than existed in 1994. The review team concurred strongly with President Clinton's judgment that these changed circumstances required a comprehensive review such as the one that the President and his team of national security advisors asked the team to conduct. The policy review team also recognized the concerns of Members of Congress that a clear path be charted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that there be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n this issue of great importance to our security. The review team shared these concerns and has tried hard to be responsive to them.

Assessment of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urse of the review, the policy team conferred with U.S. military leaders and allies, and concluded that, as in 1994, U.S. forces and alliances in the region are strong and ready. Indeed, since 1994, the U.S. has strengthened both its own forces and its plans and procedures for combining forces with allies. We are confident that allied forces could and would successfully defend ROK territory. We believe the DPRK's military leaders know this and thus are deterred from launching an attack.

However, in sharp contrast to the Desert Storm campaign in Kuwait and Iraq,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take place in densely populated areas. Considering the million-man DPRK army arrayed near the DMZ, the intensity of combat in another war on the Peninsula would be unparalleled in U.S. experience since the Korean War of 1950-53. It is likely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ersons -- U.S., ROK, and DPRK -- military and civilian -- would perish, and millions of refugees would be created. While the U.S. and ROK of course have no intention of provoking war, there are those in the DPRK who believe the opposite is true. But even they must know that the prospect of such a destructive war is a powerful deterrent to precipitous U.S. or allied action.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refore, dete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able on both sides, in military terms. While always subject to miscalculation by the isolated North Korean government,

there is no military calculus that would suggest to the North Koreans anything but catastrophe from armed conflict. This relative stability, if it is not disturbed, can provide the time and conditions for all sides to pursue a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ending at last the Korean War and perhaps ultimately leading to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ople. This is the lasting goal of U.S. policy.

However, acquisition by the DPRK of nuclear weapons or long-range missiles, and especially the combination of the two (a nuclear weapons device mounted on a long-range missile), could undermine this relative stability. Such weapons in the hands of the DPRK military might weaken deterrence as well as increase the damage if deterrence failed. Their effect would, therefore, be to undermine the conditions for pursuing a relaxation of tensions, improved relations, and lasting peace. Acquisition of such weapons by North Korea could also spark an arms race in the region and would surely do grave damage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s cover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 continuation of the DPRK's pattern of selling its missiles for hard currency could also spread destabilizing effects to other regions, such as the Middle East.

The review team,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urgent focus of U.S. policy toward the DPRK must be to end its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related activities. This focus does not signal a narrow preoccupation with nonproliferation over other dimensions of the problem of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rather reflects the fact that control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essential to the pursuit of a wider form of security so badly needed in that region.

As the United States faces the task of ending these weapons activities, any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must be formulated within three

constraining facts:

First, while logic would suggest that the DPRK's evident problems would ultimately lead its regime to change, there is no evidence that change is imminent. United States policy must, therefore, deal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it is, not as we might wish it to be.

Second, the risk of a destructive war to the 37,000 American service personnel in Korea and the many more that would reinforce them, to the inhabitants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South and North, and to U.S. allies and friends in the region dictate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 its objectives with prudence and patience.

Third, while the Agreed Framework has critics in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 and indeed in the DPRK -- the framework has verifiably frozen plutonium production at Yongbyon. It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successful discussions we had with the North earlier this year on an underground site at Kumchang-ni -- one that the U.S. feared might have been designed as a substitute plutonium production facility. Unfreezing Yongbyon remains the North's quickest and surest path to nuclear weapons. U.S. security objectives may therefore require the U.S. to supplement the Agreed Framework, but we must not undermine or supplant it.

Perspectives of Countries in the Region

The policy review team consulted extensively with people outside of the Administr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f countries in the region. These perspectives are summarized below.

Republic of Korea. The ROK's interests are not identical to those of the

U.S., but they overlap in significant ways. While the ROK is not a global power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 is less active in promoting nonproliferation worldwide, the ROK recognizes that nuclear weapons in the DPRK would destabilize deterrence on the Peninsula. And while South Koreans have long lived within range of North Korean SCUD ballistic missiles, they recognize that North Korea's new, longer-range ballistic missiles present a new type of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ROK thus shares U.S. goals with respect to DPRK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e South also has concerns, such as the reunion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and implementation of the North-South Basic Agreement (including reactivation of North-South Joint Committees). The U.S. strongly supports these concerns.

President Kim Dae Jung's North Korea policy, known as the "engagement" policy, marked a fundamental shift toward the North. Under the Kim formulation, the ROK has forsworn any intent to undermine or absorb the North and has pursued increased official and unofficial North-South contact. The ROK supports the Agreed Framework and the ROK's role in KEDO, but the ROK National Assembly, like our Congress, is carefully scrutinizing DPRK behavior as it considers funding for KEDO.

Japan. Like the ROK, Japan's interests are not identical to those of the U.S., but they overlap strongly. The DPRK's August 1998 Taepo Dong missile launch over the Japanese islands abruptly increased the already high priority Japan attaches to the North Korea issue. The Japanese regard DPRK missile activities as a direct threat. In bilateral talks with Japan, the DPRK representatives exacerbate historic animosities by repeatedly referring to Japan's occupation of Korea earlier in this

century. For these reasons, support for Japan's role in KEDO is at risk in the Diet. The government's ability to sustain the Agreed Framework in the face of further DPRK missile launches is not assured, even though a collapse of the Agreed Framework could lead to nuclear warheads on DPRK missiles, dramatically increasing the threat they pose. Japan also has deep-seated concerns, such as the fate of missing persons suspected of being abducted by the DPRK. The U.S. strongly supports these concerns.

China. China has a strong interest 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aware of the implications of increased tension on the peninsula. China also realizes that DPRK ballistic missiles are an important impetus to U.S. national missile defense and theater missile defenses, neither of which is desired by China. Finally, China realizes that DPRK nuclear weapons could provoke an arms race in the region and undermine the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Beijing, as a nuclear power, has an interest in preserving. For all these reasons the PRC concerns with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in many ways comparable to U.S. concerns. While China will not coordinate its policies with the U.S., ROK, and Japan, it is in China's interest to use its own channels of communication to discourage the DPRK from pursuing these programs.

The DPRK. Based on extensive consultation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experts around the world, a review of recent DPRK conduct, and our discussions with North Korean leaders, the policy review team formed some views of this enigmatic country. But in many ways the unknowns continue to outweigh the knowns. Therefore, we want to emphasize here that no U.S. policy should be based solely on conjectures about the perceptions and future behavior of the DPRK.

Wrapped in an overriding sense of vulnerability, the DPRK regime has promoted an intense devotion to self-sufficiency, sovereignty, and self-defense as the touchstones for all rhetoric and policy. The DPRK views efforts by outsiders to promote democratic and market reforms in its country as an attempt to undermine the regime. It strongly controls foreign influence and contact, even when they offer relief from the regime's severe economic problems. The DPRK appears to value improved relations with US, especially including relief from the extensive economic sanctions the U.S. has long imposed.

Key Findings

The policy review team made the following key findings, which have formed the basis for our recommendations:

1. DPRK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and continued development, testing, deployment, and export of long-range missiles would undermine the relative stability of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 precondition for ending the Cold War and pursuing a lasting peace in the longer run. These activities by the DPRK also have serious regional and global consequences adverse to vital U.S. interests. The United States must, therefore, have as its objective ending these activities.
2.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uld swiftly and surely win a secon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destruction of life and property would far surpass anything in recent American experience. The U.S. must pursue its objectives with respect to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n the DPRK without taking actions that would weaken deterrence or increase the probability of DPRK miscalculation.

3. If stability can be preserved through the cooperative ending of DPRK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related activities, the U.S. should be prepared to establish more n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PRK and join in the ROK's policy of engagement and peaceful coexistence.
4. Unfreezing Yongbyon is North Korea's quickest and surest path to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The Agreed Framework, therefore, should be preserved and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ith the Agreed Framework, the DPRK's ability to produce plutonium at Yongbyon is verifiably frozen. Without the Agreed Framework,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the North could reprocess enough plutonium to produce a significant number of nuclear weapons per year. The Agreed Framework's limitations, such as the fact that it does not verifiably freeze all nuclear weapons-related activities and does not cover ballistic missiles, are best addressed by supplementing rather than replacing the Agreed Framework.
5. No U.S. policy toward the DPRK will succeed if the ROK and Japan do not actively support it and cooperate in its implementation. Securing such trilateral coordination should be possible, since the interests of the three parties, while not identical, overlap in significant and definable ways.
6. Considering the risks inherent in the situation and the isolation, suspicion, and negotiating style of the DPRK, a successful U.S. policy will require steadiness and persistence even in the face of provocations. The approach adopted now must be sustained into the future, beyond the term of this Administration. It is, therefore, essential that the policy and its ongoing implementation have the broadest possible support and the continuing involvement of the Congress.

Alternative Policies Considered and Rejected

In the course of the review, the policy team received a great deal of valuable advice, including a variety of proposals for alternative strategies with respect to the security problems presented by the DPRK. The principal alternatives considered by the review team, and the team's reasons for rejecting them in favor of the recommended approach, are set forth below.

Status Quo. A number of policy experts outside the Administration counseled continuation of the approach the U.S. had taken to the DPRK over the past decade: strong deterrence through ready forces and solid alliances and limited engagement with the DPRK beyond existing negotiations on missiles, POW/MIA, and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related provisions of the Agreed Framework. These experts counseled that with the Agreed Framework being verifiably implemented at Yongbyon, North Korea could be kept years away from obtaining additional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Without nuclear weapons, the DPRK's missile program could safely be addressed within the existing (albeit to date inconclusive) bilateral missile talks. Thus, as this argument ran, core U.S. security objectives were being pursued on a timetable appropriate to the development of the threat, and no change in U.S. policy was required.

While there are advantages to continuing the status quo -- since to this point it has served U.S. security interests -- the policy review team rejected the status quo. It was rejected not because it has been unaccept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U.S. security interests, but rather because the policy team feared it was not sustainable. Aside from a failure to address U.S. concerns directly, it is easy to imagine circumstances that would bring the status quo rapidly to a crisis. For

example, a DPRK long-range missile launch,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an attempt to place a satellite in orbit, would have an impact on political support for the Agreed Framework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ven in the ROK. In this circumstance, the DPRK could suspend its own compliance with the Agreed Framework, unfreezing Yongbyon and plunging the Peninsula into a nuclear crisis like that in 1994. Such a scenario illustrates the instability of the status quo. Thus, the U.S. may not be able to maintain the status quo, even if we wanted to.

Undermining the DPRK. Others recommend a policy of undermining the DPRK, seeking to hasten the demise of the regime of Kim Jong Il. The policy review team likewise studied this possibility carefully and, in the end, rejected it for several reasons. Given the strict controls on its society impos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apparent absence of any organized internal resistance to the regime, such a strategy would at best require a long time to realize, even assuming it could succeed. The timescale of this strategy is, therefore, inconsistent with the timescale on which the DPRK could proceed with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ddition, such a policy would risk destructive war and would not win the support of U.S. allies in the region upon whom success in deterring such a war would depend. Finally, a policy of pressure might harm the people of North Korea more than its government.

Reforming the DPRK. Many other analysts sugges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promote the accelerated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of the DPRK along the lines of established international practice, hastening the advent of democracy and market reform that will better the lot of the North's people and provide the basis for the DPRK's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peaceful fashion. However much

we might wish such an outcome, success of the policy clearly would require DPRK cooperation. But, the policy team believ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ould strongly resist such reform, viewing it as indistinguishable from a policy of undermining. A policy of reforming, like a policy of undermining, would also take time -- more time than it would take the DPRK to proceed with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Buying” Our Objectives. In its current circumstance of industrial and agricultural decline, the DPRK has on occasion indicated a willingness to “trade” addressing U.S. concerns about its nuclear weapons activities and ballistic missile exports for hard currency. For example, the DPRK offered to cease its missile exports if the U.S. agreed to compensate it for the foregone earnings from missile exports. The policy review team firmly believed that such a policy of trading material compensation for security would only encourage the DPRK to further blackmail, and would encourage proliferators worldwide to engage in similar blackmail. Such a strategy would not, and should not, be supported by the Congress, which controls the U.S. government’s purse strings.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A Two-Path Strategy

A better alternative, and the one the review has recommended, is a two-path strategy focused on our priority concerns over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missile-related activities. We have devised this strategy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s of the ROK and Japan, and it has their full support. Indeed, it is a joint strategy in which all three of our countries play coordinated and mutually reinforcing roles in pursuit of the same objectives. Both paths aim to protect our key security interests; the first path is clearly preferable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we firmly believe, for the DPRK.

The first path involves a new,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to our negotiations with the DPRK. We would seek complete and verifiable assurances that the DPRK does not have a nuclear weapons program. We would also seek the 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 of testing, production and deployment of missiles exceeding the parameters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nd the complete cessation of export sales of such missiles and the equipment and technology associated with them. By negotiating the complete cessation of the DPRK's destabilizing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 programs, this path would lead to a stabl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ing the conditions for a more durable and lasting peace in the long run and ending the Cold War in East Asia.

On this pa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uld, in a step-by-step and reciprocal fashion, move to reduce pressures on the DPRK that it perceives as threatening. The reduction of perceived threat would in turn give the DPRK regime the confidence that it could coexist peacefully with us and its neighbors and pursue its ow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f the DPRK moved to eliminate its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hreats, the United States would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DPRK, relax sanctions that have long constrained trade with the DPRK and take other positive steps that w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DPRK.

If the DPRK were prepared to move down this path, the ROK and Japan have indicated that they would also be prepared, in coordinated but parallel track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DPRK.

It is important that all sides make contributions to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success in such far-ranging talks. The most important step by the DPRK is to give assurances that it will refrain

from further test firings of long-range missiles as we undertake negotiations on the first path. In the context of the DPRK suspending such tests, the review team recommended that the United States ease, in a reversible manner, Presidentially-mandated trade embargo measures against the DPRK. The ROK and Japan have also indicated a willingness to take positive steps in these circumstances.

When the review team, led by Dr. Perry as a Presidential Envoy, visited Pyongyang in May, the team had discussions with DPRK officials and listened to their views. We also discussed these initial steps that would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conducting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negotiations. Based on talks between with Ambassador Charles Kartman and DPRK Vice Foreign Minister Kim Gye Gwan in early September, the U.S. understood and expected that the DPRK would suspend long-range missile testing -- to include both No Dong and Taepo Dong missiles -- for as long as U.S.-DPRK discussions to improve relations continued. The DPRK subsequently announced a unilateral suspension of such tests while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d. Accordingly, the Administration has taken steps to ease sanctions. This fall a senior DPRK official will likely visit Washington to reciprocate the Perry visit and continue discussions on improving relations. Both sides have taken a bold and meaningful step along the first path. While it is only an initial step, and both sides can easily reverse this first step, we are hopeful that it begins to take us down the long but important path to reducing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first path devised by the review holds great promise for U.S. security and for stability in East Asia, and while the initial steps taken in recent weeks give us great hope, the first path depends on the

willingness of the DPRK to traverse it with us. The review team is hopeful it will agree to do so, but on the basis of discussions to date we cannot be sure the DPRK will. Prudence therefore dictated that we devise a second path, once again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with their full support. On the second path, we would need to act to contain the threat that we have been unable to eliminate through negotiation. By incorporating two paths, the strategy devised in the review avoids any dependence on conjectures regarding DPRK intentions or behavior and neither seeks, nor depends upon for its success, a transformation of the DPRK's internal system.

If North Korea rejects the first path, it will not be possible for the United States to pursue a new relationship with the DPRK. In that cas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uld have to take other steps to assure their security and contain the threat. The U.S. and allied steps should seek to keep the Agreed Framework intact and avoid, if possible, direct conflict. But they would also have to take firm but measured steps to persuade the DPRK that it should return to the first path and avoid destabilizing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Our recommended strategy does not immediately address a number of issues outside the scope of direct U.S.-DPRK negotiations, such as ROK family reunification, implementation of the North-South Basic Agreement (including reactivation of North-South Joint Committees) and Japanese kidnapping cases, as well as other key issues of concern, including drug trafficking. However, the policy review team believed that all of these issues should be, and would be, seriously addressed as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mprove.

Similarly, the review team believed the issue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is best addressed multilaterally. Many recommendations have

also been made with respect to Korean unification; but, ultimately, the question of unification is something for the Korean people to decide. Finally, the policy review team strongly believed that the U.S. must not withdraw any of its forces from Korea -- a withdrawal would not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but rather undermine the strong deterrence currently in place.

Advantages of the Proposed Strategy

The proposed strategy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1. Has the full support of our allies. No U.S. policy can be successful if it does not enjoy the support of our allies in the region. The overall approach builds upon the South's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 the ROK leadership suggested to Dr. Perry directly and to the President. It also puts the U.S. effort to end the DPRK missile program on the same footing with U.S. efforts to e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the Government of Japan recommended.
2. Draws on U.S. negotiating strengths. Pursuant to the recommended approach, the United States will be offering the DPRK a comprehensive relax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s which the DPRK perceives as threatening to it and which are applied, in its view, principally by the United States. This approach complements the positive steps the ROK and Japan are prepared to take.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will not offer the DPRK tangible "rewards" for appropriate security behavior; doing so would both transgress principles that the United States values and open us up to further blackmail.
3. Leaves stable deterrence of war unchanged. No changes are

recommended in our strong deterrent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 should not put its force posture on the negotiating table. Deterrence is strong in both direc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It is the North's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related activities that threaten stability. Likewise, the approach recommended by the review will not constrain U.S. Theater Missile Defense programs or the opportunities of the ROK and Japan to share in these programs; indeed, we explicitly recommended that no such linkage should be made.

4. Builds on the Agreed Framework. The approach recommended seeks more than the Agreed Framework provides. Specifically, under the recommended approach the U.S. will seek a total and verifiable end to all nuclear weapons-related activities in the DPRK, and the U.S. will be addressing the DPRK's long-range missile program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Agreed Framework. In addition, the U.S. will seek to traverse the broader path to peaceful relations foreseen by both the U.S. and the DPRK in the Agreed Framework, and incorporated in its text.
5. Aligns U.S. and allied near-term objectives with respect to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with our long-term objectives for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commended approach focuses on the near-term dangers to stability posed by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missile-related activities, but it aims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er run, as the U.S. seeks through the Four Party Talks. As noted above, the recommended approach also seeks to realize the long-term objectives of the Agreed Framework, which are to move beyond cooperation in the nuclear field to broader, more

normal U.S.-DPRK relations.

6. Does not depend on specific North Korean behavior or intent. The proposed strategy is flexible and avoids any dependence on conjectures or assumptions regarding DPRK intentions or behavior -- benign or provocative. Again, it neither seeks, nor depends upon, either such intentions or a transformation of the DPRK's internal system for success. Appropriate contingencies are built into the recommended framework.

Key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context of the recommendations above, the review team offered the following five key policy recommendations:

1. Adopt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to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programs, as recommended by the review team and supported by our allies in the region. Specifically, initiate negotiations with the DPRK based on the concept of mutually reducing threat; if the DPRK is not receptive, we will ne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our security and those of our allies.
2. Create a strengthened mechanism within the U.S. Government for carrying out North Korea policy. Operat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incipals Committee and Deputies Committee, a small, senior-level interagency North Korea working group should be maintained, chaired by a senior official of ambassadorial rank, locat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to coordinate policy with respect to North Korea.

3. Continue the new mechanism established last March to ensure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OK and Japan. The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 -- established during this policy review and consisting of senior officials of the three governments -- is charged with managing policy toward the DPRK. This group should meet regularly to coordinate negotiating strategy and overall policy toward the DPRK and to prepare frequent consultations on this issue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OK President and Japanese Prime Minister. The U.S. delegation should be headed by the senior official coordinating North Korea policy.
4. Take steps to create a sustainable, bipartisan, long-term outlook toward the problem of North Korea. The President should explore with the majority and minority leaders of both houses of Congress ways for the Hill, on a bipartisan basis, to consult on this and futur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DPRK. Just as no policy toward the DPRK can succeed unless it is a combine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 policy review team believes no strategy can be sustained over time without the input and support of Congress.
5. Approve a plan of action prepared for dealing with the contingency of DPRK provocations in the near term, including the launch of a long-range missile. The policy review team notes that its proposed responses to negative DPRK actions could have profound consequences for the Peninsula, the U.S. and our allies. These responses should make it clear to the DPRK that provocative actions carry a heavy penalty. Unless the DPRK's acts transgress provisions of the Agreed Framework, however, U.S. and allied actions should not themselves undermine the Agreed Framework. To do so would

put the U.S. in the position of violating the Agreed Framework, opening the path for the DPRK to unfreeze Yongbyon and return us to the crisis of the summer of 1994.

Concluding Thoughts

The team's recommended approach is based on a realistic view of the DPRK, a hardheaded understanding of military realities and a firm determination to protect U.S.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We should recognize that North Korea may send mixed signals concerning its response to our recommended proposal for a comprehensive framework and that many aspects of its behavior will remain reprehensible to us even if we embark on this negotiating process. We therefore should prepare for provocative contingencies but stay the policy course with measured actions pursuant to the overall framework recommended. The North needs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certain forms of provocative behavior that represent a direct threat to the U.S. and its allies and that we will respond appropriately.

In this regard, it is with mixed feelings that we recognize certain provocative behavior of the DPRK may force the U.S. to reevaluate current aid levels.

Finally, and to close this review, we need to point out that a confluence of events this past year has opened what we strongly feel is a unique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U.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There is a clear and common understanding among Seoul, Tokyo, and Washington on how to deal with Pyongyang. The PRC's strategic goals -- especially on the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related missile delivery systems -- overlap with those of

the U.S. Pyongyang appears committed to the Agreed Framework and for the time being is convinced of the value of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 However, there are always pressures on these positive elements. Underlying tensions and suspicions have led to intermittent armed clashes and incidents and affect the political environment. Efforts to establish the diplomatic momentum necessary to withstand decades of hostility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and eventually stall. Nevertheless, the year 1999 may represent, historically, one of our best opportunities to deal with key U.S. security concern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some time to come.

〈부록 4〉

조·미 공동 코뮤니케(2000.1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엄 클린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 특사와 일행은 매덜레인 알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헨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 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

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무역 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싸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싸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싸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 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 있는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사이의 북남대화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톤 대통령과 미국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윌리엄 클린톤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틸레인 알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 싱 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 2005.9.19)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겐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 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

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합의사항(2·13 합의, 2007.2.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 I.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 II.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이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IV.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 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V.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VI.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VII.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II조 5항 및 IV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 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합의사항(10·3 합의, 2007.10.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I. 한반도 비핵화

- 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 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 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 ②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 ③ 북한은 이어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II. 관련국간 관계 정상화

- ①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 ②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 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t 중유 포함)이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 전술핵 재배치 관련 부분*

TITLE X: GENERAL PROVISIONS

Subtitle A: Financial Matters

SEC. 1064. REPORT ON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 SENSE OF CONGRESS. -Congress-

(1) supports steps taken by the President to-

- (A) reinforce the security of the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 (B) strengthen the deterrent cap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illegal and increasingly belligerent actions of North Korea; and

(2) encourages further steps, including such steps to deploy additional conventional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b) REPORT.-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of Defens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ubmit to the congressional defense committees a report on deploying additional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s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to ensure the presence of a robust

* *Union Calendar No. 335, 112TH CONGRESS, 2D SESSION H. R. 4310*
[Report No. 112-479], pp. 438~439.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ility, including a forward-deployed nuclear capability, of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th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s of North Korea and the other belligerent actions North Korea has made agains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The report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any bilateral agreements, basing arrangements, and costs that would be involved with such additional deployments.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의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외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0,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리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경제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ark Young Ho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연구총서 12-01

www.kinu.or.kr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